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

nara.kdi.re.kr

2016 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특집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ISSUE**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NOW** 브렉시트, 신자유주의 종언을 고하나? **집중토론** 사상 최저 기준금리, 향후 통화 · 재정정책 어떻게? **경제정책해설** 노화 뇌질환 특화 뇌지도 만든다 / 공공과 민간의 윈윈 모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중심으로 개편 **그들은 바쁘다 시즌2**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경제학 소믈리에** 남녀평등과 가계소득 불평등의 이상한 공존 **인사이트** 왜 그걸 못 참느냐고? **규제다이어트** 핵심 · 덩어리 규제 걷어내고 미래 신산업 육성할 새로운 규제시스템 구축 **세계는 지금** OECD: 포용적 성장 위한 성인 역량개발 어떻게? / EU: EU 식품시장,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IT 분야 강자로 떠오른 루마니아 **시평** 주택시장과 정부의 역할

08
9 771227 803309
ISSN 1227-8033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 가정에서의 여성의 삶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
(2016년 기준)

547만8천가구

전체 가구의 28.9% 차지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30.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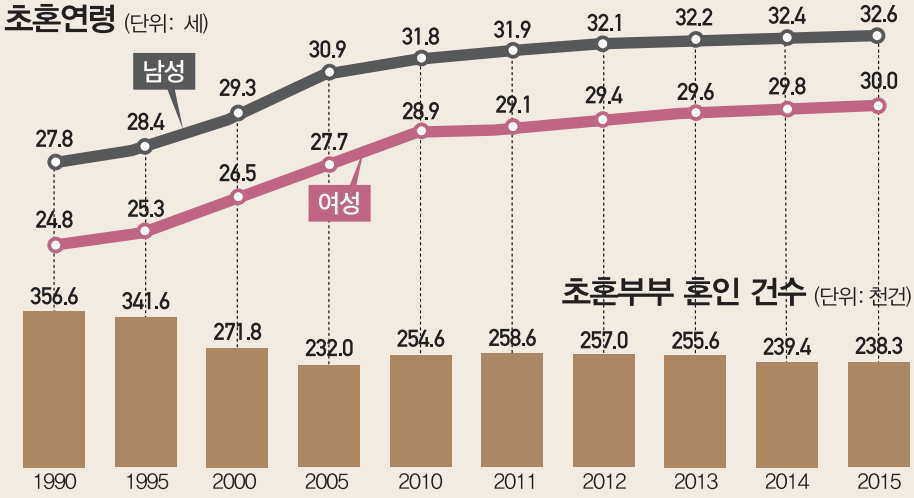
남성 32.6세

합계출산율

1.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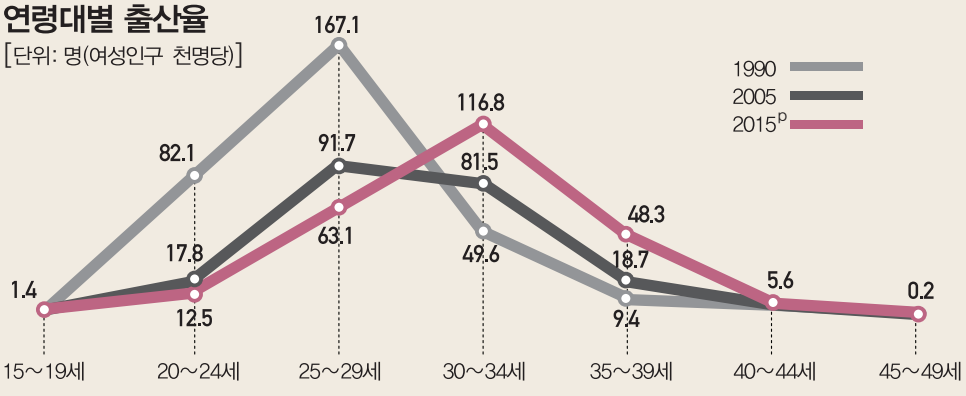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여성 1명당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초혼연령 (단위: 세)



초혼부부 혼인 건수 (단위: 천건)

연령대별 출산율
[단위: 명(여성인구 천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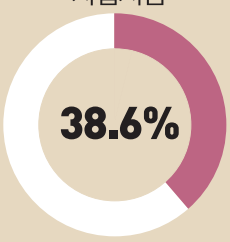
2.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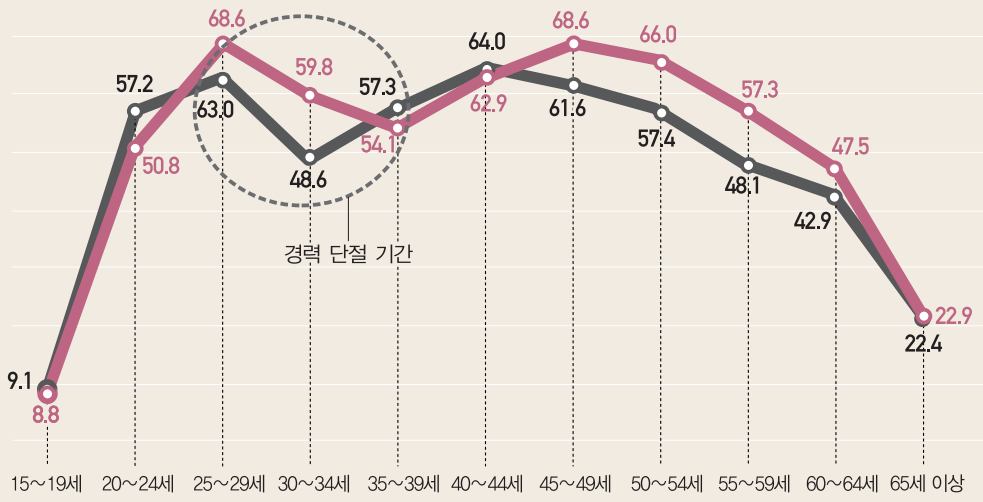
여성 고용률	여성 실업률	여학생 대학진학률	여성공무원 비율
49.9% (남성 71.1%)	3.6% (남성 3.7%)	74.6% (남학생 67.3%)	43.9% (4급 11.3%, 3급 5.3%, 고위공무원 3.4%)

공무원 채용시험 여성합격자 비율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단위: %) 2005 2015



자료: 통계청

나라경제

2016. 8 [제27권 8호 통권 309호]

나라경제는 **KDI**와 **15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김준경 KDI 원장
편집인	고형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이재열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신준호 창조정책담당관
	미래창조과학부 박윤규 기획재정담당관
	외교부 김윤정 다자경제기구과장
	행정자치부 김장호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공형식 창조행정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강동윤 홍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김호성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배금주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황석태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김흥진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김성범 기획재정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남동우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허영락 기획재정부 창조정책담당관실
편집장	유성임
취재·편집기자	권기대, 허지혜, 김정인
배포	고광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ISSN 1227-8033 8
구독문의	044-550-4656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6년 7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27권 8호(통권 309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기사문의	044-550-4634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인쇄	(주)성우애드컴
사진	이래스튜디오

*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 08 CONTENTS



07 Special Theme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08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으로 경기 · 고용 리스크 적극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10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 · 일자리 창출 본격화**
박윤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12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김장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14 **관광으로 내수 살리고, 콘텐츠로 성장동력 키우고**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16 **맞춤형 복지로 민생안정 도모…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기여**
배금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18 **위기를 기회로,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황석태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20 **서비스산업,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육성**
강기룡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26



40



50

22

ISSUE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23 전 세계에 부는 전기차 바람… 성장세 내연기관차보다 빨라
박태준 전자신문 산업경제부 수석기자

24 1회 충전으로 500㎞ 달리는 전기차 나온다
임근희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25 지원금, 세금혜택 등 통해 구매 지원… 전기차 2,700대, 충전기 2,489기 보급 성과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26 자동차 가치 재정의 되고 새로운 산업판도 형성될 것
김경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7 中, '양이 질을 변화'시키도록 강력한 보급정책 수행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8 전기차 사면 최대 2,200만원 지원
박재원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29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충전기 3천기 보급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30 "강력한 운행상의 인센티브 주고,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40

그들은 바쁘다 시즌2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40 사이버 공간의 개인정보 지킴이
권경하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무관

34

집중토론

사상 최저 기준금리, 향후 통화 · 재정정책 어떻게?

34 "한은의 시장소통 노력 긍정적… 미래 불안감 줄여주는 재정 역할 기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연구위원

47

NOW

브렉시트, 신자유주의 종언을 고하나?

48 전쟁의 상흔에서 '화합의 유럽' 이끈 EU… 브렉시트가 '해체' 불붙여
이종원 한국유럽학회 이사장

50 브렉시트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52 EU 해체는 자해행위, 문제점 보완할 개혁방안 모색할 것
김면회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6

경제정책해설

56 **노화 뇌질환 특화 뇌지도 만든다**
권석민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장

58 **대량 소비시장 확대로 양잠산업 성장 가속화**
홍성진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60 **공공과 민간의 윈윈 모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62 **투명한 반려동물 유통체계 세운다**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

64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중심으로 개편**
박용순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장

68

세계는 지금

68 **OECD: 포용적 성장 위한 성인 역량개발 어떻게?**
이주희 주OECD대표부 참사관

71 **EU: EU 식품시장,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조백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농무관

Column

02 **INFOGRAPHIC**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3 **꽃보다 아빠**
아들이 커갈수록
정민승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38 **인사이트**
왜 그걸 못 참느냐고?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43 **KDI 포커스**_「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중국 반독점법 강화, 위협일까? 기회일까?

44 **소비자 정보**_프랜차이즈 치킨 품질 비교 정보
제품별 캡사이신, 나트륨 등 영양성분 및 중량 차이 보여
김보경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주임연구원

55 **혁신 스타트업!**
한국 스타트업에 M&A 제안은 '하늘의 별따기'?!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66 **경제학 소믈리에**
남녀평등과 가계소득 불평등의 이상한 공존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75 **정남구 기자의 도시농부**
미국 선녀벌레의 습격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76 **경제뉴스 행간 읽기**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할까?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78 **규제다이어트**_국토교통부
핵심 · 덩어리 규제 걷어내고 미래 신산업 위한 새 규제시스템 구축
김동현 국토교통부 기업애로해소팀장

80 **우리말 바로 쓰기**
구름을 나타내는 예쁜 우리말들
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81 **스마트 세상**
무더운 여름, 극심해지는 스트레스를 간단하게 해소하는 방법
이우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82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_루마니아
IT 분야 강자로 떠오른 루마니아
김민정 KOTRA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무역관 부관장

84 **일본 건축기행**
일본 국민작가를 위한 기념관, 시바 료타로 기념관
최우용 건축가

86 **시평**
주택시장과 정부의 역할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KDI 나라경제**를 입력한 뒤
〈KDI 나라경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최신 경제동향과 주요 경제정책 등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E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16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걱정 반 기대 반의 출발선에 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 양극화, 청년실업….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불안정해진 대외여건의 악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미국, 유럽 등이 세계적 저성장의 돌파구로 신산업 발전을 채택한 지금
우리 경제도 신발끈을 새롭게 묶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책이 마련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제적인 구조개혁과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력 제고 · 리스크 관리 양쪽 모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bhkim@mosf.go.kr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으로 경기 · 고용 리스크 적극 대응

추경 등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

2015년 12월 16일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재정 조기집행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임시공휴일 지정 등 경기 보완을 적극 추진했으며, 일부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크라우드 펀딩 확산 등 공공 · 금융부문 중심으로 구조개혁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제적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성장 · 일자리 창출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산업개혁도 새롭게 천명해 추진하고 있다.

〈그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 · 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으며 대내외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활력이 미약해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수출 부진의 영향이 투자 위축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 저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등에 의한 일시적 소비조정이 추가 하방요인이 될 우려도 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도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미국 ·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IMF가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4%에서 3.2%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경제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브라질 · 러시아 등 자원국 · 신흥국 중심의 불안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 일자리 창출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 · 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 · 고용 위축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고 일자리 위축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다.

첫째, 추경 등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없기 때문에 정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 소비 ·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소비 · 투자 · 수출 각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 인센티브를 제공해 친환경 소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해 전기차 · 수소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 투자 시 배출권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민간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 부문 수출지원을 효율화하고 프리미엄 소비재, 신선수산물 등 유망품목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등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원도급업체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 · 제재를 강화하는 등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해 나갈 것이다. 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등 서민 ·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도 경감하겠다. 또한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16조원에 이르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구조조정에 대응한 고용지원 · 지역경제 대책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구조개혁 가속화로 일자리 창출능력 근본적으로 제고

세계경제 저성장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는 공공 · 노동 · 교육 ·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신산업 육성 · 기업 구조조정 중심의 산업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미래 성장 ·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이다.

첫째, 4대 구조개혁은 핵심법안 입법을 지속 추진하면서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동력을 재점화할 것이다.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에너지 · 환경 ·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 기능조정 계획도 마련할 것이다. 노동개혁 4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2주기(2017~2019년) 대학 구조개혁방안 마련,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강화 등으로 대학정원 조정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은행 본인가 및 거래소 지주회사제도 도입 등으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둘째, 기업 구조조정은 현안기업의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안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 채권단 중심의 시장원리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 ·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 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회사채시장 개선방안 등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산업개혁의 완성을 위해 신산업이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정부는 시급성 ·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11개 유망 신산업 · 신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을 집중 지원해 2018년까지 계획된 8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국유재산 등 용지규제 개선 등으로 규제장벽을 제거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 · 실물경제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국내외 경제 · 금융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그간 점검해온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시성 있게 외환 ·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등 대내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가 구조조정 본격화 등에 따른 경기 · 고용 위축을 보완하면서 우리 경제는 2016년에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2.8% 성장하고 2017년에는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윤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yunkyu85@korea.kr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 · 일자리 창출 본격화

하반기에는 '지능정보사회 추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 · 관의 연구역량과 데이터를 결집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주요 기업 주도로 설립 ·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지난해까지 구축을 완료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지원 등의 기본 기능에 더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허브 등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으로서 역할 강화

10대 미래 성장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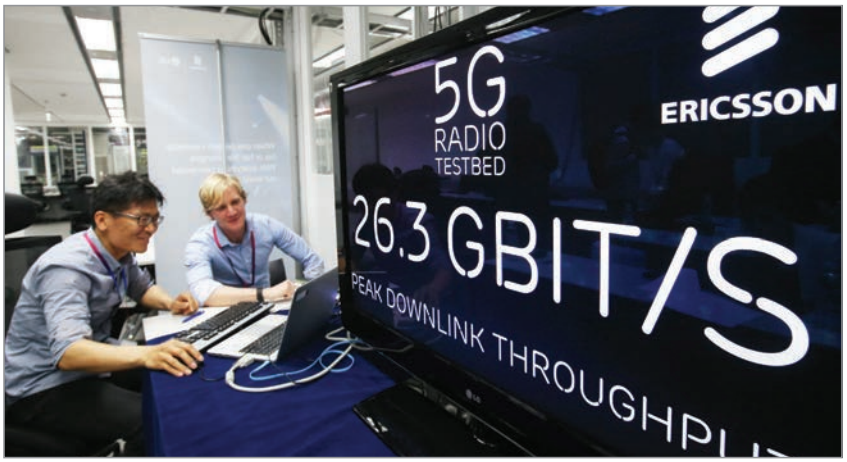
1. 5G 이동통신
2. 스마트자동차
3. 실감형 콘텐츠
4. 착용형 스마트기기
5. 지능형 사물인터넷
6. 지능형 반도체
7. 고성능 무인기
8. 지능형 로봇
9. 빅데이터
10. 융복합소재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도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과 유망 신산업 발굴 · 육성을 집중 지원해 나갈 것임을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능정보,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 신기술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 육성을 활발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산업화 속도 높은 10대 분야 우선 집중 지원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인 지능정보기술 선점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지능정보사회 민 · 관 합동 간담회'에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해,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응용서비스 발굴 · 실증을 본격화하고 전문인력과 데이터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신산업 · 신시장을 창출하고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사회 추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 · 관의 연구역량과 데이터를 결집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주요 기업 주도로 설립 ·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기존에 선정했던 19대 미래 성장동력 중 산업화 속도가 높은 5G 이동통신 · 스마트자동차 · 실감형 콘텐츠 · 착용형 스마트기기 · 지능형 사물인터넷 · 지능형 반도체 · 고성능 무인기 · 지능형 로봇 · 빅데이터 · 융복합소재 등 10대 분야를 추려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신산업 분야는 민간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실증형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창조경제박람회 등을 통해 신기술을 시연 · 전시해 국민이 해당 분야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화에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중장기 R&D와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유망 신산업과 신기술을 선별해 적극 투자하고, 관련 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



지난 5월 12일 경기도 안양시 에릭슨엘지 안양연구소에서 관계자들이 5세대(5G) 무선 통신장비 시제품을 국내 첫 시연하고 있다.

도록 법령 · 지침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해 나가려 한다. 아울러 신산업 R&D를 추진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장벽 개선에도 집중한다. 특히 지역 성장을 이끌어 나갈 신산업이 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규제프리존'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혁신센터는 창업지원 등의 기본 기능에 더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허브 등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혁신센터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성공사례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중앙부처 · 공공기관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분야별 IR기회를 제공하는 등 1:1로 밀착 지원하는 한편,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센터 간 우수상품 공동 발굴, 국내 판로 다양화, 해외 판로 개척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한 혁신센터 전담기업이 지역 전략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신기술 · 신산업에 대한 실증 및 시험 시 유관부처 사업 매칭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센터마다 설치된 고용존을 통해 청년층에 기업 일자리 매칭과 함께 교육 · 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간다. 이러한 고용지원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알리기 위해 매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채용의 날'을 개최하고, 주요 사업의 취업연계 실적도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7월 말에는 한류행사와 연계한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를 열어 우리의 창조경제 성과를 대외에 알리고 유망 벤처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촉진하고자 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통해 새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정착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먼저, 관계부처가 근거 법령 미비로 신규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에 임시허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허브' 기능을 기존의 K-ICT 빅데이터센터와 공공데이터 활용센터에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홈케어, 제품 공급-수거-안전처리 서비스, 의료 · 교육 빅데이터 구축 등 이른바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6년 전체 정부 R&D 대비 3%에서 2021년 6%로 2배가량 확대해 나간다.

대표적인 서비스업 분야인 소프트웨어산업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 확산, 지능정보산업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시장 창출 등을 본격화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등급체계와 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대책 정비도 병행한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 재난대응 · 투자자문 등 첨단 서비스 창출은 물론,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선 · 제조 · 농림수산업 등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융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더해 정부가 인정하는 '고용 창출 우수기업'이 정부 R&D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에는 미래부가 출범 이후 지속 추진해 온 통신비 부담경감 대책의 일환인 '알뜰폰시장 활성화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납입 감면기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알뜰폰사업자가 주요 이동통신사의 무선망을 도매로 제공받을 수 있는 도매제공의무제도를 3년 연장하고 통신망 이용대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미래부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최근 브렉시트로 불안이 가중된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면역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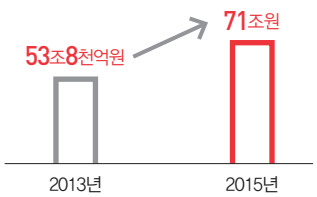
김장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jangho2020@korea.kr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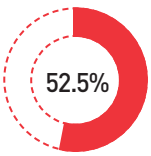
시 · 군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 · 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시 · 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 도내 시 · 군에 재배분하는 방안 추진

지방세 규모의 빠른 신장



2016년 재정자립도



2011년 이후 최고치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국가재정의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소비세 6%p 확대,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매년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그 결과 올해 재정자립도는 2011년 이후 최고치인 52.5%를 기록했고, 2013년 53조8천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불과 2년 만인 2015년에는 71조원으로 신장되는 등 지방재정의 여건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총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까지 나고, 124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지방세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전환으로 2015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특정 시 · 군에 편중되고 화성 · 연천 간 법인지방소득세 격차가 2014년 154배에서 2015년 325배로 확대되는 등 지역 간 세수 격차도 확대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 · 군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 개선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5월 23일에는 전국 시 · 도 및 시 · 군의 부단체장과 재정세제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로 전환 시 지자체 기업유치효과 강화 기대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은 정부 24+1 핵심개혁과제 중 4대 구조개혁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전국에 고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 · 군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 · 군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한다. 시 · 군 조정교부금이란 도 내 시 · 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지방

재정법」 제29조)으로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 · 군에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제도 취지와 달리 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돼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징수실적 반영비율은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수원 ·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배분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15년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 2조 6천억원의 52.6%인 1조4천억원을 이들 6개 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특례를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에 따라 교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배분 특례가 폐지된다면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 · 군에 약 5천억원의 재원이 고르게 배분돼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 · 군 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될 것이다.

둘째, 시 · 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시 · 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 도 내 시 · 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3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세액공제 · 감면정비 등에 따라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총 1조3천억원 증가했는데, 독립세 전환 효과가 일부 시 · 군에 편중되는 등 지자체 간 세수격차가 심화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세를 운영 중으로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했고, 이를 통해 과거 재산세 세수 최고-최저 구 간 격차가 14.8배에서 5.3배로 완화된 사례가 있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은 해당 시 · 군 이외에 도의 세제지원과 인근 시 · 군의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전환된다면 도와 시 · 군 간 협조체계가 강화돼 지자체의 기업유치 관련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자부는 이번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행자부 장관이 불교부단체 시장과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고 꾸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 군 조정교부금 개선은 올해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법률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5일 경북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지방재정발전 세미나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 행정자치부)

재정충격 고려해 우선배분 특례 3년 동안 단계적 조정

이러한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방안 외에도 경기가 좋아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해당 지자체가 재정악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고, 지자체 행사 · 축제를 효율화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정부의 제도개편안에 대해 재정감소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정 지역에 대한 재원편중 구조의 개선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에는 경기도 불교부단체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돼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조성재원은 오히려 줄어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전국에 고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형평화를 위한 개선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 · 군 조정교부금제도 개편에 따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충격을 고려해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00년 동안 만석꾼의 부를 지켜온 '경주 최부자' 가문은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었음에도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오랫동안 가문과 부를 유지했다. 눈앞에 놓인 단기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이 지나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됐다. 지방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건전한 재정의 토대 위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최부자 가문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문화체육관광부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hskong@korea.kr

관광으로 내수 살리고, 콘텐츠로 성장동력 키우고

지난해까지 각각 진행됐던 대규모 관광 · 할인행사인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합 개최 예정

게임, 테마파크, 영화 · 영상 · 드라마, K-POP, 관광 등 시장성 · 수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핵심기술 개발(R&D), VR형 스토리, 콘텐츠 개발, 테스트, 유통 등 종합지원 프로젝트 추진

누구나 기다리는 여름 휴가시즌이다. 올여름에는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여행을 통해 우리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가족과 만끽하고 지역문화를 재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지역과 이웃들의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내수진작에도 기여한다면 일석삼조의 더할 나위 없는 유익한 여름휴가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것을 권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거제와 울산을 휴가지로 추천했다. 거제 해금강과 울산 십리대숲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리나라엔 숨어 있는 보석과도 같은 이런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발굴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어촌', '시티관광' 등 테마별로 숨은 보석과도 같은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또 'K-스마일 캠페인' 추진, 스마트 안내체계 등 안내체계 개선과 불법 교통 · 숙박 집중단속을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에도 주력할 것이다.

글로벌 명품 쇼핑관광축제로의 첫 단추, 'Korea Sale FESTA'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

〈올여름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 지역〉

어촌관광(7월)

'어촌이 있는 해변 풍경'(6월 23일 발표)

– 경기 안산 탄도마을, 강원 강릉 소돌마을, 전북 고창 구시포항, 전남 여수 달천항, 충남 태안 어은돌, 경북 울진 기성해변

시티관광(8월)

'도시에서 만난 휴식'

– 대전 장태산휴양림, 광주 환벽당,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충북 청주 연꽃마을, 전남 목포 갓바위지구



사진은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마을 안근의 아들바위공원에서 기암괴석을 감상하는 아이들. 소돌마을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올여름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 지역이다.(사진 제공: 한국관광공사)

객은 전년 동기에 비해 21%나 증가한 약 810만명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관광콘텐츠 확충과 관광시장 다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올해 1,650만명의 외래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까지 각각 진행됐던 대규모 관광 · 할인행사인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처음으로 통합해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아쉬웠던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한층 발전된 쇼핑관광축제를 목표로 한다. 유통업체 이외에 제조업체 · 온라인 쇼핑몰 등도 참여해 할인품목 · 할인율을 확대하고, 한류를 활용해 볼거리, 즐길 거리도 늘릴 계획이다.

축제명칭은 'Korea Sale FESTA'로 대국민공모를 통해 결정됐는데, 'Korea'는 한국을 대표하는 행사임을, 'Sale'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상품 · 관광 · 문화를 모두 다 판매하는 세일행사를, 'FESTA'는 쇼핑을 비롯해 먹거리, 공연 등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의미한다. 명칭에 걸맞은 명품 쇼핑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유통 · 제조 · 관광), 문화계가 합심해 내실 있게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쇼핑관광축제뿐만 아니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외여행 중 '뉴욕시티패스', '스위스 트래블패스', '오사카 주유패스'를 이용하면서 편리하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정기간 버스, 지하철 등 통합이용이 가능한 '교통패스', 주요 관광지 내에서 숙박 · 음식점 등 할인이용이 가능한 '시티패스'와 같은 '지역관광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별 관광객도 지역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외국인 예약시스템(웹사이트, 모바일 앱 및 무인기)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시장다변화를 위해 세계 관광시장의 큰 손인 무슬림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테러와 무관한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 확대, 식당 · 숙소, 호텔 내 기도소, 세족실 등 편의시설 확대도 추진한다. 그리고 무슬림 대상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콘텐츠로 선도하는 VR산업 생태계 구축

올해 ICT산업의 최대 화두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이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의 설립자 주커버그는 "가상현실은 차세대 소셜 플랫폼이 될 것이며, 가상현실을 통해 서로 다른 장소에 있어도 같은 광경과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시장조사전문기관 디지-캐피털(Digi-Capital)에 따르면 가상현실 시장은 2016년 38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1,400억달러로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그리고 이 시장의 성패는 바로 콘텐츠에 달려 있다. 전문조사기관 트랙티카(Tractica)는 2017년까지 가상현실 시장에서 콘텐츠의 비중은 3분의 1 정도지만 2020년이 되면 전체 시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문체부에서도 가상현실 콘텐츠 공급을 통해 가상현실산업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게임, 테마파크, 영화 · 영상 · 드라마, K-POP, 관광 등 시장성 · 수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핵심기술 개발(R&D), VR형 스토리, 콘텐츠 개발, 테스트, 유통 등을 종합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리고 일산 빛마루에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가상현실 특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가상현실 콘텐츠는 국내 최대 콘텐츠 소비 · 유통공간으로 조성 중인 '케이-컬처밸리(K-Culture Valley)'에 공급된다. 올해 5월 경기도 일산에서 기공식을 한 케이-컬처밸리는 테마파크 · 융복합 공연장 · 숙박 · 쇼핑시설로 구성된 축구장 46배 규모의 한류문화복합단지다.

하반기에는 VR뿐만 아니라 장르별 전략적 육성방안들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7월에는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8월에는 음악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자출판 분야도 보안문제 해결 · 플랫폼 등 유통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내에 내놓기 위해 준비중이다.

13년 만에 찾아온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후속작 〈도리를 찾아서〉가 〈주토피아〉를 제치고 미국 박스오피스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올해 최고 흥행 애니메이션이 됐다고 한다. 재미뿐만 아니라 교훈적인 내용도 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긍정의 힘'이다. 주인공 도리는 자신의 한계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한탄하지 않고 어려움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면 돌파한다. 그 방법은 계속 헤엄치는 것이다. 전작 〈니모를 찾아서〉에서도 도리는 반복해서 "계속 헤엄쳐!"를 말했고, 그 한마디가 니모를 찾는 결정적인 힘이 됐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주저하며 위기에 처해 있다. 브렉시트 등 국제정세는 복잡하고 경제 대외여건은 녹록지 않으며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동향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도사리며 언제든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눈앞에 닥친 파도가 높고 험하지만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시련들을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그리고 좀 더 창의성을 발휘하며 계속 헤엄쳐 나간다면 우리는 보다 탄탄하고 견실한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문화에서 가장 먼저 이런 경제 도약의 청신호를 볼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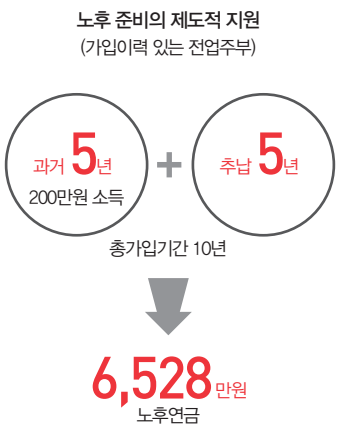


배금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gjbae@korea.kr

맞춤형 복지로 민생안정 도모…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기여

맞춤형 보육의 목적은 12시간을 이용하는 종일반과 6시간을 이용하는 맞춤반에 대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둬 종일반 영유아 양육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

6시간 운영하는 맞춤반 지원비를 12시간 운영하는 종일반 대비 80% 이상으로 하고, 영유아 1인당 지원보육료를 제도개선 이전과 대비해 6% 인상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유럽발 세계경제 리스크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하반기 국내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구조개혁이 가속화되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 서민과 약자들의 삶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민생안정 정책들이 긴요해진다.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 역시 이러한 여건에 맞춰 재정립되고 강조점이 주어졌다.

맞춤형 보육 전면 실시로 영유아 양육여건 개선

먼저, 서민 의료비 지출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과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본인의 연간 부담액은 상한이 있다. 본인부담 상한은 최상층 10분위의 경우 연간 500만원, 가장 아래 계층인 1분위는 연간 120만원으로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두고 설계돼 있다. 서민 · 중산층의 효과가 크도록 6~10분위는 현행을 유지하되, 2~3분위는 150만원, 4~5분위는 200만원인 현재의 2~5분위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식이 검토된다. 대략 20만~25만명이 1인당 30만~50만원을 추가 환급받으면 총 1천억원 정도의 서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내년도의 건강보험료율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된다. 2016년 현재 보험료율은 6.12%(2014년 5.99%, 2015년 6.07%)다. 보험료는 사회적 합의체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조응해 동결이 결정됐다.

두 번째는 맞춤형 보육이다. 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하고 국가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보육료(0세반 77만8천원, 1세반 53만7천원, 2세반 41만3천원)를 일괄 지원했다. 그러다 보니 오후 서너 시에 많은 영유아가 귀가하고 나면 종일 남아 있는 일부 영유아가 눈치를 보는 기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전면 실시 중이다. 맞춤형 보육의 목적은 12시간을 이용하는 종일반과 6시간을 이용하는 맞춤반에 대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둬 종일반 영유아 양육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보육료 수입 변화로 재정여건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맞춤반 지원비를 종일반 대비 80% 이상으로 하고, 영유아 1인당 지원보육료를 제도개선 이전과 대비해 6% 인상했다. 맞춤형 보육이 본



맞춤형 보육이 본격 가동되면 하루 종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는 부모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사진) 지난 7월 21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옥상텃밭에서 수박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격 가동되면 하루 종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는 부모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 소득관리 등 노후생활 지원강화 대책이다. 지난 7월부터 임플란트 · 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2014년 75세 노인으로 시작했던 틀니 지원이 3년 만에 65세 노인까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가족의 병원 입원 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간병과 관련해서도 169개소였던(2016년 6월) 서비스 지정병원을 하반기부터 400개소로 확대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해당 병원에서는 모든 간호 · 간병 서비스를 병원의 간호인력이 제공하고,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제한한다. 외국과 달리 가족간병 또는 간병인 고용에 연간 2조원 이상이 쓰이는 현실에 큰 변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노후 준비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중 이전 가입이력이 있는 약 438만명의 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해 노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예컨대 200만원 소득으로 과거 5년간 가입한 사람이라면 5년치를 추납하고 총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후에 6,528만원의 연금(20년 수령 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소득이나 재산변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면 당사자 신청 전에 안내하는 제도인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되고 국민연금 정보와 퇴직연금 · 개인연금 정보를 공유 · 연계하는 종합포털에 하반기에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정보까지 종합돼 연금 가입현황과 예상연금액 등을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 76만개 · 부가가치 65조원 창출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육성

네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운용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규모에 있어 세계 3대 적립기금에 속한다. 기금은 가입자와 수급자의 미래소득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균형 있게 도모돼야 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국민연금의 국내 대체투자를 확대(2016년 3월 기준 기금운용액의 4.3%에서 2016년 말 5.5%까지 확대 목표)하는 다각적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대체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운용사와 공동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민간과 공동투자 발굴에 힘쓰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헬스 육성이다.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바이오헬스산업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무려 8천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산업은 산업과 기술 간 융합으로 신기술 · 신제품 · 신서비스를 창출하며 양질의 고용집약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2015년 한미약품은 당뇨신약 기술수출로 약 8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6년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신약이 미 FDA 허가를 받으며 향후 3조5천억원의 매출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는 우수한 의료인력,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운영 30년의 노하우, 높은 IT 기술력이라는 세 박자가 갖춰져 있어 세계 각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다. 향후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창출을 목표로 기술과 연구 지원을 비롯해 해외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처럼 2016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은 맞춤형 복지 완성으로 민생안정을 기하고,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황석태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aimhigh@korea.kr

위기를 기회로,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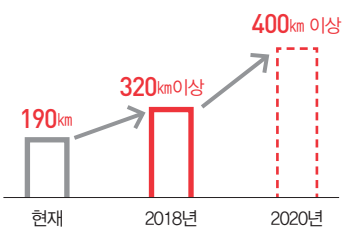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 시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으로 대전, 대구, 전주, 제주를 추가하고 차량잔존가치 보전비율도 연식에 상관없이 100%로 상향

하반기 중 2,100억원 투자로 도시(서울), 지역(제주), 고속도로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해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구매자 대당 국고보조금

1,200만원 → 1,400만원

1회 충전 시 운행거리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먼지는 공기 중에 흩날리는 입자상 물질로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중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을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지름을 기준으로 10㎛보다 작은 PM_{10}, 2.5㎛보다 작은 $PM_{2.5}$로 나누기도 한다. PM_{10}은 머리카락(50~70㎛)의 1/5~1/7, $PM_{2.5}$는 머리카락의 1/20~1/30에 해당한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 곳곳에 침투해 건강을 해친다.

국내 오염원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세계 최상위권의 인구밀도에 90%가 넘는 인구가 도시에 모여살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면적당 · 일인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또 대부분의 도시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있어 오염물질의 외부확산이 어렵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동쪽에 인접해 편서풍을 타고 밀려오는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PM_{10}) 오염도 추세(서울)를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51~61㎍/㎥를 오르내리다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의 시행에 힘입어 200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2012년에 저점을 통과한 후 2013년 들어 오염도가 악화됐고, 2014~2015년에는 별다른 개선 없이 정체됐다. 여기에 2015년에 발생한 황사가 시민의 체감 오염도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염도 변화 추이는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량의 증가에 기인한 바 크다.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국외 영향을 30~50%로 본다. 특히 고농도 때는 외부 유입 오염물질의 양이 60~80%까지 높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외국 탓만 할 수는 없다. 50~70%에 달하는 국내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지난 6월 28일 발표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경제정책방향)'에는 오래된 경유차의 교체를 유도하고 친환경차를 적극 보급해서 경제도 살리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대책이 돋보인다. 미세먼지는 배출원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발생하는 메커니즘 역시 상당히 복잡하다. 굴뚝 등 발생원에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가 나오는 경우뿐 아니라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또 생성되기 때문이다. 후자를 2차 생성이라고 부르는데 수도권만 해도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 미세먼지($PM_{2.5}$)의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PM_{2.5}$) 발생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중 도시지역은 공장보다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은데 특히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_{2.5}$)의 비중의 높아서 수도권의 경우 30%에 육박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새롭게 포함된 대책은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까지 6개월간 7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경유차를 포함한 운행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계속 강화돼 왔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일수록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킬 경우 도시의 대기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더불어 기존 대책의 개선이 이뤄진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부산, 울산, 광주에서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는 차량 잔존가치를 연식에 따라 2000년 이전 차량은 차량잔존가치의 100%, 2001~2005년 차량은 차량잔존가치의 85% 지원으로 차등보조 해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향후 지원 대상지역에 대전, 대구, 전주, 제주를 추가하고 차량잔존가치 보전비율도 연식에 상관없이 100%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투자 촉진 대책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활성화가 포함됐다. 친환경차는 기존의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비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자동차로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말한다. 이 중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해서 움직이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주행 중에 배출가스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완전 무공해 자동차다. 문제는 배터리의 충전용량이 적을 경우 주행거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이 없어 주행 중에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전기차와 달리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경제정책방향과 지난 7월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과 로드맵이 가시화됐다. 전기차는 구매 · 보유 · 운행의 전 과정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대당 국고보조금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리고 각종 세금을 감경(400만원)한다. 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최대 50%),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기차 보급 확대의 최대 난제는 충전인프라 구축이다. 올해 중에 집, 공공장소 등에 불편 없는 충전환경을 구축한다. 하반기 중 2,10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서울), 지역(제주), 고속도로에 급속충전기를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1회 충전 시 운행거리를 현재 190㎞에서 2018년 320㎞ 이상, 2020년 400㎞ 이상으로 개선하게 된다.

발전소 성능 개선으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과감한 기술투자 지원으로 2017년 상반기 중에 도심 주행용 수소버스, 2018년 1월까지 세계 최고 성능의 수소승용차를 개발한다. 올해 중 카셰어링(광주, 15대), 수소택시(울산, 20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울산에서 수소버스(7대)를 시범운행한다. 수소차의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구매보조금 확대(현재 2,750만원→4,125만원),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2020년까지 총 100기를 보급하는데 석유화학단지(울산, 여수, 서산) 부생수소를 활용한 충전소를 우선 보급해 경제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합동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이행계획이 이미 수립됐다.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신설, 배출가스 관련 리콜 이행 의무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대체 등과 함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의 검토를 시작한다. 2020년까지 신차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주유소의 25%(총 3,100기)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중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줄이고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대체 · 연료전환 등으로 근본개선하고, 그 밖의 기존 발전소는 대대적으로 성능을 개선한다.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현행 1종과 2종에서 3종까지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상의 국내 배출원 집중감축과 함께 $PM_{2.5}$ 측정망을 PM_{10} 측정망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예 · 경보체제를 혁신하고,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때로 규제는 기업에 시장 창출과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신산업과 함께 미세먼지와 CO_2의 동시저감 기술 · 산업에 정부 투자를 확대하려 한다.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 기존의 자동차에 못지않은 기술적 성능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지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급 초기에는 소비자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애정이 담긴 선택이 더욱 필요하다. 시민의 성원과 실천적 참여를 기대하는 이유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meosum@korea.kr

서비스산업,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육성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 특성상 수준 높은 역량의 전문인력 중요… 직업계고와 대학에 유망 서비스 분야 교육을 강화해 전문 서비스인력 양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의료 · 관광 · 콘텐츠 · 교육 · 금융 · SW · 물류의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고용 비중

70% (현재) → 72.9% (목표)

부가가치 비중

60% (현재) → 65% (목표)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와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다보스포럼이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열렸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산업 간 경계는 허물어지고 새로운 융복합 신산업이 촉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로 귀결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산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Smart Service World 2025' 전략을 수립하고 IoT ·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하는 스마트 서비스 개발에, 일본은 '신서비스산업정책'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혁신과 창업,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고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서비스산업 전략 발표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 시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0년째 60% 수준에서 맴돌 정도로 성장이 정체돼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18 ·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7월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게 됐다.

서비스-제조업 간 정책지원 차별 해소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5년 시계하에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하는 것을 비롯해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해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OECD 평균수준인 72.9%, 71.3%(2013년 기준)에 최대한 근접시키기 위한 계획을 담았다.

3대 추진전략 중 첫째는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이다. 그간 제조업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은 산업 간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과 성장동력 약화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에 서비스-제조업 간 존재하는 세제 · 정책금융 · 입지 등의 정책지원상 차별을 해소해 산업 간 균형성장을 달성할 계획이다.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 ·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세제지원과 정책금융의 확충, 산업단

지 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조지원 서비스와 제조상품의 유지 · 관리를 위한 제조융합 서비스를 육성해 부가가치를 높여갈 것이다. 더불어 신기술 ·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법령상 허가가 불가능한 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하는 임시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서비스경제 인프라를 혁신하는 전략이다. 서비스경제가 선순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토대가 되는 인프라가 우선 확충돼야 한다. 노동집약적 성격을 보이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수준 높은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직업계고와 대학에 유망 서비스 분야 교육을 강화해 전문 서비스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분야 구직자 · 재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도 민간 교육기관과의 연계, 사내대학 활용 등을 통해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정부 R&D 예산 중 서비스 R&D 비중을 2021년까지 2배(6%)로 확장하고, R&D 바우처 · 후불형 R&D 등을 통해 민간 R&D도 늘려 전 사회적인 서비스 R&D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이 밖에도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국제조달 · 개도국 ODA 사업에 서비스기업 참여 확대, 해외시장 정보DB 제공 등의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개발 · 유통 등 콘텐츠산업 여건 조성으로 '제2의 태양의 후예' 창출

셋째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의료 · 관광 · 콘텐츠 · 교육 · 금융 · SW · 물류의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의 실태와 의약품 추가 수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판매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안경점에서 검안 후 즉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안경 · 콘택트렌즈의 택배 배달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을 확대할 것이다. 동시에 도서벽지 ·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와 만성환자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국민 건강권을 확충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도 한류, 경제개발 경험, 지역관광지 등 우리가 가진 관광자원을 활용해 코리아둘레길, 크루즈관광, 한복관광 등의 즐길 거리를 다양화하고 숙박시설과 안내시설을 확충해 내외국인이 국내 관광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또 '제2, 제3의 태양의 후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콘텐츠 R&D 확대, 저작권 보호, 세제 및 펀드자금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문화콘텐츠가 개발 · 유통될 수 있는 산업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가상현실 ·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 등 이러닝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며, 금융 분야에서도 ICT 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거래소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SW산업의 체질개선과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육성 등의 영역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6월 3일 서울 명동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기리에 방영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포토존에서 실제 군복과 베레모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70%의 일자리와 60%의 부가가치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만 8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KDI는 우리 경제가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서비스산업이 발전한다면, 경제성장률 0.2~0.5%p 제고, 일자리 최대 69만개 추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탁월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돌파할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긴요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전력투구할지라도 우리 경제 각 주체의 협력 없이 서비스경제를 심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함께 국민과 기업 모두가 서비스산업 발전에 한마음으로 협력해야만 서비스산업의 질적 제고와 우리 경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여러 경제적 난관을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마음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

ISSUE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전기차 시장조사 전문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23만 9,853대로 지난해 상반기(20만7,257대)에 비해 15.7%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8만8,888대가 팔려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5만3,410대)보다 66% 늘어났다.

무거운 배터리 중량, 긴 충전시간, 일반 자동차의 두 배가 넘는 비싼 가격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소비자에게 외면 받던 전기차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전기차의 확산이 주변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예상보다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나라경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박태준
전자신문 산업경제부 수석기자
gaius@etnews.com



전 세계에 부는 전기차 바람… 성장세 내연기관차보다 빨라

인구 500만명이 사는 세계 7대 원유생산국,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에서 판매되는 신차 10대 중 2대가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로 이미 10만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보급률 1위 노르웨이 얘기다.

세계 전기차시장은 지난 2013년 약 20만대에서 2014년 30여 만대로 꾸준히 성장하다 지난해엔 60만대를 넘어서며 1년 새 두 배 성장했다. 중국과 미국, 유럽을 주축으로 한 올해 전기차시장은 1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내연기관차량 수와 비교하면 아직 1%에도 못 미치지만 전기차 붐 확산이 매우 가파른 건 분명한 사실이다.

전기차는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30% 이상 비싸고, 한 번 충전에 따른 주행거리 또한 절반도 안 될 만큼 짧다. 이런 전기차가 왜 잘 팔리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온실가스 · 대기오염의 주범인 탄소배출 저감 때문이다.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약속했다. 이들 국가가 꺼내든 전략 중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따른 전기차 보급이다. 이를 위해 다수의 국가가 채찍(규제)과 당근(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자동차회사별 평균 연비를 23%로 강화하고,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7% 줄일 것을 규정했다. 우리 정부 역시 연비 기준을 지금보다 43%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 뉴욕 · 오리건 · 코네티컷 · 버몬트 등 8개 주는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ZEV) 동맹'을 맺고 205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이는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자동차산업계를 압박하는 이 같은 규제만큼이나 소비자를 위한 보급 장려책도 파격적이다. 미국은 전기차 구입 시 세금을 100% 공제하고, 보조금을 최대 7,500달러(약 766만원)까지 지급한다. 일본은 자동차세 50% 감면과 최대 139만엔(약 1,390만원)의 보조금, 영국도 전기차당 5천~8천파운드(871만~1,394만원), 프랑스는 7천유로(약 973만원)를 보조해 준다. 중국 역시 2만5천~5만5천 위안(450만~1천만원)의 보조금과 함께 1천만원 상당의 등록비 · 구매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나 산업계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일반 소비자는 정부 정책보다는 경제성 때문에 전기차를 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전기차 구매 시 동급 내연기관차 가격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을 주는 데다 각종 주차 · 충전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연료비(전기요금)도 적게 든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연료비의 절반 수준에서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전기차 운전자인 김 모 씨는 지난 1월 한 달간 1,300㎞ 주행에 372㎾h 전기를 사용, 6만4,440원의 전기요금을 지불했다. 1㎾h당 80원하는 가정용 심야전기를 사용한 결과다. 일반 내연기관차로 1,300㎞를 운행했다면 주유비만 대략 14만원이 나왔을 테지만 전기차 덕에 절반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전기차 이용에 따른 단점도 존재한다. 전기차는 기존 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은 데다 충전인프라가 부족하다. 개인 소유의 전용 충전기를 갖기에도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이마저도 점차 해결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내년부터 한 번 충전으로 300㎞를 달리는 차가 속속 출시되고, 시장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차 가격도 점차 내리는 추세다. 시장이 확산되면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등장했고, 전기차 개발에 소홀했던 유력 완성차업체들도 시장에 가세하고 있다. 우리 후대들이 사용할 지구환경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전기차에 관심을 가질 때다.



중국과 미국, 유럽을 주축으로 한 올해 전기차시장은 1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전시된 포르쉐의 전기차

임근희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ghrim@keri.re.kr



1회 충전으로 500㎞ 달리는 전기차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10여년 전인 2005년 2천대에 불과했던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2015년 말 126만대를 넘었다(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2010년 이후 판매량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에서만 20만대 이상이 판매됐다. 현재 전기차 점유율이 1% 이상인 나라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중국, 미국 등이며, 한국은 0.2%에 그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지난해 판매된 차량의 25%가 전기차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또한 2025년부터는 무공해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네덜란드도 유사한 조건의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Cobo)센터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삼성SDI 직원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SDI는 이 모터쇼에서 1회 충전으로 최대 600㎞까지 주행 가능한 고밀도 전기차 배터리 셀 시제품을 선보였다.(사진 제공: 삼성SDI)

충전인프라는 전기차 보급에 중요한 요소다. 중국은 145만대가 보급됐으며, 일본은 급속 6천기를 비롯해 충전소가 주유소보다 많다. 한국은 6천개(급속 약 330기) 정도로 충전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약점인 짧은 운행거리를 개선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 확대와 에너지 밀도 향상, 고효율 모터 장착 등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국의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도요타, 혼다 등 일본 메이커들이 신형 전기차를 속속 내놓고 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는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500㎞ 이상인 전기차를 2019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는 1회 충전으로 320㎞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볼트(Bolt)를 연말에 시장에 내놓을 예정으로 차값은 3만7,500달러(약 4,300만원)로 예상된다. 경쟁제품이 될 테슬라모터스의 모델3는 1회 충전으로 326㎞ 주행이 가능하고 가격은 3만5천달러로 내년 말 출시 예정이다. 60kWh의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S는 6만6천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1회 충전으로 336㎞를 달릴 수 있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보급을 목표로 그때까지 충전소 1만2천곳, 충전기 480만대 설치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프라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이지 않던 독일은 최근 BMW와 벤츠, VW 등 빅3가 잇따라 전기차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독일정부도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현대기아차가 2020년까지 6종의 전기차를 개발할 계획이며, 1회 충전으로 190㎞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모델인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지난 6월 새롭게 출시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1회 충전으로 250㎞를 달릴 수 있는 경상용 트럭 개발을 발표한 바 있다.

각국의 배출가스규제 강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 완성차 업체들의 개발경쟁 등으로 미뤄볼 때 전기차는 이미 대세가 되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전기차에 대한 안전, 충전시간, 운행거리 등의 우려가 사라지고 있으며, 여러 제작사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전기차 확산은 에너지와 충전인프라, 자동차부품 등 연관 산업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핵심부품인 배터리는 일본과 한국, 중국은 물론 독일까지도 가담하는 산업전쟁터가 되고 있다.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공장까지 합작으로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은 물론 카셰어링과 충전기셰어링 및 관련 규정개정 등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손상훈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sanghoon@jdi.re.kr



지원금, 세금혜택 등 통해 구매 지원…
전기차 2,700대, 충전기 2,489기 보급 성과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구축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3일 제주시 연삼로 라이온스 회관에 설치된 제1호 전기차 충전소

제주도는 전국에서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지역이다. 2016년 5월 말 기준 2,700대가 보급돼, 184대는 공공기관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7대는 전기택시, 86대는 전기렌터카, 5대는 전기화물차로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2,418대는 개인용 전기차에 해당한다. 2,700대는 제주지역 전체 차량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충전기는 총 2,489기가 구축됐으며, 그중 공공급속충전기가 107기, 공공완속충전기가 326기이고, 나머지는 개인용이다.

제주지역의 전기차 보급사업은 '탄소 없는 섬 구축계획(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2012)'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다. 탄소 없는 섬 구축계획은 2030년까지 도내에서 필요한 전기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도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며,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해 전기흐름을 관리하는 제주의 종합적인 에너지 자립계획이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에 맞춰 다양한 구매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전기차 구매자에게 구매지원금으로 1,900만원(정부 1,200만원, 도 700만원)이 보조된다. 충전기 설치금액은 400만원까지 보조된다. 세금혜택도 있다.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등이 일부 면제된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책과 저렴한 차량운영비, 제주지역의 지리적 · 기후적 특성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기차 민간 보급은 2015년까지 원활하게 추진됐다. 올해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목표는 전국보급물량의 50%에 해당하는 4천대이며 2017년은 1만5천대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올해 제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GM의 쉐보레 볼트, 테슬라 모델3 등 현재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보다 성능이 크게 개선된 차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구매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추이를 관망하는 수요층이 늘어난 까닭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공공충전인프라 부족, 여전히 긴 충전시간, 충전인프라 통합정보 부족 등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에 대한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공간부족 문제와 결부돼 충전기 설치를 위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보급전략을 다소 수정했고, 2016년 하반기 전기차 보급확대 실행계획을 발 빠르게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보급전략의 경우 민간 보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기 렌터카 ·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법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집중 보급하며, 충전인프라 구축을 보다 확대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지원 · 현장방문 등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홍보 및 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구매수요를 유지시켜 나갈 것이다.

전기차 보급 외에도 고민은 많다. 전기차 보급이 보급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산업 구조 개편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미래 트렌드에 입각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요구된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 사회 · 교통 체계가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지역경제의 하락,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전기차가 보급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하는 역할도 보급만큼 중요하다.

제주는 전기차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개척하고 있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액션이라 판단된다. 현재 제주가 경험하고 고민하는 모든 상황과 솔루션은 향후 전기차 보급의 전국 확산 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김경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ykim@lgeri.com



자동차 가치 재정의 되고 새로운 산업판도 형성될 것



미국 포틀랜드의 한 건물 앞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확산이 가속되면서 관련 산업생태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지 등 주요 부품의 조달에서부터 전기차 사업모델, 전지 재활용이나 충전네트워크는 물론 전력 및 에너지 수급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새로운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기차용 전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지 수급에 대한 지배권 다툼이 새로운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전지의 안정적 수급이 전기차 경쟁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의 참여, 대규모 생산 및 조달 등이 불가피하다.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기가팩토리'가 좋은 예다. 자동차 기업들이 전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전지 기업들의 입지는 점진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동시에 자본력까지 겸비한 LG화학, 파나소닉, 삼성SDI, 비야디(BYD) 등 기존 전지시장의 강자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다.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인해 리튬과 같은 전지의 주요 소재들이 자원 확보 전쟁의 새로운 목표로 부상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주력인 리튬이온 전지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전지 솔루션의 등장이나 전지 재활용 활성화도 눈여겨봐야 한다. GM을 비롯해 닛산, 테슬라, BMW, 토요타 등 기업들이 전기차용 전지를 전력저장용으로 재활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지 재활용이 청정에너지 체계 구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 외에 새로운 사업모델의 전기차 전문 기업들이나 IT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다. 패러데이 퓨처(Faraday Future)나 테슬라처럼 자동차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조직과 기업들이 획기적 사업모델을 들고 전기차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 증가할 것이다.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와 같은 지능형 기술의 진화가 결합될 경우 전기차는 물론 내연기관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애플, 구글 등의 기업들이 자동차시장에 참여하려는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인자동차, 공유 등 자동차의 가치가 재정의 되고 새로운 산업판도가 곧 형성될 것이다.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성, 충전공간 및 방식의 비용과 경제성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충전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전기차, 전력서비스 등 관련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혹은 서로 협력해 충전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력공급의 단말이자 전력 및 에너지시장에의 접속 채널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물론 에너지서비스 측면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충전네트워크의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이미 기존 주유소나 식당에 공용 급속충전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기존 인프라와 공존, 병행하면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에너지네트워크 모델의 진화는 물론 소비생활 양상의 변화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력 및 에너지산업에서 움직이는 전원인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업모델도 형성될 것이다. 도로변이나 주택, 상업용 건물,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충전기가 소비자와 전력공급자 사이의 연결 채널이 되므로 전기차는 전력서비스 사업자에게 새로운 수익원이다. 물론 효율적인 전력망 운영 차원에서도 전기차 충전에 따른 별도의 요금 및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전기차는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전기차의 전지에 저장된 전력을 거꾸로 전력망에 공급하면서 전력체계 전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지만 전력을 싼 가격에 전기차에 저장해뒀다가 비쌀 때 팔 수 있는 차익거래도 가능하다.

전기차 시대의 도래는 모델 간 경쟁이 격화되고 인프라 확충이 수반되면서 점차 가속될 것이다. 전기차가 가진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부품 및 전기차, 전력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 명예연구위원
skhwang@koti.re.kr



中, '양이 질을 변화'시키도록 강력한 보급정책 수행

지난 6월 말 국회에서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다. '글로벌 전기차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정책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언제까지 국내 자동차제작사를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노르웨이의 정책과 비교하면 버스전용차선 진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국내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정책은 뭔가 더디고, 2%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왜일까?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디자인이나 정비서비스도 고려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이다. 그리고 가격은 경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노르웨이는 글로벌 OEM(자동차 제작사)이 없기 때문에 해외 OEM 간 경쟁을 유도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여지가 많다. 반면 한국과 같이 OEM이 있는 나라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엔진차 조립라인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고용불안, 세수감소 등 경제 ·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국내 전기차시장의 틈새를 잠식하기 위해 혈안이다. 그렇다면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해외의 주요 정책사례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독일은 'e-Mobility 국가계획'을 세우고 충전인프라 확충 및 차량성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플랫폼(NPE; National Platform Elektromobi)을 조직하고 정책당국자, 민간기업, R&D 기관,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NPE는 부처 간 전기차 정책 조율은 물론 갈등관리도 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다. 전기차 보급확대는 물론 석유자원의 해외 의존도 축소 등 에너지 · 환경 정책목표의 실현 등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차량성능 향상 등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디젤차 게이트로 얼룩진 자국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향후 전기차 보급확대에 더욱 전력할 전망이다.



사진은 중국 심천의 택시 전용 전기차충전센터로, 이곳에서는 동시에 약 1,200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프랑스 역시 유럽 내 자동차강국으로 전기차 경쟁력도 비교우위에 있다.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도로는 전기차공유사업(AutoLib)과 탄소비례부담금제도(Bonus-Malus)가 있다. 단순히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면 주차난과 혼잡난이 야기되는데, 카셰어링으로 이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국내에서 시도하려던 '저탄소협력금제도'의 원형인 탄소비례부담금제도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큰 효과를 거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우리처럼 글로벌 기업(자동차, 배터리, ICT)은 없지만 강력한 정책시행으로 전기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사례로 전국 주요 도시마다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보급목표를 세우고 과감하게 추진 중이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 내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전기차 원가를 낮출 수 있어 판매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전기차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얼마 전까지 글로벌시장에서 낮게 평가받던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도 크게 향상돼 전통적인 자동차 선진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관련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도 전기차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선뜻 나서질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론 전기차에 집중한다고 홍보하면서도 엔진차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많은 기업은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칠까 염려하면서 어제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상황이다. 이젠 경쟁국을 관망하는 시기는 지났다.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자동차 포트폴리오 구조에 집착하다간 미래 시장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적자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과감히 실천해야 할 마지막 시기인 것 같다.

박재원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wonderful@sedaily.com



전기차 사면 최대 2,200만원 지원



지난 6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모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살펴보고 있다.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최근 정부가 전기차 정부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리는 등 본격적인 '전기차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업체들도 신차 확보, 프로모션 확대를 위해 바빠졌다. 이번 정부 발표로 소비자들은 지자체별 보조금(최대 800만원)을 포함해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 · 쏘울, 르노삼성 SM3 Z.E., 한국GM 스파크,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리자 라보피스 등 8종이다. 업체마다 제공하는 할인액이 천차만별인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는 현대차가 친환경 전용 모델로 개발한 '아이오닉 일렉트릭(이하 아이오닉)'이다. 긴 주행거리와 편의사양을 원한다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아이오닉은 따끈따끈한 신차다 보니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 최근 정부 연비 인증 결과 아이오닉은 1회 충전 주행거리 191㎞(복합기준: 도심 206㎞, 고속도로 173㎞)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 주행 조향 보조시스템(LKAS),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BSD) 등의 안전사양을 적용한 것이 눈길을 끈다. 아이오닉 N트림의 경우 1,400만원의 환경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700만원(제주도 기준)을 제외하면 1,900만원이면 차를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출시 차량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기아차 쏘울 EV다. 4,250만원에서 각종 보조금을 빼면 디젤차보다 가격이 낮아진다. 고객 부담금은 제주도 기준 쏘울 EV는 2,150만원, 디젤모델인 쏘울 노블레스는 2,180만원이다. 쏘울 전기차의 경우 아이오닉을 제외하고 한 번 충전 후 주행거리(148㎞)가 가장 길다. 기아차 레이 EV의 경우 3,500만원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주행거리(91㎞)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르노삼성은 135㎞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SM3 Z.E.(4,190만원)를 꾸준히 판매하고 있다. 준중형차지만 넉넉한 뒷자리 공간 덕분에 패밀리카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르노삼성은 올 하반기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국내에 출시한다. 트위지는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으로, 후륜구동에 최고속도는 시속 80㎞다. 완전 충전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린다.

한국GM 스파크 EV(3,990만원)의 경우 SM3 Z.E.와 함께 지난 2013년 10월에 출시된 차량으로 최고속도는 시속 145㎞, 1회 충전 시 거리는 128㎞다. 주행거리는 SM3에 비해 7㎞ 정도 뒤지지만 경차라는 매력이 있다. 아울러 한국GM은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EREV)를 선보인다. 전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드라이브 유닛, 주행거리 연장시스템으로 이뤄진 볼텍(Voltec)시스템을 통해 순수 전기 배터리로만 80㎞까지 주행 가능하다. 대신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이 장착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로 분류돼 있어 전기차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수입 전기차를 원한다면 BMW i3와 닛산 리프가 선택지에 있다. 올 상반기까지 i3는 75대, 리프는 32대 수준밖에 판매하지 못했지만 국내 출시한 후 1년 반 동안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이다. i3는 Lux 옵션 강화모델 기준, 일반시민 기준으로 1,850만원, 리프 SL모델은 2,830만원에 살 수 있다. 두 차량의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는 132㎞로 같다.

한편 지자체들은 서로 다른 전기차 보조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순천(800만원)이다. 제주와 영광은 700만원, 대구 · 포항 600만원, 부산 · 울산 · 성남 등 500만원, 서울 450만원, 창원 · 광주 · 대전 등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어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 나라경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hongdg@korea.kr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충전기 3천기 보급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는 내연기관자동차(이하 내연기관차)보다 먼저 탄생했다. 전기차를 보면 최신 기술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구동하려는 시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내연기관차가 개발되기 전인 19세기 초부터 전기차가 발명되기 시작해 20세기 초까지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이 팔리기도 했다. 이후 유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정유기술이 발전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기차는 어느새 잊힌 존재가 됐다.

이렇게 100여년간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전기차가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부터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대기오염 물질의 70%가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은 인체에 유해해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기술은 아직 완성됐다고 하기는 어려워 좀 더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크게 짧은 반면 충전시간은 너무나 길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냉방과 난방 때문에 주행거리가 더더욱 줄어든다. 배터리는 사용할수록 충전용량이 줄어들어 일정 기간 후에는 교체해 줘야 하는데, 문제는 교체비용이 꽤 든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처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기후온난화를 일으키는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숙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을 열어줘 전기차를 생산 · 보급해 나가면서 또 한편에서는 기술혁신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사진은 포항에서 운행 중인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정부는 전기차 확산을 위해 전기버스의 경우 대당 1억원의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기승용차 구매자에게 대당 1,400만원의 차량 구매비와 대당 400만원의 충전기 구입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 · 취득세 등 세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감경해 주고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에도 대당 1억원의 구매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주유소처럼 전기차도 충전소가 필요하다. 공공급속충전기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327㎢마다 1개꼴로 전국에 337개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7년까지는 최소 2배 이상 늘려 157㎢마다 1개씩 총 637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 ·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충전소 간 거리가 40㎞ 이내로 줄어들게 돼 충전소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신차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전국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20만대였던 보급목표를 25만대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1,400기였던 충전인프라 설치목표를 3천기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설치여건을 완화해 확대된 목표를 충실히 실행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OECD가 발간한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16」에 의하면 전기차 이니셔티브(Electric Vehicles Initiative;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산하에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설치한 다자간 정책포럼) 16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전기차 판매비중은 0.2%로 회원국 중 열두 번째로 낮다. 우리도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전기차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하겠다.

"강력한 운행상의 인센티브 주고,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테슬라 모델3에 전 세계가 열광했다. 이유가 뭔가?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혁신기업이다 보니까 차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았다. 모델3보다 먼저 출시된 모델S도 차라기보다는 움직이는 컴퓨터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일단 차에 앉게 되면 디자인부터 그렇고, 앞에 17인치 모니터도 있고, 운전할 때 감각도 일반 자동차와는 느낌이 다르다. 1억원이 넘는 스포츠카 개념이라 부가가치도 높았지만 상상의 나래를 펼 때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대중에게 줬다. 이 모델을 축소해 보급형으로 나온 게 모델3다. 소비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더구나 주행거리를 두 배로 늘려 기존 전기차의 단점도 극복했다. 차도 차지만 마케팅 전략에서의 승리라고 본다. 전기차라는 융합개념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테슬라 열풍을 어떻게 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메이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긴장도를 높여 줬다. 혁신기업이라는 것이 차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업전략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라고 하면 제작자, 판매자, 소비자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테슬라는 중간에 판매자가 없다. 도쿄 매장을 가보더라도 전시만 하고 있다. 그 흔한 카탈로그 한 장 없다. 차만 보고 느껴라 이거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본사에 한다. 판매자가 없으니 국내 수입자동차협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니까 나쁠 게 없다. 혁신적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에 자극을 많이 주고 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할까?

자동차는 지난 130년 역사 동안 오직 경제성 논리로만 움직였다. 부동산 다음으로 큰돈을 들여 사는 게 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쟁력을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주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저는 대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점유율 싸움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40~50년 동안은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가 서로 섞이면서 치열하게 점유율 싸움을 펼칠 거다.

전기차 기술의 핵심은 무엇인가?

배터리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이 모터하고 컨트롤시스템이다. 컨트롤시스템 중에 중요한 것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즉 배터리 관리시스템이다. 전기차에는 배터리팩이 수천 개 들어가는데, 각 팩에서 똑같이 에너지를 뽑아내고 똑같이 충전돼야 한다. 한쪽만 뽑아내면 균형을 잃으면서 깨져버린다. 그것을 BMS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배터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 BMS가 뛰어나다. 우리나라는 각각의 기술은 괜찮은데 모아놓으면 엉망이다. 전기차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좋아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 머물러 있다. 미래 자동차는 그렇게 해선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생각보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것 같진 않다.

전기차는 충전거리가 짧고 불편하고 가격도 높고 부가가치가 3년 정도 지나면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친환경, 완전 무공해라는 장점 때문에 전기차를 타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요새 미세먼지로 인해 전기차의 장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고 가격도 떨어지고 배터리 성능도 좋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기차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나?

첫째,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이 별로 없다.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이 워낙 부족하다. 타본 사람도 많지 않고. 둘째, 컨트롤 타워의 부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 아직도 부처 간 이기주의나 내 것 네 것을 나누는 부분이 많다. 셋째, 한국형 선진 모델이 필요한데 아직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차를 만들고, 소비자들이 얼리어답터적인 기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보조금, 세제혜택만 갖고는 안 된다. 버스전용차로에 비보호 진입 허용, 경차 이상의 혜택,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과 같은 강력한 운행상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 중요한 것이 대도시는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를 사면 완속충전기를 주는데 설치할 공간이 없다. 모바일 충전기라든지 아파트 입구 쪽에 설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 아울러 친환경차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나 캠페인도 중요하다. 자동차 메이커가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줘야 한다.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중국이 가장 전기차 보급에 열심인 것 같다.

중국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중국 전역이 오염원이 심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자동차산업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래서 50대 50 합작으로 해서 중국 내에서만 생산해 팔게 한 거다. 중국 내에서만 팔게 하면 엔진변속기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엔진변속기에다 배터리까지 넣어야 하니까 기술 난이도가 더 높다. 하이브리드도 안 되니까 아예 도토리 키 재기인 전기차로 넘어간 거다. 미래 선도산업을 주도할 심산으로. 물론 가장 큰 내수시장도 갖고 있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어 우리보다 정책적으로도 빠르고 보급 자체도 워낙 많이 돼 있다. 지난해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32만대 판매됐는데 중국에서만 22만대가 팔렸다.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도 속속 출시되고 있던데….

마이크로 모빌리티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 쪽은 굉장한 신성장동력이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먹거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경쟁력이 있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하청구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수평구조로 바꿀 수 있는 돌파구가 마이크로 모빌리티다. 보통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트위지 같은 경우는 100㎞가 넘는다. 애들 등하교용, 택배용, 장보기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완전 친환경이니까 배달업체에서 사용하면 홍보효과도 클 거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결합은 언제쯤 이뤄질까?

이미 융합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융합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스며드는 거다. 그 가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는 기술수준이라든지 흐름, 관습, 법 · 제도적인 부분에 좌우될 거라고 보는데, 속도는 예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단적으로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쇼 CES에서 30%가 자동차였다. 이미 움직이는 가전제품이 된 거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끝으로, 전기차 시대를 맞는 우리의 자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의 10년이 지난 100년보다 더 빨리 변할 거다.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자신 있게 덤벼드는 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

■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DISCOVERIES
FROM THE SINAN SHIPWRECK



2016.
7. 26.화 – 9. 4.일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전시기간 중 휴관일 없음
(단, 상설전시는 매주 월요일 휴관)

2016.10. 25.화
2017. 1. 30.월

국립광주박물관
Gwangju National Museum

매주 월요일 휴관 (단, 1월 30일은 개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특별전 "한국 수중 발굴40년사" 2016.10.26.–2017.1.30.

국제학술심포지엄 2016.9.2.(금)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협력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YTN
중국 저장성박물관, 닝보박물관, 톈이거박물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아들이 커갈수록



정민승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msj@hankookilbo.com

2013년 8월생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 신문기자로는 드물게 2014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한국일보에 육아휴직 아빠, 워킹대디의 이야기를 담은 '편파적 육아일기' 연재 중

요즘처럼 밥 잘 먹는 아이들이 부러운 때가 없었다.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은 아들은 '밥'보다 단것을 먼저 찾는다. 이런 아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은 아들과 보내는 휴일 일과 중에서도 가장 고된 일이다. 외식 가서 만나는 남의 아이들은 숟가락, 포크, 젓가락으로 혼자서 잘도 먹는데 아들은 떠먹여 줘야 겨우 먹을 뿐, 엄마 아빠가 먹기를 원하는 음식을 스스로 제 입으로 가져가는 일은 거의 없다. 어린이집에서는 혼자서도 잘 먹고, 싹 비운 뒤 한 번 더 달라고 해서 먹을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한다지만, 이 아들이 그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다. 어린이집 비결이 '경쟁'이라기에 집에서도 '경쟁식 식사'를 시도해 봤지만 허사다.

이 아빠는 자책하고 있다. 아들이 밥 대신 젤리나 초콜릿을 먼저 찾는 것은 아빠의 잘못된 육아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중에 아들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빠는 소원해진 부자관계를 단시간에 회복하기 위해 아내 몰래 젤리와 사탕을 아들에게 상납했고, 아빠가 주도한 이 얄팍한 거래에 길들여진 아들은 식습관이 엉망이 됐다. 단것을 먹으면 밥을 먹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팍팍해진 부자관계의 윤활유였던 젤리와 초콜릿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대단히 힘들었다.

당연히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걸 먹으면 밥을 못 먹어~, 밥 먼저 먹으면 젤리 줄게. 응? 응!?" 이런 제안이 처음 한두 번은 먹혔을 뿐, 세 돌이 된 아들은 요즘 이런 유의 이야기는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동원해 공포를 조장하고 그를 바탕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도 발견한다.



"00(아들)야, 이 젤리는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이게 먼저 뱃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00 배를 먼저 차지한 이 젤리들이 '밥!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하면서 밥들을 공격해. 이렇게 해서 밥이 00 뱃속으로 못 들어가면 00는 뭐가 될까?" – "해골" – "그러니까 밥을 먼저 먹고 젤리는 뒤에 먹자아~." – "네에~." 아직은 아빠 이야기를 상당부분 믿고 따라주는 경향이 있지만 이 단순한 작전이 언제까지 먹힐지 알 수 없다.

어쩌다 아들과의 협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하며 우쭐해 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 아빠에게 쏘아붙인다. "아빠가 아들을 망치네, 아빠가 아들을 망쳐~." 배고프면 엄마 아빠를 졸라서라도 먹어야 하는 밥인데, 당연히 스스로 먹어야 할 밥인데, 그 밥을 먹이기 위해 조건을 걸고 보상을 제시하면서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도 '~하면, ~해 줄게' 식의 제안이 눈앞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것 같긴 하다. 아내의 지적이 아빠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보상을 내거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데까지 이르자 자리를 뜨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아들 첫돌 즈음 시작해 1년 동안 이어진 육아휴직에서 간절하게 바라던 게 몇 가지 있었다. 아들이 걸을 수 있었으면, 똥오줌도 가렸으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이유식도 뗐으면…. 이 정도만 되면 서너 명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만 생각하면 지금의 아들은 당시 이 아빠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재잘재잘 말도 하고 똥오줌도 거의 완벽하게 가린다. 매운 것만 제외하면 아빠랑 식탁을 공유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을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은 안기기보다 두 발로 뛰어다니는 걸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아들이 커갈수록 이 아빠의 부족함은 더욱 커진다.

때 _ 2016년 7월 11일 오후 3시
곳 _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참석자 _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좌장 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연구위원

"한은의 시장소통 노력 긍정적… 미래 불안감 줄여주는 재정 역할 기대"

하준경_ 지난 6월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p 인하했다. 예상을 벗어난 금리인하라는 평가다. 먼저 1년 만에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배경과 필요성부터 간단히 짚어보자.

주원_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 여파와 세계교역 신장률 하락 등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이 추가 하향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0%대로 금리를 내려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는 상태다. 특히 경기를 선도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이 안 되고 평균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다.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유휴생산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

하준경_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한은이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선택한 이유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영향이 있다고 보는가?

김성훈_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본다.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사실 금리인하 압력은 4, 5월부터 있었다. 금융통화위원 교체가 지난 4월에 이뤄졌는데 5월에 잠시 뜸을 들이고 6월에 바로 신임 금융통화위원들의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교체된 4명의 신임 금융통화위원들이 대체로 이전 위원들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성향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하준경_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도 빼놓을 수 없지 않나. 미국에서 그동안 계속 금리인상 신호가 오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약해졌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막는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주원_ 그렇다. 지난 6월 9일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이뤄지고 뒤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하 연준)의 기준금리가 결정(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등 8번 개최)되는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금리를 내리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_ 취업자 증가 부진과 경제활동참가율 저하와 같은 미국 고용시장의 불안 등으로 연준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기엔 다소 어려웠을 것이다. 한은으로선 대내외 여러 상황이 금리인하에 딱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김성훈_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금리인하다. 출범 두 달 만에 만장일치 금리인하는 파격적이었다.

하준경_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때는 미리 시그널을 주지만 내릴 때는 예고 없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금리인하는 채권시장이 바라는 것으로 미리 알려지면 투기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금리인상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미리 힌트를 주고 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는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주원_ 금리인하는 투자와 소비 등 실물경제로 그 파급효과가 이어져야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금리인하의 파급 경로를 살펴보면 금리 경로(차입비용 및 대출이자 비용 감소, 기업 투자 확대와 가계 소비 증가), 자산가격 경로(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해 소비와 투자 확대), 신용 경로(금융기관의 대출 여력 및 신용창출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 생산이 증가)를 통해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리인하를 찬성하는 쪽도 요즘엔 신용 경로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 분위기다.

하준경_ 금리를 내렸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지

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거래와 아파트 분양이 호조다.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경우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히 걱정된다. 특히 가계부채가 가장 신경이 쓰인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어떻게 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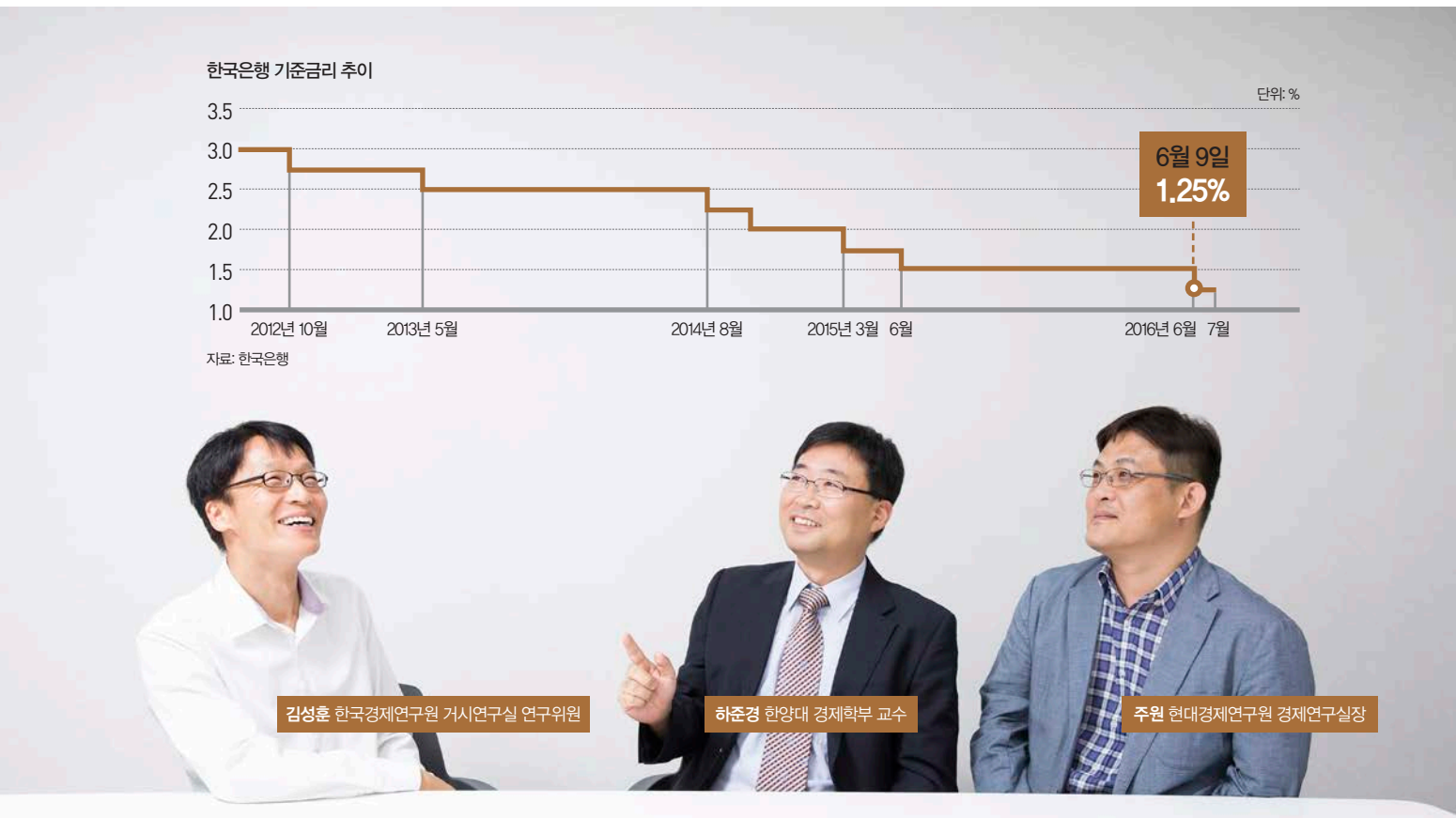
주원_ 가계부채는 난감한 문제다. 실물 부문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을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는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가계부채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나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분기 기준 전년동월 대비 11.4%, 금액 기준으로는 1,224조원 수준이다. 다만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올해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하준경_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성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에 빠지면서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경기침체와 소득불평등 심화로 세계경제가 만성적 수요부진에 빠진 상태)론이 등장하고 있다. 사상 최저 기준금리도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전 같은 성장률이 나오기 힘든 상황인데 과연 구조적 장기침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 사이클을 타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성훈_ 금융위기 이후 8년간 지속되고 있는 현재 국면은 분명 일반적인 사이클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률이 장기간 저점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떨어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정도로 L자형 성장(성장률이 급락한 후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이 지속되고 있다.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갭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어느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잠재성장률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구조적 장기침체라고 못 박을 순 없지만 잠재성장률 자체가 기존보다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주원_ 대략 잠재성장률이 3%라고 얘기하는데 확신하지는 못하겠다. 적어도 3%보다는 낮은 2% 중후반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현재로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하준경_ 끝없이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 바닥이 보이긴 하는데 예전 같은 '치고 올라가는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 상황에선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일본도 1990년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잃어버린 20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짚어보자.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난 후 적어도 올해 2번 이상, 한국도 올해 중으로 금





불안한 거시여건에 대한 선제적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거시여건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하방압력이 예상돼 선제적인 인하 필요성이 컸고 우려했던 미국 금리인상도 지연될 것으로 나타나 인하에 적기였던 상황이었다.
주원 실장

리를 인상한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상황이 급변했다.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

김성훈_ 7월에는 금리동결(7월 11일 집중토론이 끝난 후 7월 14일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이다. 두 번 연속 금리인하는 역설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금리인하 가능성은 있다. 8~9월 정도로 예상한다. 추경을 통과하고 보조를 맞춘다면 9월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남은 변수는 미국 금리인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Fed워치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70% 동결이다. 올해까지 금리동결을 예상하는 기대치는 90% 이상이다. 개인적으로도 만약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면 늦추는 것보다는 빨리하는 게 낫다고 본다.

주원_ 추경이 통과된 이후가 유력해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한두 달 전과 달라진 건 브렉시트뿐이다. 만약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추세라면 우리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 번 정도는 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

하준경_ 한 번 더 금리를 내리면 1%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1%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선진국이 제로 수준이라고 해도 상당히 낮다.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선진국보다 1%p는 높아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심리적인 저항선이 1% 정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금리가 1% 수준이 되면 바닥이나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기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으므로 금리동결이나 인상 쪽으로 너무 편향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에도 좋지 않다. 따라서 한은 입장에서 1%까지 인하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 할 것 같다.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봐야 아는 것이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번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

주원_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대체로 시의적절했으며 경기 하방압력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다. 불안한 거시여건에 대한 선제적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거시여건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하방압력이 예상돼 선제적인 인하 필요성이 컸고 우려했던 미국 금리인상도 지연될 것으로 나타나 인하에 적기였던 상황이었다. 가계부채 확대나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김성훈_ 기준금리 인상 · 인하에 대한 문제보다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한은의 의지와 노력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한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시장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운용방식도 1~2년 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다. 적어도 신뢰성을 회복하는 덴 성공했다고 보인다.

하준경_ 중요한 포인트다.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금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움직이고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가 0.8이다. 지난 1~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0.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은이 2016~2018년 달성할 중기 물가안정목표치인 연 2%보다 1.1%p나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높아질 것인가?

김성훈_ 올해 한은은 중기안정목표치 6개월 연속 물가안정 목표에서 ±0.5%p 이상 벗어나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상황을 설명(지난 7월 14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 상반기 내내 물가 수준이 목표치를 밑돈 것에 대해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었고,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가 올라 내년에는 물가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하기로 했다. 현재 근원물가(전체 CPI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사용하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금리인하 가능성은 있다. 8~9월 정도로 예상한다. 추경을 통과하고 보조를 맞춘다면 9월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남은 변수는 미국 금리인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Fed워치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70% 동결이다.
김성훈 연구위원

면서 빚어진 결과다. 근원물가를 사용해야 한다. 근원물가를 적용하면 1.8이니 괜찮은 수치다. 디플레이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근원물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주원_ 0%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낮다.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었고, 적정한 소비자물가라면 저성장 속에서 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 선이 적정 수준이다.

하준경_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나 위험은 없나?

주원_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모두 마이너스인 저성장 국면을 디플레이션으로 지칭하는데, 지금은 생산자물가가 마이너스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보이는 준디플레이션 국면이라 정의할 수도 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다. 수요가 부족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하준경_ 금리인하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무엇보다 재정정책이 중요할 텐데 개인적으로도 재정을 쓸 여력이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경우엔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 통화정책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지만 우리 경우는 아직 재정을 사용할 여력이 있지 않나? 이러한 정책 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원_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추경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소극적인 대응이다.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수지 적자 폭이 늘어나야 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김성훈_ 추경 편성 시기와 투입 시기 사이의 시차를 고려해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의결을 확보해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른 추경 편성 결정은 각 경제 주체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금리인하와 추경은 찬성이다. 추경과 금리인하의 정책 조합이 이뤄질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하준경_ 경제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면 무리한 재정정책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없다면 어떻게든 창출해야 한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케인즈가 얘기한 것처럼 허리띠를 늘린다고 바로 배가 나오진 않는다. 긴축통화정책의 경우, 살찐 사람한테 허리띠를 줄이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돈을 푼다고 소비와 투자가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때는 통화정책수단에 맞게 재정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동안 통화정책에 많이 의존한 측면이 있다. 중앙은행을 너무 많이 쳐다봤다. 한은의 역할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실물 부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거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불확실성과 저성장이 지속되다 보니 안전 자산으로만 자금이 흘러간다. 이런 상황에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이 나올 리 없다. 젊은이들의 기업가정신을 살릴 수 있는 여러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고, 나이가 들어도 먹고살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줘야 한다.

하준경 교수

주원_ 하반기 최대 이슈인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은의 역할은 충분히 해준 것 같다. 이제는 재정과 통화, 2가지 정책 조합이 잘 이뤄져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식 장기불황을 이야기하는데 2가지로 나뉜다. 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과 일본 기업의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정부가 통화나 재정정책을 잘못 사용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핵심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너무 느려도 너무 성급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김성훈_ 무엇보다 미래가 불안하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진작에 한계가 있으니 투자수요도 만들기 힘든 상황이다.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위한 미시적인 정책, 예를 들면 30~40대 핵심 경제인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하준경_ 불확실성과 저성장이 지속되다 보니 모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낮아도 투자를 안 한다. 무조건 안전자산으로만 자금이 흘러간다. 이런 상황에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이 나올 리 없다. 적어도 금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안전추구 심리를 없애야 한다. 젊은이들의 기업가정신을 살릴 수 있는 여러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고, 나이가 들어도 먹고살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줘야 한다. 과도한 안전추구 심리를 갖지 않게 다양한 정책 병행이 요구된다.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게 미시적으로는 건전성 규제도 제대로 점검해줘야 한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감독정책 등이 서로 어우러져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정책 간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만 끝을 맺는다.

■ 진행 · 정리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왜 그걸 못 참느냐고?

다양한 마시멜로 실험의 정책적 시사점

한번 잃은 신뢰는 다른 사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책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수용되기 어렵다. 한 사회의 구조개혁에 있어서도 정부와 국민, 이해당사자 상호 간의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지금의 양보가 일방적 희생에 그치지 않을 것을 믿고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선생님이 만 4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사탕이 한 개 들어 있는 그릇과 두 개 들어 있는 그릇을 보여준다. 지금 먹으면 한 개, 선생님이 15분 후에 돌아올 때까지 참으면 두 개를 주겠다고 한다.

1960년대에 실험 대상이었던 653명의 아이들을 15년 후에 만났을 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일수록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교사의 평가, 수능(SAT) 성적 등에서 뛰어났다. 이후 중년까지 이어진 추적에서 눈앞의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내지 못한 아이들이 비만, 약물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으로 살고 있는 데 반해 인내력을 발휘한 아이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유사하게 시도된 다른 연구들에서도 마시멜로 효과는 매우 강력해서 IQ보다 성공에 대한 예측력이 높았고,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이상은 고전적인 마시멜로 실험의 발견이다. 제임스 헤크먼 등 경제학자들도 인지능력 못지않게 인내심 등 비인지적 역량이 인생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지능력이 인생의 초기단계에 대부분 완성되는 데 비해 비인지적 역량은 이후의 수련을 통해 일정부분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아이 때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지 못한 어른들도 상담과 훈련을 통해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결정된 후다. 조기개입의 필요성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왜 어떤 애는 눈앞의 마시멜로를 참아내고 어떤 애는 못 참을까?

행동경제학자 리차드 탈러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틀을 이용해 우리 내면에서 단기적 욕구와 장기적 이익이 갈등할 때의 결정과정을 설명한다. 우리 자아를 어떤 가게에 비유하자면, 주인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가게가 잘 되도록 늘 신경을 쓴다. 그러나 날마다 바뀌는 아르바이트 대리인이 가게를 맡는다면 그날 자기 기분대로 가게를 운영하고 뒷정리도 안 하고 가서 그 다음 날 다른 대리인이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충동적인 성향의 대리인에게는 오늘만이 있고, 내일의 대리인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최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유명 인사들의 일탈행위도 장기적 관점을 갖지 못한 대리인들이 당장의 쾌락을 좇아 사고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인이 대리인을 잘 제어하고 다스리는 자아를 가진 아이는 눈앞의 마시멜로를 참아냈을 것이다.

대리인의 충동성을 제어할 방법은 없을까?

1980년대에 이뤄진 실험에서는 마시멜로 그릇에 뚜껑을 덮은 채로 아이들 앞에 남겨놓았다. 뚜껑이 없던 실험에서 평균 6분 이

하를 기다린 아이들이 뚜껑을 덮자 11분 이상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지시를 했다. 그룹 1에게는 재미있는 일을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룹 2에게는 기다린 다음 받게 될 두 개의 마시멜로를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룹 3에게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룹 3보다는 그룹 1과 2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 특히 그룹 1은 뚜껑이 덮였는지에 관계없이 평균 13분을 기다렸다.

이 결과는 이른바 '넛지(nudge)'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의 효력을 보여준다.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대신(이럴 경우 상당수는 더욱 유혹을 느낀다.) 뚜껑을 덮어 시각적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다른 것으로 흥미를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정책에 적용해보면, 민주화된 정책 환경에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규제는 반감을 살 것이고,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예산제약이 따를 것이기에,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패턴을 읽어 그들 스스로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성실납세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정책에 다양한 넛지를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인 열 명 중 아홉 명은 세금을 제때 내고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세금을 내지 않은 매우 소수에 속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세금고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그런 문구가 없는 경우보다 5.1% 많은 세금이 걷혔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 다른 중요한 것은 없을까?

근간의 실험에서는 3~5세 아이 28명에게 컵을 장식하는 미술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크레용이 놓인 책상에 앉게 한 후 조금만 기다리면 크레용 외의 다른 장식 재료를 주겠다고 했다. 이 중 14명의 그룹 A 아이들에게는 몇 분 후에 새로운 장식 재료를 주고, 다른 14명의 그룹 B 아이들에게는 재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사과하며 약속했던 재료를 주지 않았다. 이어진 고전적인 마시멜로 실험에서 그룹 A는 평균 12분을 기다리고 9명이 15분을 다 참아낸 데 비해, 그룹 B는 평균 3분을 기다리고 단 1명만 15분을 다 참아냈다.

이처럼 한번 잃은 신뢰는 다른 사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책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수용되기 어렵다. 한 사회의 구조개혁에 있어서도 정부와 국민, 이해당사자 상호 간의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지금의 양보가 일방적 희생에 그치지 않을 것을 믿고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참는 것이 누구에게나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

한편 최근의 새로운 실험에서는 고소득 가정의 고학력 엄마의 아이와 저소득가정의 저학력 엄마의 아이가 초콜릿(M&M) 실험에서 같은 판단력과 조절력을 갖고서도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발견됐다. 미주신경 긴장(vagal tone)으로 측정한 아이의 판단력과 조절력이 높을수록 상류층 아이는 더 오랜 시간을 참아냈지만 하류층 아이는 그 반대로 더 빨리 눈앞의 초콜릿을 먹는 쪽을 선택했다.

초콜릿을 언제 또 먹게 될지 불확실한 환경에서 살아온 아이에게는 눈앞에 있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누구든 물질적 결핍과 자아고갈 환경에서는 장기적 관점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들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교육과 함께 당장의 결핍 해소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인지능력 못지않게 인내심 등 비인지적 역량이 인생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조기개입의 필요성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한다. (사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hisamkim@gist.ac.kr

그들은 바쁘다 시즌2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이버 공간의 개인정보 지킴이





최윤정 과장

개인정보보호조사팀 4명, 인터넷윤리팀 6명을 포함한 총 18명의 베테랑들이 모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 집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사건 · 사고의 사후규제 업무들도 수행한다. 지난 2014년 1월 구글이 사전 동의 없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을 확인해 2억1,320만원이라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무단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고 삭제 과정 전반의 점검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직원이 미국 본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했다. 2014년 3월에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사고 직후에도 어김없이 현장조사가 진행됐고, KT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로 2015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CEO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 및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활용과 국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보다 쉽게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부터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까지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통신망상의 개인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됐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의 결과물로 자신이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잊히고 싶은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강화했다. 유럽에서 시작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센터'를 들어가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다른 여러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을 위한 정책들도 담당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ICT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한 부분으로서 위치정보산업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는 존재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위치정보 불법활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사업의 허가 · 신고 업무와 함께 위치정보보호 컨설팅 및 교육과 위치정보 스타트업 사업지원 등의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 · 집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 허가제를 완화하는 등 ICT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완화를 위해



(왼쪽부터)임종철 주무관, 권경하 주무관, 이용원 주무관, 손견우 사무관, 황지은 사무관, 이훈식 사무관, 이기훈 사무관



(왼쪽부터)유인설 사무관, 박은지 주무관, 황선철 사무관,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항 조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정보통신망법」위반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에 조사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조사팀을 둬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조사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인지하면 신속히 해당 업체를 조사해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제재하고 있다. 꾸준히 향상되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에 발맞춰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는 배달 등 생활밀접 분야 앱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내에 있는 또 하나의 팀인 인터넷윤리팀은 인터넷윤리 교육 및 홍보,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 유해정보의 차단과 청소년 보호, 불법스팸 대응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인터넷에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한국인터넷드림단,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밥상머리 인터넷윤리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인터넷윤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선포식과 배너 게시, 거리 캠페인, 초등학생 순회강연 등의 다양한 주간행사를 추진했다.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해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안심드림' 서비스와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불법스팸에 대한 정책 역시 인터넷윤리팀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기존 문자 위주의 스팸차단 시스템을 우회한 새로운 유형의 이미지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유통량을 대폭 감소시켰고, 불법적인 음성스팸 전화에 대한 차단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스팸문자를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스팸차단 시스템'을 이동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알뜰폰사업자까지 확대해 불법스팸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시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ICT융합 신산업의 핵심자산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무수히 많은 활용 방향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윤리과가 맡아 수행하는 업무도 이렇듯 매우 다양하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바삐 일하는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축으로서 오늘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뜨겁게 돌아가고 있다.

■ 글 · **권경하** 주무관



(왼쪽부터)정문효 사무관, 정일선 사무관,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이나은 주무관, 임수현 주무관



중국 반독점법 강화, 위협일까? 기회일까?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이재형 KDI 전문위원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등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일본의 독점금지법 등이 바로 그러한 법률이다. 그럼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은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을까?

그렇다. 중국은 지난 2007년 8월 30일 중국판 경쟁법인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제 햇수로 9년에 접어들었다. 다만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일반적인 시장경제와는 기본 인식과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어 반독점법의 특징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재형 KDI 전문위원의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은 중국 반독점법 시행의 의의와 특징, 평가를 비롯해 향후 전망, 장단기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짚어준다.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비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시장경제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한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단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반독점법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바탕 위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기능을 제고하고자 한다. 저자는 국가의 기능 및 역할과 시장원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능 및 역할을 더 중시하는 것이 반독점법의 기본적 사고방식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중국이 시장경제의 활용을 통해 과거 사회주의로부터 내려온 잔재와 폐해를 청산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바탕을 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됐다는 점에선 중국경제와 시장경제의 접면이 한층 더 넓어지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중국의 반독점법도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의 형성 및 강화의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와 관련해 선진 시장경제국가에서는 대부분 방해적 행위를 문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공평성(公平性)'의 관점에서 착취적 행위를 더욱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특징이 반영되어, 반독점법에서는 행정독점도 규제하고 있다.

중국이 반독점법을 제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경쟁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렇지만 막상 중국이 반독점법을 시행하자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도로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이루어진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퀄컴은 2015년 2월에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3,700억원의 금전적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중국경제를 정부 주도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는 시진핑 정권은 앞으로도 반독점법의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인데, 이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독점법의 집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반독점법의 정신과 그 규정들이 중국시장의 기본 질서 및 규정으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중국시장은 더욱 투명해지고 개방적으로 변모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에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중국시장의 경쟁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개방화 · 자유화의 폭이 확대되는 중국시장의 변화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에 따른 제재 가능성 증대라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반독점법의 내용과 집행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 22종 품질 비교 테스트

제품별 캡사이신, 나트륨 등 영양성분 및 중량 차이 보여

치킨은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다는 '치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와 매장이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배달음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브랜드별 제품정보가 부족하고 과다 영양 섭취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11개 브랜드의 2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매운맛 성분, 중량 및 안전성 등을 시험 · 평가했다. 시험결과 나트륨, 당류 등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는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한 먹는 양 조절이 필요했고 제조업체에서는 제품별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산가, 벤조피렌 등의 안전성 및 튀김유 관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_김보경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주임연구원 **정리**_편집실

* 본 기사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는 영양성분 함량이 높아

치킨은 염지, 튀김, 양념 등의 조리방법으로 인해 나트륨, 당류 등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는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 특히 양념치킨은 프라이드 및 구운 제품에 양념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양념 소스에 함유된 나트륨, 당류 등으로 인해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는 영양성분의 함량이 증가한다.

매운맛양념치킨은 한 마리의 나트륨 함량이 평균 3,989mg으로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2배 가까이 된다. 반 마리만 먹어도 나트륨, 포화지방 등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을 충족한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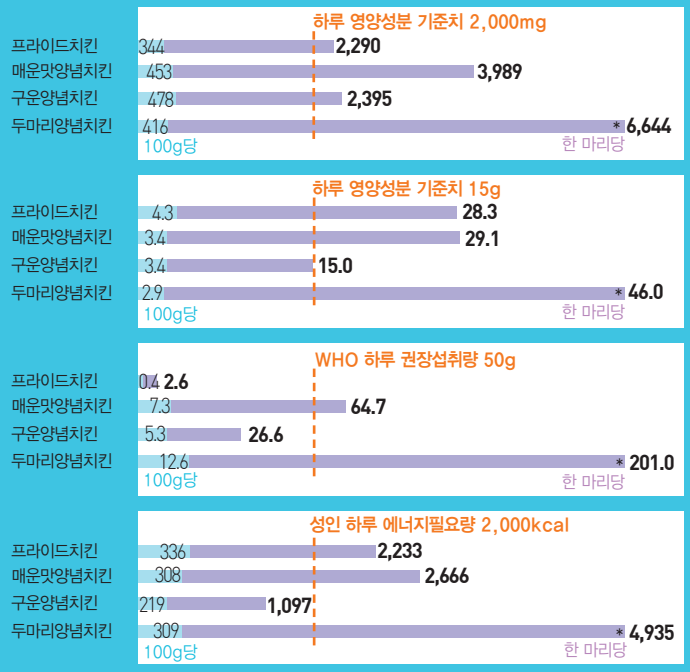
시험 대상 제품

- 프랜차이즈 치킨 11개 브랜드의 22개 제품

시험 평가 항목

- 영양성분, 매운맛 성분, 중량 및 안전성 등

하루 섭취량을 제한하는 영양성분 함량



※ 조사대상의 메뉴별 영양성분 시험결과 평균값이고, 구운치킨 · 두마리치킨은 영양성분 함량이 높은 제품의 시험결과값
* 두 마리 세트 제품의 두 마리에 대한 시험결과

우, 두 마리를 먹을 경우 나트륨을 최대 3.3배까지 섭취하게 된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과다 섭취 시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성인병 발생 위험이 높다.

매운맛양념치킨 한 마리의 평균 당류 함량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하루 권장섭취량 50g을 초과한다. 당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 당뇨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업체의 나트륨, 당류 등의 저감화 노력이 필요

2012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프랜차이즈 치킨 품질시험'에서 동일한 6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 1개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리카나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약 29% 저감화되었으나 나머지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20% 저감화 정책을,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당류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계의 자발적인 영양성분 표시 제공 노력 필요

치킨은 영양성분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정확한 영양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석 조리식품인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 11개 브랜드 중 7개 업체가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영양성분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였는데, 본 시험결과와 비교해 보면 교촌치킨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3개 업체는 일부 제품만 표시하고 있거나 표싯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커 개선이 필요하였다(2016년 5월 기준).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제조업체에 치킨의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개선을 권고하였고, 굽네치킨, 맘스터치, 멕시카나, 비비큐(BBQ), 비에이치씨(BHC), 페리카나, 호식이두마리치킨 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여 자율적 개선 계획을 통보해 왔다(2016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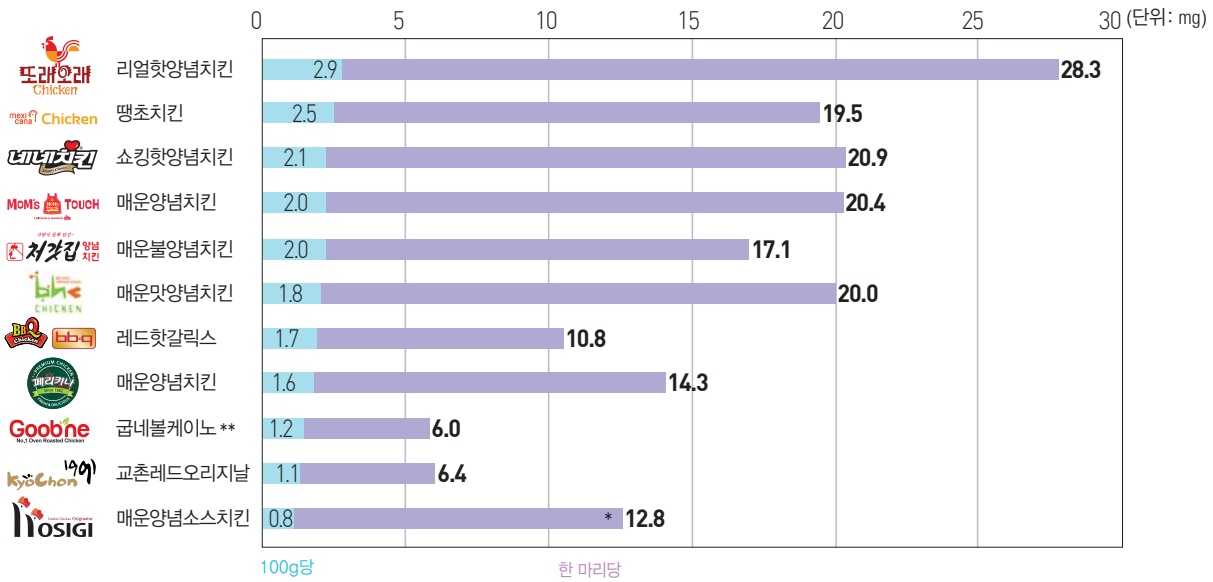
치킨의 영양성분 함량 확인과 먹는 양 조절할 필요 있어

과다 섭취되는 영양성분을 고려해 치킨의 영양성분 확인을 통한 치킨의 먹는 양 조절이 필요하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치킨을 간식 또는 야식으로 먹는다는 응답이 58.4%, 한 번에 반 마리 이상 먹는다는 응답이 68.9%를 차지했다.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류 함량은 가식부 100g당 제품별 최대 3.6배까지 차이

캡사이신류 함량이 가장 높은 또래오래의 리얼핫양념치킨은 100g당 2.9mg이었고 가장 낮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매운양념소스치킨은 0.8mg이었다. 캡사이신류 함량이 높을수록 매운맛이 강해질 수 있다. 캡사이신류 함량은 캡사이신(capsaicin)과 디하

브랜드별 캡사이신류 함량



* 두 마리 세트 제품의 두 마리에 대한 시험결과
** 매운맛 소스 추가 제공

이드로캡사이신(dihydrocapsaicin) 성분의 합으로 나타낸다.

두마리치킨, 양념치킨, 프라이드치킨, 구운치킨 순으로 중량이 많아

뼈를 제거한 치킨의 가식부 중량은 매운맛양념치킨이 평균 872g, 프라이드치킨은 평균 664g이었고, 굽네오리지널은 442g으로 가장 적었으며, 두 마리를 한 세트로 제공하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매운양념소스치킨은 1,597g으로 가장 많았다.

양념치킨은 프라이드 제품에 양념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추가된 양념만큼 중량이 증가하는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예외적으로 교촌치킨과 비비큐(BBQ)의 양념치킨은 프라이드 제품과 튀김옷의 종류와 양을 다르게 제조하는 등의 차이가 있어 양념치킨의 중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치킨 한 마리의 가식부 중량은 프라이드치킨 및 매운맛양념치킨 모두 비에이치씨(BHC)의 해바라기후라이드치킨(721g), 매운맛양념치킨(1,111g)이 가장 많았다.

산가, 과산화물가, 벤조피렌 시험결과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어서 조사대상 제품의 튀김유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경제

닭고기 부위별 100g당 영양성분 비교

부위종류 / 영양성분	날개	넓적다리	다리	가슴살
				
열량(kcal)	218	188	126	102
단백질(g)	17.5	17.0	18.2	23.1
지방(g)	15.2	12.3	4.3	0.4

* 국가표준식품성분표(농촌진흥청, 2001)



치킨 섭취 가이드



샐러드나 채소와 함께 드세요!

☑ 토마토, 당근, 양파 등의 채소에는 나트륨 배출 기능이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치킨과 함께 먹으면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빨리 느껴 치킨 먹는 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운 치킨 vs 튀긴 치킨

☑ 열량과 지방을 덜 섭취하기 위해서는 튀긴 것보다는 구운 치킨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튀긴 치킨을 선택했다면 껍질을 제거하고 살코기만 먹는 것이 열량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다.

* 열량(100g): 구운치킨 245kcal, 매운맛양념치킨 308kcal, 프라이드치킨 336kcal



맥주나 탄산음료 등과 함께 먹으면 열량이 높아진다.

☑ 단백질이 많은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으면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통풍성 관절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주의가 필요하고, 탄산음료와 양념치킨은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함께 먹으면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다.

* 열량: 맥주 500cc당 185kcal, 탄산음료 한 캔(250ml)당 110kcal

* 당류: 탄산음료 한 캔(250ml)당 약 20g

NOW



브렉시트, 신자유주의 종언을 고하나?

"유럽 대륙이 평화 · 안전 · 자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 된 유럽합중국을 건설해야 한다."

영국 총리직에서 물러난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채 가시지 않은 1946년 스위스 취리히대 연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수천만명의 희생자를 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럽의 단합을 호소했다. 70여년간 꾸준히 통합을 위해 나아가던 유럽연합, EU가 브렉시트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처칠의 염원과는 달리 그의 후손인 영국 국민들에 의해 영국은 EU를 탈퇴한 첫 번째 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경제』는 유럽통합의 역사부터 브렉시트를 불러일으킨 최근의 경제 패러다임을 집중 조명하고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정치 · 경제 상황을 분석해 봤다.

도입

전쟁의 상흔에서 '화합의 유럽' 이끈 EU… 브렉시트가 '해체' 불붙여



이종원
한국유럽학회 이사장
professore@daum.net

1950년 5월 9일 ECSC(유럽석탄철강체) 설립을 위한 슈망선언이 선포된 지 66년 만에 EU(유럽연합)호는 브렉시트라는 초대형 태풍을 만나 난파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의 보도와 같이 영국은 국민투표를 실시해 52%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아직 절차상 문제가 남아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된다면,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대표의 말대로 EU 탈퇴의 도미노가 일어날지, 아니면 라가르드 IMF 총재의 말대로 본격적인 EU 개혁의 시발점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1952년 ECSC 설립에 이어 1958년에 EEC(유럽경제공동체)가 창설된 이후 회원국은 원가입 6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돼 계속해서 EU 회원국은 28개국까지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탈퇴한 나라는 없었다. 하지만 EU 창설 이래 영국이 탈퇴를 결정하는 첫 사례가 돼 세계경제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유럽을 평화와 화해의 대륙으로 탈바꿈시킨 EU

먼저 최근의 브렉시트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유럽통합의 역사를 고찰해야 한다. 제국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명의 희생자를 냈고 유럽대륙은 그 전쟁의 무대가 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럽은 더 이상 세계의 주역이 아니며, 그 자리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국에 의해 대체됐고 자신들은 힘없는 약소국 집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에 따라 전후 유럽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유럽에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되겠으며, 보다 자유롭고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단합과 통합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프랑스에 의해 모네플랜(제2차 세계대전 후 피폐한 프랑스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경제학자 모네가 창설한 산업부흥 4개년 계획)이 제안됐으며 패전국인 독일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참가해 6개국의 ECSC가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쉬망의 제안으로 1952년 출범했으나, 영국은 참여를 거절했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 ECC가 결성되는 결실을 맺었으나 역시 영국 없이 6개국에 의해 출범했다. 본래 영국은 주권 침해를 우려해 유럽경제공동체에 참가하지 않



1993년 10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임시유럽연합위원회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의 유럽연합은 같은 해 11월 1일 출범했다.(사진 출처: 유럽연합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EU는 정부 간 협상주의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이끌어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럽건설의 비전을 구체화했다. 또 신규 회원국에 대한 가입조건으로 엄격한 민주화 달성 의무를 제시함으로써 유럽국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고 있었으나 1960년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설립되자, 전자의 성공을 직시한 영국은 1973년 오늘날 EU의 전신인 EC(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EC는 EU의 창설 근거가 되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발표했다. 기존 EC에 외교안보, 내무사법을 포괄하는 정치조직으로 발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EC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근거한 EU를 1993년 출범시켰다. 기존의 단순한 경제공동체에서 각 회원국의 정치, 경제, 법률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 · 외교 공동체로 발전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EU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과 반목의 분위기가 지배했던 유럽을 평화와 화해의 대륙으로 탈바꿈시킨 공로가 컸다. 정부 간 협상주의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이끌어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럽건설의 비전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공로로 노벨위원회는 EU를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EU가 유럽대륙에서의 평화와 화합, 민주주의, 인권증진에 기여한 바 크다.'고 밝혔다. 특히 1980년대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이 회원국에 합류하면서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이후 EU는 신규 회원국에 대한 가입조건으로 엄격한 민주화 달성 의무를 제시함으로써 유럽국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회원국 문호를 동유럽 국가로까지 확대하면서 동서 유럽 간 대립이 사라진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2013년 크로아티아까지 EU에 합류함으로써 내전의 상처가 남은 발칸반도의 화해와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졌다.

'Great Britain'에서 'Little Britain'으로 전락할 수도

브렉시트로 제기된 EU의 위기를 유럽국가들은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해체의 길을 갈 것인가? 영국 정치인들의 오판이 불러온 사태이지만, 그 결과 영국에서는 탈퇴파 잔류파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도자들의 동반사퇴가 발생했다. 따라서 재투표를 주도하거나 의회에서 투표결과를 번복할 지도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잔류를 희망하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문제가 남아 자칫 'Great Britain'이 'Little Britain'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즉 국가주권 우선주의 국가인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탈퇴 도미노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국가의 동조 여부는 EU를 탈퇴한 영국의 성패와 직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이 잘 된다면 다른 국가들이 따라나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두 남을 것이다.

EU의 위기는 주기적으로 오는데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기 때에는 더욱 적극적인 통합, 즉 EMS(유럽통화제도)를 통한 환율안정시스템 및 단일시장프로그램으로 1990년대의 재도약기를 만들었다. 2002년에는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더 나아가 단일통화를 창출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들로르 집행위원장,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슈뢰더 독일 총리 등과 같은 큰 지도자들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지도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답은 통합이다. 통합을 멈추면 자전거는 서게 된다.

영국의 석학 앤서니 기든스는 저서 「유럽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통합유럽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통합유럽을 위한 과정에는 여러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그가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불안정한 유로시스템이다. 독일과 그리스가 단일통화를 사용하면 후자의 경상수지 적자는 뻔한 결과이므로 재정이전이 없으면 동 시스템은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제안하는 대로 재정통합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문제는 민주주의 결핍과 리더십 부족이다. EU에는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공식적인 업무조직과 메르켈 독일 총리,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드라기 ECB 총재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이들 조직에서는 모든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고 결국 몇몇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회원국 국민들의 애국심이나 공동 시민정신을 요구하기 어렵다. EU는 개별 국가주권을 공동주권(common sovereignty)의 개념으로 바꾸는 사회과학 실험을 하고 있지만, 전통 주권국가의 관점에서 EU라는 체제는 모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흩어진 유럽의 개별국가는 약하고 유럽의 존재감은 작아지므로 결국 강한 유럽을 위해서는 연방제와 유사한 형태의 유럽연방주권이 그 대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아무리 강력한 브렉시트라도 유럽통합이라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번스타인의 말대로 '불협화음 다음의 아름다운 화음'을 기대해 본다.

NOW

경제 패러다임

브렉시트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soonchoi@kcmi.re.kr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은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을 걸었고, 월가 시위부터 최근 브렉시트까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신 및 불만 표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이점이 과잉 포장됐다면 현재 주요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모두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인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 또한 오판일 것이다."

2016년 6월 24일 영국은 EU(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예상외의 찬성 우세였다. 국민투표 결과 발표 직후 요동을 치던 세계 금융시장은 얼마 가지 않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최근 S&P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브렉시트의 후폭풍은 다소 가라앉은 듯하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한낮의 소동이 아니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기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류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표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 및 반감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있으며, 나아가 반(反)신자유주의 정서가 더욱 확산될 경우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고립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들을 일률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해석 또는 포장(framing)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조금 더 엄밀하고 냉정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진단이 올발라야만 효과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로 부각된 국제사회의 갈등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영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브렉시트의 찬성(Leave)과 반대(Stay) 진영은 직종, 소득, 연령 및 교육계층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렸으며, 국민투표의 격차는 3.8%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왜 영국 국민 간의 시각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인가? 그간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었고, 런던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으로 부상했다. 반면 EU 단일시장(single market)에 대한 접근에는 대가가 따르며, 특히 EU의 원칙인 '물건, 자본, 서비스,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영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20만명 가량의 이주민들을 수용해야 했다. 그러나 EU 통합에 따라 커진 경제적 파이와 수반되는 부담이 영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수혜계층과 소외계층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불만이 쌓였다. 결국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이러한 소외계층의 쌓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문제는 영국에서 드러난 현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이중노동시장 확대, 부의 양극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세력들은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기회 삼아 자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및 그리스에서는 EU 가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중동 난민 문제를 둘러싼 반이민자 정서는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극우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및 반이민자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Trump) 후보가 예상외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신자유주의 정서 확산돼

신자유주의 이념은 자유로운 시장원리의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소외계층의 쌓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사진) 지난 6월 15일 영국 런던 시내에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찬성지지 운동을 하고 있다.

작동과 정부 역할 · 간섭의 최소화를 표방한다. 신자유주의는 지난 4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진행돼온 탈규제(deregulation), 금융화(financialization) 및 세계화(globalization)의 근간이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레이건(Reagan)과 영국의 대처(Thatcher) 정권 아래 강하게 추진됐다.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신자유주의는 견제 없이, 때로는 거칠게 퍼져나갔으며, 그 전파 수단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동원되기도 했다. 무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에 경제적 기적을 일궈냈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개방, 민영화 등을 IMF로부터 강하게 '권고' 받았던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의 확산 과정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은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을 걸었고, 월가 시위(Occupy Wall Street)부터 최근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신 및 불만 표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이제까지 신자유주의를 주도해온 미국과 영국이 최근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가장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여기에 최근 IMF가 발간한 자료인 「Neoliberalism: Oversold?」에 따르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탈규제 및 금융화의 혜택이 그동안 과장되고 일부 신흥국에는 상황에 맞지 않게 강요됐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상황 불리하다고 글로벌 규칙을 임의적으로 바꿔선 안 돼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이점이 과잉 포장됐다면 현재 주요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모두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인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 또한 오판일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돼왔던 지난 40여년간에는 기술의 발전, 인구고령화, 지정학적 재구성 등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뤄졌고, 이러한 현상들은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이들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인과관계(causation)로 규명하기는 쉽지가 않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고용 없는 성장, 복지비용 증대 등의 문제를 얼마나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이민자를 둘러싼 논쟁은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종교, 인종 및 이념적 갈등이 섞여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신자유주의와 연계시켜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로 대응한다면 문제의 해결이나 갈등의 해소는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규칙은 공평하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특정 국가들이 중도에 힘의 논리를 남용해서 규칙을 임의적으로 바꾼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그 국가들은 정당성을 잃고 정치적 리더십을 실추하는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향후 전망

EU 해체는 자해행위, 문제점 보완할 개혁방안 모색할 것



김면회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mhkim@hufs.ac.kr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Brexit)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6월 24일 영국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의 51.89%가 EU 탈퇴를 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국 스스로 '영국 우선주의(Britain First)'를 앞세우며 유럽통합체로부터 이탈을 선택한 것은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의 과정을 지속해온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후 20일 만인 7월 13일 새 수상으로 테레사 메이(Theresa May)가 취임함과 동시에 영국은 이제 EU로부터 '질서 있는 퇴각'을 관리해 나갈 지도부를 구축했다. 예상보다 2개월 빨리 새 수상이 결정됨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 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가장 당혹해하는 나라가 다름 아닌 바로 영국이라는 점이다. 투표 이후 탈퇴를 주도한 세력들이 제시했던 공약 내용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투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투표하자는 서명운동에는 수백만명이 참여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은 노골적으로 잉글랜드와의 분리 독립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선거 분석 결과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브렉시트를 주도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지역과 소득 및 세대 차이에 따른 영국 사회의 분열 양상은 더욱 첨예화되는 모양새다.

국민국가와 초국가 단위가 병존하는 혼성체 EU

유럽은 과거를 반성하면서 색다른 실험을 감행해 왔다. 근대 정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과 '유럽의 부활'이라는 야심 찬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는 통합 유럽 구축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EU는 국민국가와 초국가 단위가 병존하는 혼성체(hybrid)로 운용되고 있다. 28개국이 모인 EU는 약 5억명의 인구와 전 세계 GNP의 약 25% 그리고 전 세계 상품 수출의 약 40%



지난 7월 20일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독일을 방문한 메이 영국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의장대를 사열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탈퇴를 의미하는 '넥시트' 및 '프렉시트'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핀란드와 폴란드 그리고 덴마크의 탈퇴가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70년 가까이 지속해온 유럽의 통합 노력이 브렉시트 하나로 수포로 돌아갈 일은 만무하다. 현대 정치의 출발 이래 유럽국가들은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를 담당하는 초국가적인 조직체다. EU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제1의 단일시장을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응집력을 과시해 국제무대에서 유력 행위 주체로 손색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간 공동보조를 맞춰왔던 영국이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EU로부터 연쇄적으로 탈퇴할 조짐이 감지되기도 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탈퇴를 의미하는 '넥시트(Nexit)' 및 '프렉시트(Frexit)'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연이어 핀란드와 폴란드 그리고 덴마크의 탈퇴가 점쳐지기도 했다. EU는 곧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불행한 과거가 재현되는 것을 막아내고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 가까이 지속해온 통합 노력이 브렉시트 하나로 수포로 돌아갈 일은 만무하다. 유럽 통합의 목적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처럼 국민국가가 중심이었던 과거의 역사가 평화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구획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경제 경쟁력의 면에서 불리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개별 국가별로 재구성되는 19세기로의 회귀는 유럽에 일종의 자해행위다. 현대 정치의 출발 이래로 유럽 국가들은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독일 및 프랑스와 함께 통합 유럽의 주요 국인 영국이 이탈함에 따라 EU의 위상이 일정 정도 추락할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EU는 이러한 흐름에 순응적인 자세만으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EU는 이미 브렉시트 이후 새로 조성된 조건 속에서 함께할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서고 있다. 브렉시트 직후 통합 원년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은 영국에 EU 탈퇴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통합의 중심을 새로이 다잡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할 태세다. 새로운 개혁 방안은 올바른 진단에 의해 채워진다. 국가성과 초국가성이 결합된 EU의 운영과정에는 많은 모순점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원국 간에는 여전히 이해 상충이 빈번하고, 제도 및 정책 간 불일치도 눈에 띈다. 정치학자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의 저서 「덫에 걸린 유럽」이나 국제관계학자 얀 지엘론카(Jan Zielonka)의 저서 「유럽연합의 종말」 속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함축돼 있다. 개혁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 앞으로 EU가 당면하게 될 문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긴축재정 갈등 · 불균형 발전 · 극우주의 해결이 관건

우선 EU 경제정책 노선 선택과 관련한 문제다. 주지하듯이 통화동맹을 추진해온 EU 경제정책의 기조는 긴축정책이다. 물가 인상률을 낮추고, 균형 및 흑자예산을 추구하며, 국가의 누적채무액도 절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제대국 독일이 이러한 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채무가 없는 정부 예산정책, 즉 '슈바르쯔 눌(die schwarze Null)'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 정책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련(기독교민주연합)과 사민당(사회민주당) 간에 다툼이 시작됐다. 여기에 프랑스 올랑드(Hollande) 대통령과 이탈리아 렌치(Matteo Renzi) 총리는 사민당 노선에 동조하고 있다. 가혹한 긴축 처방이 그간 EU에 대한 피로감을 가중시켰다고 평가하고, 회원국들에 대해 재정정책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주자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흐름과 관련된다. EU 내에서 정파 간에 EU 경제정책의 향방을 둘러싼 균열이 고조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둘째는 EU 회원국 간 불균형 발전의 해소 문제다. 유럽 통합은 기본적으로 각 영역에서의 동질성 회복과 확산 정신에 기초해 있다. 여기에 맞춰 지금까지 EU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와 유로존 경제 위기를 논하는 데 있어 EU 회원국 간의 불균형 발전이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유로존 내에서 독일의 경제적 독주가 문제되고 있어 '독일의 헤게모니'라는 표현까지 거론된다. 남북 및 동서 유럽 간 불균형 발전이 지속되고 경쟁력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통합 질서를 심화 및 지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브렉시트 이후 EU에 남겨진 주요 과제다.

세 번째 문제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득세하고 있는 극우주의 정치세력의 문제다. 극우주의의 득세는 북유럽에서 남유럽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대량의 난민 유입과 이슬람 조직에 의한 테러 행위에 대한 반작용과 아울러 광신적인 애국주의에 기초한 극우주의는 통합 유럽의 흐름에 커다란 장애물임이 분명하다. '민족주의의 폐해'를 경험한 유럽이 수십년간에 걸쳐 추진해온 초국가적인 지역통합체 구축 노력과는 결을 달리하는 극우주의의 지지세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의 문제 역시 브렉시트 이후 EU의 주요 과제인 것이다. 높아지는 이민자 반대 목소리와 국경통제 권한을 개별 국가에 반환하라는 요구에 EU가 해결책을 내놓는 일이 시급하다. 이러한 주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의 EU의 개혁방안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책이 있는 삶, 문화융성카드

전국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문화융성카드가 함께 합니다.





문화융성카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국민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출시된 카드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15% 할인,
프로스포츠/영화/국공립문화단체 공연 및 전시 할인, CJ ONE 포인트 적립

※ '문화융성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C카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bccard.com | BC카드 고객센터: 1588-4000
※ 서비스 제공 조건은 발급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ookstore Association | 비씨카드

START UP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estima7@gmail.com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는 사람. 흥미로운 스타트업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 취미. 전 조선일보 기자, 전 라이코스 CEO, 테크블로거로 '에스티마의 인터넷이야기' 운영



한국 스타트업에 M&A 제안은 '하늘의 별따기'?!

구글캠퍼스서울 임정민 총괄이 최근 쓴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엑싯하나."라는 블로그 글을 읽었다. 벤처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을 '엑싯(Exit)'이라고 하는데 보통 주식시장상장(IPO)이나 회사매각(M&A)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IPO나 M&A 모두 쉽지 않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다. 이 글을 읽으며 놀란 것은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 엑싯방법의 80%가 M&A인 데 반해 한국은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가 정확한지는 조금 미심쩍지만 그만큼 한국에서 M&A가 적다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2009년부터 3년간 미국에서 인터넷포털 사이트 라이코스에서 CEO로 일했다. 당시 미국업계의 활발한 M&A 활동에 대해 감탄한 경험이 있다. 라이코스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나 게임포털 서비스를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여러 번에 걸쳐 받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한번은 홈페이지 서비스업계의 경쟁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비슷한 성향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비스를 인수해서 스케일을 키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딜이 성사되진 못했다. 그런데 그 인수제안을 했던 회사는 2년 뒤 더 큰 업계회사에 1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다. 우리 게임포털을 인수하고 싶다고 연락한 곳은 뉴욕의 작은 부티크펌이었다. 어떤 큰 대기업이 작은 게임회사 인수가 필요해서 찾고 있는데 자신이 그 프로젝트를 의뢰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게임포털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대기업에 제안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우리같이 작은 서비스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고 했더니 인터넷 시장조사데이터를 통해 우리 게임서비스의 지표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연락했다는 것이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M&A를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 기억이 있다.

내가 라이코스 CEO로 부임하기 전에도 라이코스는 두 개의 서비스를 각각 300억원, 250억원에 매각한 일이 있다. 그리고 라이코스는 결국 인도회사에 남은 회사 전체를 2011년에 매각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미국에서는 M&A가 대단히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 이처럼 미국기업에 M&A는 빠른 기업성장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워낙 M&A가 일상화돼 있다 보니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시장을 조사하고 관련된 회사 인수에 즉각 나서는 것이 미국의 기업이다. 그 덕분에 실력 있는 스타트업들에 좋은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스타트업을 해도 인수제안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대기업이 비슷한 아이템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행이다. 설사 회사 매각을 하고 싶어도 관련 도움을 받고 협상과정을 도와주는 인수전문 프로페셔널회사가 별로 없다. 인수제안이 있어도 거의 다 헐값이다. 그동안 쌓아온 무형의 가치에 대가를 지불하는 데 극히 인색하다. 기업정보가 투명하게 나오지 않는 불신사회다 보니 인수회사도 피인수회사의 정보를 믿지 않는다. 외국회사들에 배타적이며 영어로 제공하는 정보도 부족하고 의사소통도 잘되지 않다 보니 외국회사들도 한국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꺼린다. 갈수록 더 M&A 기회가 적어진다.

M&A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인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우선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빠른 성장을 위해 외부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제값을 주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결국 M&A를 잘하는 회사가 글로벌기업이 된다. 구글이 창사 이래 지금까지 행한 주요 M&A는 거의 200회가 된다. 물론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겠지만 그중 안드로이드와 유튜브가 나왔다. 안드로이드와 유튜브가 없는 구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M&A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노화 뇌질환 특화 뇌지도 만든다

뇌과학 발전전략

권석민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장 smkwon@korea.kr

뇌연구는 뇌신경생물학과 인지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뇌 작동의 원리를 파악해 뇌질환 극복 및 공학적 응용에 활용하는 연구 분야로서,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이 분야를 미래유망 과학적 도전 분야의 하나로 인식하고 지원 · 육성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뇌연구의 과학적 · 의학적 · 산업적 잠재력에 주목해 기술주도권 선점을 위해 국가 대규모 장기 연구프로젝트 착수를 통해 뇌지도 구축, 인간의 사고원리 규명, 각종 뇌질환의 규명과 치료법 개발,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기술에 기반을 둔 뇌공학적 응용, 뇌모방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등에 연구와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차세대 AI와의 연계 뇌연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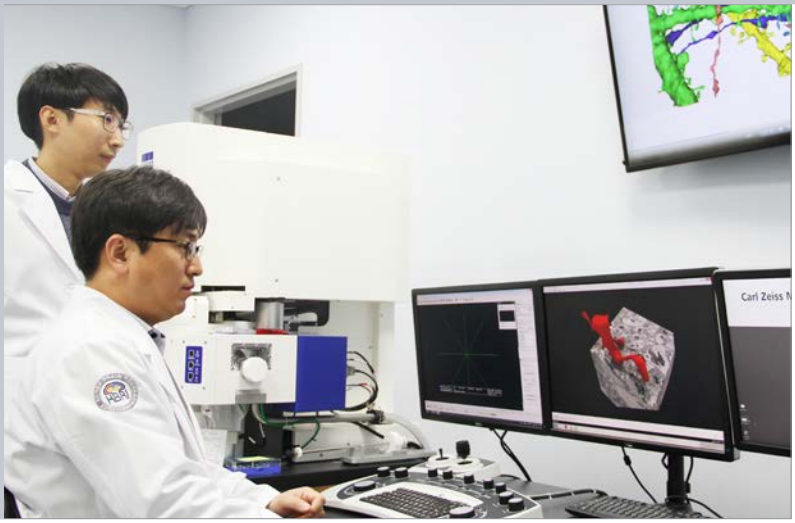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1998년 「뇌연구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수립, 한국뇌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설립, 뇌 분야 연구사업 추진 등 뇌 분야 연구의 체계를 잡고 투자확대를 도모해 왔다. 이를 통해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상위권 수준의 연구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미국 등 뇌연구 선도국가들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시대에 대비해 뇌과학 분야가 미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유력한 블루오션 중 하나로 인식됨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필요성이 증대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뇌연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정책 및 연구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해 우리나라 뇌과학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 도출을 검토해 왔으며, 뇌연구자 워크숍, 공개포럼,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5월 말 '뇌과학 발전전략'을 수립 ·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뇌과학 발전전략은 '2023년까지 뇌연구 신흥강국으로 도약 준비'를 위해 특화 뇌지도(Brain Mapping) 등 핵심 뇌기술 조기확보와 뇌연구 생태계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선진국 대비 72%인 뇌연구 분야 기술수준을 202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특화 뇌기능 지도 구축 · 활용, 세계시장 선점 가능한 제품 · 서비스 등 세계 최고수준의 뇌연구 대표성과도 10건 이상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뇌과학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R&D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 특화 뇌지도를 구축한다. 뇌지도는 뇌의 구조적 · 기능적 연결성을 수치화 · 시각화한 데이터베이스(DB)를 지칭한다. 뇌지도가 있다면 특정 뇌부위 · 뇌회로의 변화와 긴밀히 연관돼 있는 뇌질환의 정확한 진단 ·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소 뇌자극술 등 새로운 방법의 뇌질환 치료기술이 확장되고 있어 뇌지도는 어떤 뇌부위 자극이 뇌질환 치료에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좌표 제공이 가능하다. 선진국들도 향후 뇌지도 활용시대 관련 신시장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및 연구여건에 따라 전체 뇌지도, 특화 뇌지도(특정 동물, 부위 등), 수준별 뇌지도 등의 구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위 뇌기능 특화 뇌지도, 노화 뇌질환 특화 뇌지도, 뇌지도 작성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미래선점 뇌융합 챌린지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뇌연구의 융합형 추세가 급속히 심화됨에 따라 국내외 기술수요 예측과 파급력, 성장 가능성, 사회적 시급성 및 국내 연구기반 등을 고려해 5년 내에 가시적인 실용화 성과 도출이 가능한 융합형 뇌연구과제를 적극 발굴 ·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단위 뇌세포 분자수준 이미징기술, 미니뇌



한국뇌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3차원 전자현미경으로 뇌세포 구조를 관찰하고 있다.(사진 제공: 한국뇌연구원)

'뇌과학 발전전략'은 2014년 기준 선진국 대비 72%인 뇌연구 분야 기술수준을 202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특화 뇌기능 지도 구축 · 활용, 세계시장 선점 가능한 제품 · 서비스 등 세계 최고수준의 뇌연구 대표성과를 10건 이상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가노이드) 제작 · 활용기술, ICT 융합을 통한 뇌기능 증진기술, 로봇팔 제어를 위한 뇌감각 신호 활용기술, 한국인 특이적 뇌질환 치료기술 등이 도출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망과제를 발굴 · 지원해 나갈 것이다.

셋째, 차세대 인공지능(AI)과의 연계 가능 뇌연구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약을 위해서는 인간 뇌의 작동원리 연구를 통한 자연지능(NI; Natural Intelligence)과 인공지능의 연결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뇌연구 결과를 인공신경망 모델링 및 우수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뇌 유사 컴퓨터시스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각판단 회로 연구, 감각지능 통합 인지회로 연구, 감성지능 회로심화 연구, 뉴런칩 활용 신경회로망 원리 연구 등의 심화를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에의 착안점(inspiration)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뇌질환 극복 R&D를 추진한다. 고령화 사회 심화에 따라 사회적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등 뇌질환 극복을 위해 주요 뇌질환 기전 규명, 진단장비 및 종합적 진단 · 치료기술 개발과 함께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소아청소년기 질환(자폐, 정신지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학 개념을 뇌질환에 도입 · 적용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자의 뇌지도 정보에 기반을 둔 생애주기별 맞춤형 뇌질환 극복기술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융합형 전문 연구인력 양성

뇌연구 생태계 기반도 확충한다. 우선 최근 뇌과학이 IT · NT · BT 등 기술과 접목한 융합연구 추세로 발전함에 따라 관련 학 · 연 협력 프로그램 확대, AI · 컴퓨터 · 계산과학 등 이종 분야와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 확대 유도, 뇌의학 분야 중개임상연구 전문가 양성 지원확대 등을 통해 융합형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뇌연구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병원 이외의 연구기관에서 뇌조직을 이용한 뇌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뇌은행 운영규정 및 윤리지침 등을 제정하고, 연구용 뇌조직의 안정적 확보 및 뇌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가 가진 뇌연구 강점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뇌연구 컨소시엄 및 학술대회 구성 · 운영을 적극 주도하고, 뇌지도 작성기술 표준화와 뇌지도 공유 등 목적 지향적인 전략적 네트워킹을 위해 한 · 중 · 일 뇌지도 작성 컨소시엄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뇌산업화 모델 및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뇌연구 분야 중 조기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뇌연구 · 산업 분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클러스터 조성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뇌과학 발전전략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도래에서 뇌과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뇌연구에서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연구도약 방안, 뇌과학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발전전략상의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개방형 · 융합형 · 선도형 연구추진 전략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산 · 학 · 연 · 병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조기에 성과도출을 도모하고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량 소비시장 확대로 양잠산업 성장 가속화

2차 양잠산업 육성계획(2016~2020년)

홍성진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omega4u@korea.kr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년)한 이후 양잠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5년 현재 시장규모가 4천억원에 이르며, 2020년에는 6천억원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양잠 생산도 6,378농가, 2,254ha에 이르며 양잠산물도 누에, 오디, 뽕잎과 같은 1차 산물뿐만 아니라 초콜릿, 탄산음료, 오디꿀, 반건조 오디식빵 등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에 양잠산업 육성 1차 계획을 수립하고 양잠종합단지(영천, 철원), 누에 인공사료시설 현대화(대한잠사회), 저온유통시설(13개소) 등 생산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주산지(부안, 영천 등)에 가공시설을 신축하고 체험확대를 통해 양잠산업의 6차산업화 토대를 구축해왔다. 또한 산청양협, 충북누에산업 RIS사업단(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등을 통해 캐나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수출하면서 고급 양잠산물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R&D 추진을 통해 용도별 누에 · 뽕나무 품종육성, 가공기술 개발, 기능성 · 의료용 소재(차폐막, 인공고막, 천연항생제) 개발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양잠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잠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잠산업 규모가 타 산업에 비해 작고, 생산시설(잠종시설, 잠실, 잠구 등)이 노후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신 가공시설이 부족(차, 환 등 단순가공 위주)해 양잠산업의 6차산업화와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양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생산된 양잠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조직, 젊고 숙련된 양잠 농업인의 육성, 양잠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표조직인 대한잠사회의 역량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양잠산업 규모 6천억원으로 늘리고 6차산업화 단지 6개소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양잠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수차례 워크숍 및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2차 양잠산업 육성계획(2016~2020년)'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 5년 후 양잠산업 시장규모를 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6차산업화 단지를 현재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수출기반 대량 소비시장 창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유통 · 생산 고도화, 미래 먹거리 발굴(R&D), 산업인프라 확충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12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양잠 특화단지(주산지)를 지역단위 6차산업단지(생산, 가공, 체험)로 전환해 농가소득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분야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수립한 후 지자체, 생산자단체, 산업체, 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양잠축제와 겨울철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양잠산물 수출 확대와 국내 양잠산물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할랄식품(중동), 기능성 제품(일본, 중국), 누에 · 오디가공품(미국, 캐나다) 등 국가별 맞춤형 제품을 발굴하고 국제박람회 참석,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등 수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익은누에(숙잠) 등 다양한 양잠가공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공영홈쇼핑 등 국내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양잠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북 부안군 유유마을에서 '제2회 부안참뽕축제'가 열렸다.

이번 대책은 향후 5년 후 양잠산업 시장규모를 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6차산업화 단지를 현재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수출기반 대량 소비시장 창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유통 · 생산 고도화, 미래 먹거리 발굴(R&D), 산업인프라 확충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12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고, 유통 및 생산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잠산물의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고,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재배 매뉴얼 보급과 자체 품질보증제(대한잠사회) 도입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잠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디자인을 개선해 양잠제품의 고급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화된 누에씨 생산시설, 잠실(蠶室; 누에 치는 방)을 현대화하고 상묘업체 시설 · 장비 지원을 통해 양잠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출 확대 위한 가공 · 유통기술 연구 및 실크이용 고부가 소재 개발

넷째, 6차산업화, 수출 등 현장기반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6차산업형' 누에 · 뽕나무 품종 육성,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 · 유통기술 연구 및 양잠산물 유래 건강기능성 구명 및 소재화 연구, 3D 프린트 성형소재 등 실크이용 고부가 소재를 개발할 것이다.

다섯째, 인력양성, 역량강화, 제도개선 등 산업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양잠 농업인은 60대 이상이 74%(농업 전체 50%), 평균연령이 66세로 노령화되고 있어 현장실습장, 농고 · 농대 체험교육, 온라인 교육활성화 등을 통해 예비 양잠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잠농가를 대표하는 대한잠사회의 정책 · 교육 기능을 강화해 양잠산업을 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6차산업 및 가공품 생산관련 통계조사 강화로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 양잠교육 · 훈련기관 지정, 6차산업화 및 수출지원 등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잠산업 발전대책을 원활히 추진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17년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한 양잠산업이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친환경 농업, 기능성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공공과 민간의 윈윈 모델,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ks06@korea.kr

최근 임대주택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월세 거래량에서 보증부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나타나 2011년 대비 11.2%p 증가했다. 재고주택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확연히 나타나는데, 불과 5년 전인 2010년만 해도 50%에 미치지 못했던 월세 비중은 2014년 현재 5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먼저 주거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79.1%로 나타나 2012년 조사보다 4%p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 층일수록 자가소유에 대한 인식이 떨어졌다. 이와 함께 경제여건 변화도 월세 증가 추세와 관련이 있다. 저금리 기조 확산으로 임대주택 공급자들의 사용수익(운영수익) 선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신규 투자 유인 감소 등은 전세보다는 월세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있다. 결국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제구조 변화로 월세 중심의 임대주택 시장 형성은 피해갈 수 없는 시장의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월세 임차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연 11~12만호를 공급해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인 약 5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공급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가구 기준을 중위소득의 33%에서 43%까지로 확대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했다. 동시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정착을 위해 2017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한 사업부지도 확보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임대주택 공급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청년층, 노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하다. 또한 2분위 이하 무주택가구 184만가구 중 51만6천가구가 아직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을 위해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제한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통해 서민 ·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해 저소득층, 청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수혜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도심 내 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지원주택'을 개념화했다. 공공지원주택이란 소유 · 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국가의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즉 민간이 도심 내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공공지원을 통해 일정수준의 투자수익을 얻게 한다는 전략이다. 만약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투자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그간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이 고민하던 재정적 부담 문제와 임대주택의 적소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이러한 공공지원주택의 대표적 사업으로 발표됐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간단히 말해 민간이 저렴한 임대주택, 시세 80% 수준의 임대주택을 도심 내에서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민간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정부는 매입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면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준다.



사진은 지난 7월 14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설명회(사진 제공: 한국주택공사)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공공과 민간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공공지원주택의 새로운 모델이다. 최근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민간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해당 자금을 복지안전망에 투입함으로써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보장해주는 수익의 수준은 시장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투자 상품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다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다. 대신 정부는 수익의 변동성을 없애고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즉 본 사업은 낮은 위험 · 중위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돼 시장의 다양한 투자 상품과 경쟁하도록 했다. 한편 민간이 지급받는 확정수익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돼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민간은 도심 주요 입지의 물건, 운영수익이 높은 주택을 매입대상으로 선정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안정적인 중위 수준의 확정수익을 원하는 민간의 수요를 통해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시세 80%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집값의 20%만 있으면 매월 확정수익 받아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크게 임대주택 취득 지원과정, 임대위탁관리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임대주택 취득 지원과정은 주택을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민간(이하 집주인)의 매입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매입비용 지원은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LH 보증금 선지급을 통해 진행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는 연 1.5% 금리로 매입비용의 50%까지 지원되며, 한도는 다세대 등 85㎡ 이하인 공동주택 1호당 8천만원, 다가구 1호당 4억원이다. 한편 LH는 집주인과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확정수익을 매달 지급하게 되며, 이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입비용에 충당할 수 있게끔 한다. 지급하는 보증금 규모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의 60%까지 설정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가 매입비용의 50%까지 이뤄지면 LH의 보증금은 매입비용의 30%까지 지급된다. 따라서 집주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감정평가 기준 1억6천만원 이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매입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감정평가 결과 1억6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의 자부담분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결과 2억원인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가능 한도는 8천만원이며, 보증금 한도는 4,800만원이므로 집주인은 나머지 7,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은 8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융자총액의 10%를 상환하는 경우 2년간 상환시점이 연기된다.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 및 LH의 보증금 선지급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LH와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LH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대관리를 위탁받게 되는데, 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즉 집주인의 임차인은 LH가 되므로 공실이 나도 LH는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LH와 집주인 간 체결할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 수준의 결정이 문제된다. LH는 보증부월세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주택취득 당시 집주인이 원하는 보증금 수준을 듣고 이에 따라 해당 물건지의 전환이율과 보증금비율을 반영해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월세에서 집주인의 기금융자이자 또는 원금 상환분, LH임대관리 수수료(월세의 5%) 등을 공제하고,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할 확정수익을 결정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위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집주인은 세후 5%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한 반려동물 유통체계 세운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 yskim@korea.kr

전국 19개 경매장은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 감독은 다소 미흡하다. 이에 경매를 동물판매업에서 별도 분리해 경매 특성을 반영한 시설 · 인력기준, 영업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생산 및 유통업체만 경매 참여를 허용했다.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 의무화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기준 이하의 병들거나 문제가 있는 반려동물이 거래되는 것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약 1천만명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펫사료, 펫용품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2012년 9천억원에서 2015년 1조8천억원, 2020년에는 5조8천억원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2015년 8만2천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투견, 폭행, 잔혹한 살해 등 동물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아지 공장'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여기에 애견카페, 보관업, 훈련업 등 신규 서비스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인한 관리 소홀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지연돼 반려동물에 대한 법 ·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TF를 구성해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관련 업계 · 단체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의 폐사 · 질병 문제 야기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의 개념이 없어 이를 새롭게 정립하고 영업 대상 반려동물의 범위를 현행 개 · 고양이 · 토끼 · 페릿 · 기니피그 · 햄스터에서 조류 · 파충류 · 어류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했으나 신고비율이 20%에 미달하고 비위생적인 운영으로 반려동물의 폐사 · 질병 등의 문제를 야기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 동물생산업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사육 두수 및 면적, 영업자 준수사항, 미 허가업체의 벌금 상향 등을 추진하며, 적법한 생산업체에 대해선 새로운 생산업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자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한 반려동물 유통체계도 확립한다. 연간 30만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펫숍으로 유통하고 있는 전국 19개 경매장은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 감독은 다소 미흡하다. 이에 경매를 동물판매업에서 별도 분리해 경매 특성을 반영한 시설 · 인력기준, 영업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생산 및 유통업체만 경매 참여를 허용했다.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 의무화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기준 이하의 병들거나 문제가 있는 반려동물이 거래되는 것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의 경우 불법 판매업체들에 의한 분양사기, 운송 중 상해, 보상수단

부재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적법한 동물판매업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온라인 판매를 통해 반려동물이 일반 상품처럼 거래되는 것을 막고, 배송과정에서도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판매자가 해당 동물을 직접 전달하게 하는 등 반려동물 운송 관련 기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보상기준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서식도 마련해 폐사 · 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고 개체관리 카드 서식을 보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반려동물 이력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규제완화 · R&D 지원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동물병원과 관련해선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진단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진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동물보험 개발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등록제 대상을 현행 3개월령 이상 개에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진료비 공시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人)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 · 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 · 수입관리자 자격부여도 추진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유통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 · 사료 산업은 전체 시장에서 절반 이상(53%)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 비중이 60% 이상을 넘는 등 국내 관련 산업계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이 미흡한 상태다. 이에 펫용품의 경우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박람회, 해외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며, 사료의 경우 곤충류 원료범위를 확대해 곤충을 이용한 고품질 사료 개발과 유기농 펫사료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동물병원의 대형화 · 전문화 추세에 따라 동물의 진료 · 관리 보조인력도 약 3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비진료 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진료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동물병원 내에서 활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해 애견카페, 보관업, 훈련업 등 신규 서비스업의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17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악동견 슈퍼독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아름다운 공존, 반려견 문화교육'에서 시민들이 반려견 행동교육을 실습하고 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 조성한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체에 의해 화장 · 건조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장묘업체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으로 사체를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 신설을 통해 동물장묘업의 시장진입을 완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보호자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 · 배포해 동물유기 억제 및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강화해 나가며 유기동물 보호수준이 높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 조직 등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어려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관련 업종 용어도 국민정서에 맞게 순화할 것이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보호, 국민의식 개선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며, 반려동물 관련 통계조사 항목도 추가하고 표본도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중심으로 개편

중소 ·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대책

박용순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장 soulmat4416@korea.kr

정부는 지난 7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 ·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 · 벤처기업 R&D 역량 강화,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하에선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는 2000년도에 세운 2조211억원을 경신하며 사상 최고액인 2조858억원을 기록했고, 벤처펀드 역시 2조6,26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벤처펀드의 출자자 구성을 보면 모태펀드, 기금 등 공적기관을 제외한 민간자금의 비중은 50% 후반대에서 수년간 답보상태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벤처투자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펀드의 공적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등 벤처생태계 민간 주체들이 벤처펀드 출자와 창업 · 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벤처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모태펀드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70%에서 60%로 낮춘다면 민간자금이 10%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모태펀드가 출자할 벤처펀드를 선정할 때 민간자금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콜옵션도 확대한다. 콜옵션이란 민간 출자자가 모태펀드의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벤처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미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민간 출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민간은 출자비율을 높이면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이 벤처펀드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부분일 것이다. 그간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에는 소득공제나 양도차익 비과세 등 혜택이 있었으나 법인은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법인이 벤처기업 · 펀드 등에 투 · 출자를 할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감면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투 · 출자 금액을 설비투자 · 임금증가 · 배당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 양도대금을 다른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과세이연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의 80%를 6개월 이내에 재투자해야 했다. 현실적으로 6개월 이내 재투자하기란 무리여서 그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술혁신형 M&A 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도기업이 비상장기업일 때 그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인수해야 하며 매수금액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는데, 이 요건을 각각 30%와 5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VIP고객의 돈을 집합투자기구(펀드)로 만들어 벤처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벤처펀드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현재까지는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와 벤처펀드 출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6월 14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한국 중소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왼쪽부터)옴카람 날라마수 어플라이드 벤처스 회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대표(사진 제공: 중소기업청)

앞으로는 법인이 벤처기업 · 펀드 등에 투 · 출자할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감면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투 · 출자 금액을 설비투자 · 임금증가 · 배당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한다.

자자 수를 모두 합해 출자자 수를 산정해 왔다. 이렇다 보니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고액 자산가가 많은 경우 출자자 수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앞으로는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이 펀드의 10%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1명의 출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벤처캐피탈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집합투자기구를 여럿 모아 벤처펀드를 결성하기가 용이해진다.

벤처투자의 중요한 투자처 중 하나는 대학,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원천 · 고급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 · 벤처기업이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대학 · 연구소가 소유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데,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결성해도 그 자회사에 투자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에 있게 되는데, 남의 돈을 모아 사익을 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벤처펀드의 특수관계 거래가 엄격하게 금지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지주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비상장 스타트업을 위한 장외시장 개설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 ·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올해 도입된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가 금지돼 왔다. 앞으로는 광고금지 규제가 폐지돼 보다 많은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창업초기 기업이 자금조달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비상장 스타트업을 위한 장외시장(KSM; KRX startup Market)도 개설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벤처투자 방식도 인정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벤처, 창업기업 등에 보통주 · 우선주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만 투자로 인정돼 왔다. 우선적으로 교환사채가 투자의 한 방식으로 인정될 것이고,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도입도 검토될 예정이다. 컨버터블 노트는 국내「상법」에 아직 없는 제도인데, 미국에서 창업초기 투자에 아주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컨버터블 노트의 가장 큰 특징은 노트를 처음 발행할 때 전환가격이 정해지지 않고 후속투자자가 산정하는 기업가치에 따라 그 전환가격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사실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기업가치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투자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컨버터블 노트를 활용하면 처음에 일단 투자금만 주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투자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대책을 계기로 벤처투자시장에 보다 많은 민간자금이 유입되고, 창업 · 벤처기업들이 보다 많은 투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업 ·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법령 개정 등 대책의 이행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인들이 흔히 궁금해 할 만한 사회현상을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소믈리에'처럼 섬세하게 감별해 소개한다.

남녀평등과 가계소득 불평등의 이상한 공존

선택결혼과 소득 불평등

* 참고문헌
• Jeremy Greenwood, Nezih Guner, Georgi Kocharkov and Cezar Santos, "Marry Your Like: Assortative mating and Income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 No. 19829,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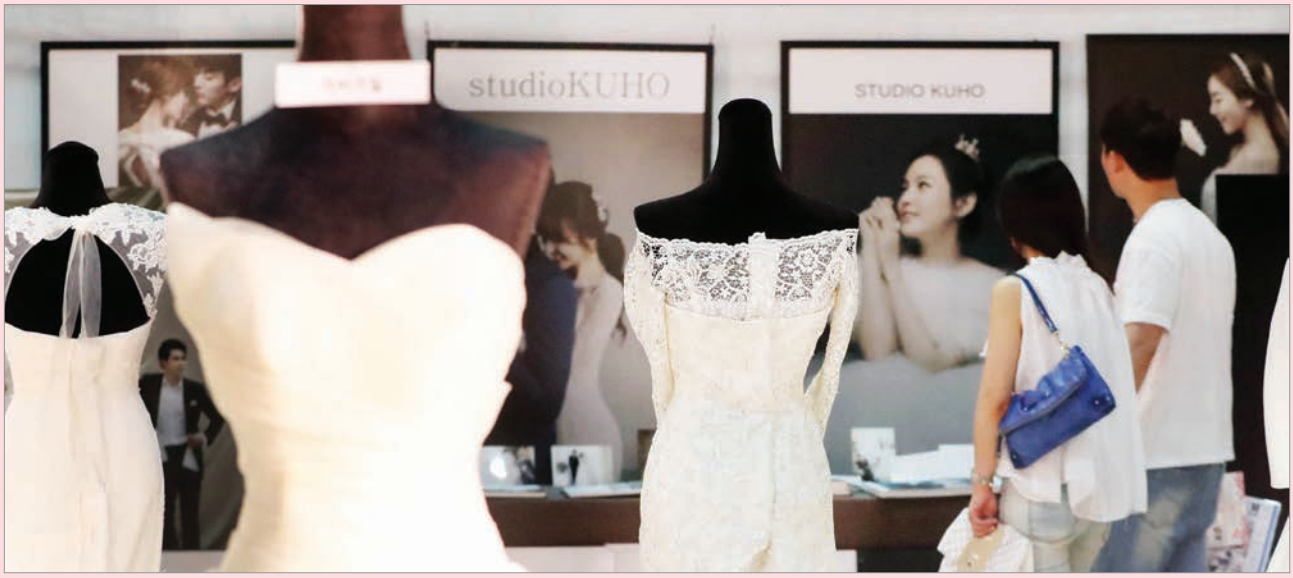
인간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남녀를 구분 짓는 특이한 성염색체 한 쌍, X와 Y가 있다. 한 쌍이라 보기에 그 크기와 모양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두 염색체는 생물의 성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 같은 사실이 1905년 미국 여성 생물학자 네티 스티븐스가 밝혀내기 전까지 생물학자들은 성별이 생물의 수정 당시나 배아 발달 초기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다.

1960년 vs 2005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가계소득 기여도

그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Y염색체는 X염색체에서 퇴화된 유전자로 단지 성별만을 결정할 뿐이며 X염색체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인식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던 시대에 Y염색체 발견은 당시 극단적인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남녀 간 선천적 지적 능력이 생물학적으로 부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사람의 X염색체는 2천개의 유전자를 담고 있지만 Y염색체는 78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05년 스티븐스의 Y염색체 발견으로 남성의 우월의식은 적어도 생물학적인 면에선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남녀평등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인식 개선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임금 상승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남녀 간 불평등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제 남녀 간 불평등이 사라진 그 자리에 선택결혼으로 인한 가계소득 불평등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미국 펜실베니아대 제레미 그린우드 경제학 교수를 비롯해 네지스 거너, 조지 코차코브, 시저 산토스는 지난 2014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를 분석한 「Marry Your Like: Assortative mating and Income Inequality」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60년과 2005년 결혼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와 가계소득 기여도에 대한 변화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1960년에 결혼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도는 낮았고, 일을 하더라도 가계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남성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가계소득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45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임금 상승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남녀 간 불평등이 상당부분 좁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살펴보면 2015년 여성 고용률은 49.9%로 2014년 49.5%에 비해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



지난 7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웨덱스 코리아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부부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도 21.2%p로 2014년보다는 좁혀졌다. 1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2015년 178만1천원으로 남성 임금의 62.8% 수준이며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2015년 68.0%로 2014년 67.7%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임금 상승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끼리끼리 만나는 선택결혼, 가계소득 불평등 심화 야기해

제레미 그린우드 교수의 보고서는 고학력 여성은 고학력 남성과, 저학력 여성은 저학력 남성과 결혼하는 선택결혼(assortative mating), 이른바 동류교배(표현형이 같은 상대나 상대적인 몸 크기, 순위 등이 매우 유사한 상대 간 배우관계가 성립되는 것 또는 그러한 상대를 좋아하는 것)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남녀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고임금 여성이 계속 늘어나고, 이들이 고학력 · 고임금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계소득은 저학력 · 저임금 남녀가 만난 가정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됐다. 1960년대에는 고학력 여성이라도 남성에 비해 받는 임금이 적었고 출산과 육아기에 접어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짝을 이루는 선택결혼을 하고 있었지만 가계소득에 대한 기여도는 그리 크지 않았고, 따라서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작았다. **제레미 그린우드 교수는 1960년과 2005년에 만약 남녀 간 결혼이 '선택(assortative)'이 아닌 '무작위(random)'였다면 소득 불평등도가 얼마나 개선됐을지 분석했다. 예상대로 1960년은 별 차이가 없었지만 2005년은 지니계수**(가계소득의 계층별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계수로 0에 가까우면 소득분배가 균등하고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하게 이뤄졌다는 뜻)**가 0.43에서 0.34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부터 2013년까지 4만 가구 이상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 및 자산수준을 비교한 윌리엄 에몬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수석경제고문의 보고서도 선택결혼에 따른 가계소득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도 고학력자 가정의 소득과 자산은 늘어나지만 고등학교 미만 학력을 가진 가정의 소득 및 자산 규모는 감소해 가계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녀평등이 자리 잡아 갈수록 선택결혼으로 인한 가계소득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세계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올해 초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상위 10% 국민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조사 대상 아시아 22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도 1995년 29%에서 2013년 45%로 급증했다.

지난 6월 21일 서울시는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바로 부부가구의 학력 차이가 10년 전에 비해 아내의 학력이 더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고졸학력을 가진 남편보다 고학력인 아내(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는 32.9%로 2005년 6.2%에 비해 26.7%p,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끼리끼리 만나는 선택결혼의 패턴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너무 비약일까?

남녀평등을 개선하면서도 가계소득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O E C D I S S U E

포용적 성장을 위한 성인 역량개발 어떻게?

OECD 국가 성인의 인적역량 현황과 시사점

인적역량(skills; OECD는 skills를 '학습될 수 있고 개인들이 어떤 활동이나 작업을 성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학습을 통해 개발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지식, 특성 및 능력들의 집합'으로 정의)은 21세기 개인의 삶의 질과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서 고용과 소득뿐 아니라 건강, 사회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 및 국가 차원의 인적역량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참가국에서 직업의 유형과 직장의 인력운영 관행이 역량 활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사진은 스페인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세계는 지금〉은 OECD · WTO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코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는 OECD가 개발한 성인 역량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국제조사다. PIAAC은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위해 성인이 갖춰야 할 역량 및 스킬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6세부터 65세 인구를 대상으로 언어능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in Technologically Rich Environments)을 측정한다. 제1주기 조사가 2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시행돼 2013년 결과가 발표됐으며, 2015년에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9개국이 추가로 조사에 참여했다. 그동안 학력 등 간접적 요인에 의해 개인의 역량을 평가해 왔으나 이 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성인 역량에 관한 직접적 측정 및 국제비교가 가능해졌다. 또한 성인 인적역량 개발 및 유지, 교육–노동시장 관계,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일자리 매칭의 효율성, 불평등, 소수집단 사회 및 노동시장 통합 이슈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증거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 및 인적역량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하에서는 지난 6월 28일 발표된 제2차 PIAAC 국제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영역별 숙련도와 분포,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장에서의 역량 활용, 인적역량 투자의 성과 등 제1주기 PIAAC의 주요 조사 결과와 이를 통해 얻어진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韓 언어능력 OECD 평균 이상,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은 평균수준

제1주기 PIAAC(2012년, 2015년) 조사 영역별 주요 결과[언어능력, 수리력은 6수준(1수준 미만/1~5수준)으로,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은 4수준(1수준 미만/1~3수준)으로 구분.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이 높음을 의미]를 보면 33개 참가국 성인의 평균 언어능력과 수리력은 500점 만점에 각각 268점, 263점이며,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이 상위수준(2~3수준)인 성인의 비율은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국 평균적으로 언어능력에서 46.0%, 수리력에서 43.0%의 성인은 3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 핀란드 등은 그 비율이 높은 반면 인도네시아 · 터키 · 칠레 등은 낮았다. 반면 참가국 평균적으로 성인 5명 중 1명(19.9%)은 언어능력에서, 성인 4명 중 1명(22.7%)은 수리력에서 1수준 이하의 저숙련 상태로 드러났다.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의 경우 참가국 평균 성인 3명 중 1명(31.1%)은 2수준 이상이었으나, 42.9%의 성인은 1수준 이하이며 특히 성인 7명 중 1명(14.2%)은 1수준 미만의 최하수준으로 드러나는 등 저숙련 인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구의 4분의 1은 컴퓨터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컴퓨터 사용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평균 역량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분포의 분산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칠레 · 이스라엘 · 싱가포르는 점수 분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언어능력과 수리력의 숙련도는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높은 언어능력과 수리력이 반드시 높은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ICT 접근도가 전체 인구집단으로 확대되는 과정이 국가별로 역사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반면 낮은 언어능력과 수리력은 낮은 문제해결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이는 낮은 언어능력은 기본적 ICT 스킬 획득에 장애가 되며, 낮은 언어능력과 수리력을 가진 성인은 ICT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 ICT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은 기술에 대한 접근도 향상뿐 아니라 언어능력과 수리력 스킬 향상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능력 평균 273점, 수리력 263점,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이 상위수준인 성인의 비율은 30%로서, 언어능력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고 수리력과 문제해결력은 OECD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 분포의 분산은 다소 낮은 편이나, 전후 시기 급속한 경제발전과 교육확대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함께 역량수준의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수준은 역량의 가장 정확한 예측인자로서, 역량수준은 고등교육 이수자가 가장 높고 중등교육 미만 이수자가 가장 낮았다. 언어능력과 수리력은 약 30세 무렵에서, 문제해결력은 약 25세에서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최근 교육 접근성이 확대된 국가에서 장년층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나 노화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국가별로 연령대별 역량수준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책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을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고등교육을 이수한 집단은 부모가 모두 고교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역량점수가 약 40점가량 높았는데, 그 격차의 절반은 부모가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높은 단계의 교육을 이수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출생한 성인은 본국 출신 성인보다 역량수준이 낮은 경향이나, 모국어가 이민 대상국과 동일한 이민자는 그렇지 않은 이민자보다 역량점수가 높으며 본국 출신 성인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



이주희
주OECD대표부 참사관
mice94@moe.go.kr

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정책은 이민자와 본국 국민 간 역량 격차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의 성별 간 차이는 무시할 정도이나 수리력 수준은 남자가 더 높았다. 성별 격차는 장년층에서 보다 큰데 이는 장년 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은 한편, 노동시장 참여수준도 낮아 역량 감소가 빠르게 나타나는 데 기인한다.

역량 활용도는 직업만족도와 밀접한 관련 보여

직장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역량은 쓰기(2.9)와 문제해결력(2.8)이고, 읽기능력(2.71)은 중간 수준이며, 수리력(2.51)과 ICT 스킬(2.41)은 활용도가 가장 낮았다. 국가별로는 뉴질랜드가 호주, 미국과 함께 역량의 활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싱가포르는 ICT 스킬의 활용빈도가 모든 참가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량의 숙련도와 역량 활용도는 상이하게 나타나며 모든 참가국에서 숙련도는 직장에서의 역량 활용의 매우 일부만을 설명하는데, 이는 역량 숙련도는 직업과 직장의 선택을 통해 매우 간접적으로 역량 활용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모든 참가국에서 직업의 유형과 직장의 인력운영 관행이 역량 활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조직 및 경영 등에서의 고성과 업무관행은 직장에서의 역량 활용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워크, 자율성, 과업재량, 멘토링, 직무순환, 새로운 학습의 적용 등과 같은 업무 조직방식은 신규채용자의 스킬에 맞게 과업을 조정하도록 하는 기업의 내부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고, 보너스 지급, 훈련제공, 근로시간의 유연성 등과 같은 고성과 경영관행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보다 충분히 역량을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장에서 역량을 보다 자주 활용할수록 임금이 높으며, 역량의 활용은 일자리의 질과 삶의 만족도, 건강 등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량의 활용도는 직업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역량 활용도의 증가는 투자, 근로자의 참여, 혁신을 촉진하고, 직장에서의 역량 활용도는 시간당 생산성과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 높을수록 고용률, 임금수준 등의 노동시장 성과 높아

성인의 역량은 교육이나 개인적 특성 및 성격과는 독립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정의되고 평가될 수 있는 개인 인적자본의 한 측면이다. 역량이 높을수록 고용률, 임금수준 등의 노동시장 성과가 높으며 웰빙, 건강, 정치참여, 타인에 대한 신뢰, 자발적 사회활동 참여 등과도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교육자격과 대비한 역량수준의 상대적 중요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데, 고용주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교육자격을 신호기제로 활용하는 반면, 근무기간이 길고 성과가 관측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역량수준이 교육자격보다 강한 노동시장 성과지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22%의 근로자가 학력과잉, 13%가 학력부족 상태이고, 평균 11%의 근로자가 역량과잉, 4%가 역량부족 상태로 드러났으며 약 40%의 근로자는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잉은 특히 청년, 외국인, 소규모 기업, 파트타임, 고정기간 계약 노동자에게 더 많았으나, 일부 노동자들이 교육단계에서 성취도가 낮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스킬이 낮아져 졸업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스킬을 보유하는 데서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킬 및 학력의 요구수준은 변동하므로 일정 정도의 미스매치는 불가피하지만 근로자가 보유한 역량과 일자리에서의 요구 간 불일치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개인수준에서는 일자리 만족도와 임금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수준에서는 이직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그리고 거시경제 수준에서는 실업률 증가 및 GDP 성장감소 등을 초래한다. 특히 학력 미스매치는 다른 유형의 미스매치보다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량과잉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작으며 때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공 불일치는 임금에 큰 효과를 미치지 않으며, 많은 국가에서 전공 불일치가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에서 일하면서 과잉학력인 경우에만 임금에서 상당한 수준의 불이익을 경험했다.

PIAAC은 평가의 타당성, 문화적 차이, 지나치게 긴 평가주기 등 평가가 갖는 본질적 문제와 국제비교가 갖는 한계로 인해 논쟁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AAC의 진정한 강점은 성인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성인 인적역량 개발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동시장에서의 역량의 활용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경제적 · 사회적 성과와 연계해 분석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 통해 성인의 전반적인 역량과 취약계층 성인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순한 국가별 성인 역량의 순위보다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 U I S S U E

EU 식품시장,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유럽연합 식품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

유럽연합(EU)집행위 산업총국은 올해 초 EU 28개 회원국과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의 식품음료산업 간 경쟁력을 비교한 「유럽연합 식품음료산업의 경쟁력 위상(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European food and drink industr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EU집행위는 2007년도에 유사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이후의 EU 식품음료산업(이하 식품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기간 1',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기간 2'로 나눠 경쟁력 변화를 비교했다. 하위 산업 분야는 육류 · 수산 · 과일채소 · 동식물성유지기름 · 낙농 · 시리얼 · 제빵 · 기타식품(설탕, 과자류 포함) · 음료(와인, 맥주 포함) · 증류주로 나눴다. 평가 지표로는 제조업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증가(S) · 상대무역우위(T; 상대수출우위에서 상대수입우위를 뺀 값) ·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M) · 노동생산성 증가율(L) 및 실질부가가치 증가율(P)의 다섯 가지 지표를 사용했다.



식품음료 제조업에서 보존기간 연장, 소형포장 등 포장기술에 관한 혁신이 확대되는 추세다. (사진) 독일의 한 초콜릿공장에서 근로자가 초콜릿을 포장하고 있다.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 한국식품 입점 유통업체의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에 4억6천만달러의 농수산식품(혼합조제 식료품 등)을 수출했다. (사진)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aT는 한 ·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 대형유통업체에서 대대적인 우리 농식품 판촉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제공: aT)

세계시장 점유율(M)의 경우 미국 · EU는 크게 높아졌으나 브라질 · 호주 · 캐나다는 약화됐으며, 특히 브라질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상대무역우위(T)는 브라질을 제외한 캐나다 · EU · 미국 · 호주가 개선됐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L)은 호주 · 미국이 증가를 보인 반면, 브라질 · 캐나다 · EU는 약화됐다. 식품산업의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S)은 호주 · 브라질은 개선됐으나 캐나다 · 미국 · EU는 약화됐으며 EU의 약화 폭이 가장 작았다. 실질부가가치 증가율(P)은 호주 · 미국이 개선된 반면, EU · 캐나다 · 브라질은 약화됐다. 2012년 기준 EU 식품산업의 매출액은 1조601억유로로 미국의 6,520억유로보다 1.5배나 많은 세계 최대의 식품시장을 나타냈다. 기업 수는 29만개로 미국 2만6천개의 11배, 브라질 5천개의 58배나 되지만 기업당 매출액은 370만유로로 브라질(3,750만유로)의 10%, 미국(2,500만유로)의 15%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기업규모는 작았다.

EU 식품 수출 · 수입시장 점유율 세계 1위

다섯 가지 평가지표 외에 다른 지표들을 살펴보면 EU는 전 세계 식품 수출시장 점유율(2012년)이 12.1%(864억유로)로 세계 1위를 나타냈다. 이어 미국 8.3%(594억유로), 브라질 4.9%(353억유로), 캐나다 3%(213억유로), 호주 2%(143억유로) 순이었다. 참고로 비교국은 아니지만 중국이 5.3%(375억유로)로 수출시장 3위를 기록했다. 수출시장 성장률(2008~2012년)은 6.3%로서 미국의 8.3%에 이어 비교국 중 2위였다. 이어 브라질 6.2%, 캐나다 5.8%, 호주 4.8% 등이다. 역시 비교국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19.9%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인도 21.0%, 중국 12.2%, 태국 11.7%, 뉴질랜드 7.1%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전 세계 식품 수입시장 점유율(2012년) 역시 EU가 11.3%(759억유로)로 1위를 나타냈다. 이어 미국 10.5%(706억유로), 캐나다 3.0%(200억유로), 호주 1.3%(87억유로), 브라질 0.9%(57억유로) 순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5.0%(337억유로, 전체 3위), 3.0%(203억유로)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입시장 성장률(2008~2012년)은 EU가 불과 0.5% 성장에 그쳐 비교국 중 가장 낮았다. 브라질이 12.6%의 높은 수치로 1위를 나타냈으며, 이어 미국 8.7%, 캐나다 7.3%, 미국 6.1% 순이었다. EU 식품산업의 종업원 수(2012년)는 450만명으로 비교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기업당 종업원 수는 15.6명으로 호주 18.4명, 캐나다 32.0명, 미국 59.4명 등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EU 내 제조업에서 식품산업의 위상을 살펴보면, 식품산업은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15%(7조800억유로 중 1조620억유로)를 차지해 제조업 중 가장 높은 매출비중을 보이는 중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매출액 증가율(2008~2012년)도 제조업이 −0.8% 하락한 반면 식품산업은 6.9% 성장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종업원 수는 제조업의 15%(3천만명 중 450만명)였다.

식품산업의 주요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면 매출액(2012년)은 육류분야(2,170억유로)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타식품(1,719억유로), 음료(1,480억유로), 낙농(1,456억유로) 순이었다. 수출은 음료 분야(수출액의 28.6%, 247억유로)가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수입은 낙농분야가 6억7천만유로를 기록했으나 수입액의 0.9%에 그쳤다. 이는 제3국이 유럽연합에 낙농제품을 수출하기가 아직은 매우 어려움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식품관련 규범체계(regulations)와 연구개발, 노동력 · 원재료 확보 등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여건(framework conditions)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식품관련 규범은 2002년 식품에 대한 일반 규정(general food law, EU규정 178/2002)을 정립하고 이

조백희
주벨기에 · 유럽연합대사관 농무관
jobh@korea.kr



를 기반으로 중요 규정을 만들고 관련 규정 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장점으로 평가했다. 고품질을 요구하는 EU의 식품안전 규정은 EU 식품음료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높은 평판을 가져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집행위에서 제정한 규정을 회원국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일관성이 없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건강식품업계의 의견을 인용해 장기간의 승인절차와 엄격한 승인기준은 신제품 개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분석했다.

구조적 여건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 투자가 낮고 혁신문화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2014년 식품음료 분야 제조업의 R&D 투자는 매출액의 1~2%로 제조업 중 중하위였으며, 식품음료 분야 유통업의 경우 1% 미만으로 하위에 머물렀다. 「EU 2020전략」에 의하면 2020년 EU GDP의 3%를 R&D에 투자(전 산업 기준)하는 것인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R&D 투자 비중이 2012년 6.8%에서 2013년 2.3%로 낮아졌다. 또한 미국 · 일본의 기업들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낮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유럽상품코드(EAN; European Article Number)의 점유율은 2006~2008년 3.8%의 증가를 보였으나 2010~2015년에는 -5.3%로 감소해 신제품 출시가 위축됐다.

EU 시장 개척하려면 식품안전과 고품질 중요성 인식은 필수

한편 식품음료 제조업에서는 포장기술에 관한 혁신이 확대되는 추세다. 기술혁신 중 포장관련 기술혁신 비중이 2004년에는 6%에 머물렀으나 2012년에는 30%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보존기간 연장 · 소형포장이나 저염 · 불포화지방 감소 등에 대한 포장개선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식품음료 유통산업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지체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노동력 면에선 식품산업에 고유하지 않은 디지털 · 행동과학 · 유전공학 등과 관련한 고숙련 노동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차세대에 대한 기술이전도 어렵다. 현재 낙농 분야는 EU 역내에서 고품질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아진 반면, 수산과 오일유지산업 분야는 역외수입에 의존해 경쟁력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국제무역에서 EU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하며, 이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EU의 높은 수준의 규정들, 식품음료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고품질 이미지, 신흥시장에서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증가, 제3국과 FTA 확대에 따른 무역자유화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책 권고로서 국제무역 및 역내시장 위상 강화, 생산성 향상 지원, 공급체인의 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국제무역 및 역내시장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소 현 수준으로 품질 및 식품안전관련 규정은 유지해야 하며, 과학기술 발전이나 위험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때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FTA는 확대해야 하며 역내시장에서의 교역촉진을 위해 회원국 간 서로 다른 규정으로 인한 무역 장애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생산성 향상 지원과 관련해선 현재 EU의 규정운영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식품음료 산업계가 다른 산업계와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식품기업이 디지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고 생산가공의 최적화나 적시배송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원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소, 공급체인 기능 강화와 관련한 고위급 포럼의 계속 운영 등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산업계와 소비자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식품산업 가치와 긍정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산업계가 소비자 대중에게 알리는 캠페인과 선제적 활동(initiative)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EU 식품산업이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수입시장이며, 또한 EU 제조업 중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산업임을 보여준다. 다만, 비교국에 대한 경쟁력 변화의 요인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결과만 제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점은 보고서의 한계다. 또한 EU의 수입시장 성장률이 정체상태(2008~2012년 0.5% 증가)에 머무른 것은 농수산식품 수출을 늘려야 하는 우리로선 아쉬운 점이다. 이는 EU 식품산업의 높은 품질경쟁력과 연관되겠지만, EU의 낮은 인구증가율과도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2007~2013년간 EU의 인구증가율(세계은행 자료)은 0.33%에 머물러, 호주 1.59%, 캐나다 1.1%, 브라질 0.99%, 미국 0.86%와 비교해 가장 낮았다. 이는 제3국이 EU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님을 보여준다.

2015년 우리나라는 EU에 4억6천만달러의 농수산식품(혼합조제식료품, 참치, 라면, 김, 김치, 인삼제품 등)을 수출했다.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액 80억3천만달러의 5.7%에 이르며, 이 가운데 농식품이 3억4천만달러, 수산식품이 1억2천만달러다. 2014년의 4억5천만달러 수출과 비교해 2.7%가 늘었다. EU의 경기회복 지연, 난민유입 등으로 소비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다른 아시아 식품과 비교해 고품질이며, 발효 등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 한국식품 입점 유통업체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비용증가, 낮은 소비자 인지도 등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EU 식품음료 시장을 개척하려면 우리도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더욱 잘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국식품에 대한 고품질 · 안전 이미지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농수산식품의 품질과 안전성도 향상되고 나아가 수출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환경부

Cool

쿨맵시로 2℃ 시원한 여름

냉방온도 26~28℃ 유지하기

UP
실내온도 2℃



체감온도 2℃
DOWN

쿨맵시의 패션과학

체열과 땀을 쉽게 배출시켜
체감온도를 2℃ 낮춰 줍니다

쿨맵시의 1석 3조 효과

쿨맵시는 냉방비 절약, 냉방병 예방,
온실가스 감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쿨맵시의 선택 노하우

가볍고 얇은 옷감과 밝은 계통의
의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탄소친환경생활 홍보대사
개그맨 **서경석**

저탄소친환경생활 홍보대사
배우 **김지우**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이것만 실천하면 1년에 1톤 감축

- 쿨맵시착용하기
- 여름철 실내온도 (26℃~28℃) 유지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

- 그린터치 설치하기
-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 재활용 제품 분리배출하기

⊕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www.kcen.kr)로

한겨레 논설위원의 농사 체험. 농촌 출신인 필자가 주말농장을 일구면서 겪는 소박하고 진솔한 농사 이야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국 선녀벌레의 습격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jeje@hani.co.kr



6월부터 가지에 하얀 벌레가 달라붙어 곰팡이가 슨 것과 비슷한 게 눈에 띄었다. 밭 옆 산자락의 풀들은 훨씬 심했다. 점차 부추, 토마토, 호박, 옥수수를 비롯해 온갖 작물로 퍼져 갔다. 장마가 시작되자 더욱 극성을 부렸다. 해가 덜 드는 곳에 심은 토마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김매기에 부지런을 떨지 못한 가지는 더는 수확하지 못할 지경이 됐다. 길가에 심은 접시꽃이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다. 상추 같은 쌈채소와 고추가 성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미국 선녀벌레라고 했다. 노린재목에 속하는데 성충과 유충이 줄기를 뒤덮고 즙을 빨아먹어 결국 식물을 말라죽게 한다. 원래 서식지는 미국으로 한국식물환경연구소 자료를 보니 미군 수송 항공기에 의해 유럽으로 유입돼 1979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각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서울, 경기, 경남의 3개 시군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한다. 알로 월동하고 5~6월에 애벌레로 부화한 뒤 7~8월 성충이 되면 식물에 해를 입힌다. 아직 천적이 없어 해마다 번성하고 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올해도 곳곳에 피해 보고가 넘쳐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을 아주 잘못 지었다. 선녀라니.



가지를 시작으로 부추, 토마토, 호박, 옥수수를 비롯한 온갖 작물로 미국 선녀벌레가 퍼져 갔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욱 극성을 부린 결과 가지는 더는 수확하지 못할 지경이 됐다.

방제법을 고민했다. 농약을 치지 않기로 했으니 우선 목초액을 뿌려보기로 했다. 참나무로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연기를 액화해 만든 초(酢)다. 농도를 아주 짙게 해서 분무기로 일삼아 뿌려봤다. 선녀벌레가 후두둑 튀며 흩어졌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가보니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정보를 수집해 두 가지 방제법을 더 실험해보기로 했다. 일부엔 비눗물을 뿌렸고, 일부엔 난황유를 뿌렸다. 하루 지나 두 곳을 비교해보니 비눗물을 뿌린 쪽이 선녀벌레가 확실히 적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잎과 줄기가 갈변해 있었다. 실험을 해본 회원은 "강한 햇빛을 쬐는 가운데 세포막을 파괴하는 가성소다 때문에 작물 자체의 표피도 손상을 입은 것 같다."고 했다. 난황유를 뿌린 곳은 선녀벌레 퇴치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작물엔 손상이 없었다. 난황유는 식용유에 계란 노른자를 넣고 믹서기로 혼합한 뒤 물에 희석한 것으로, 피부호흡을 하는 해충의 호흡기를 막아서 질식시킨다. 앞으로 난황유를 좀 더 뿌려보기로 했다. 난황유 대신 우유나 마요네즈를 물과 혼합해서 사용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 이건 나중에 써보기로 했다.

나는 애초 항복을 하자는 쪽이었다. 여름 장마철에 병해충이 번성하면 농약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그것도 자연의 균형이니 받아들이자는 생각이었다. 부지런한 이들이 방제법을 이리저리 찾아 이 찜통더위에 애쓰는 걸 보면서 '내가 게으름을 그렇게 변명한 것 아닌가' 반성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땅심이 좋아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고, 작물에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면 병충해를 훨씬 잘 견뎌낸다는 점이다. 올가을에는 어떻게든 퇴비를 잔뜩 사서 밭에 넣자고, 사람들과 의미있는 눈인사를 건네고 밭을 등진다.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할까?

NEWS

스위스가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5일 시행했으나 부결됐다. 스위스 국영방송 SRF는 이날 76.7%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가 국민투표에 부친 기본소득 도입 방안은 매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 · 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 2016년 6월 6일, 한국경제신문

부(負)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딜레마 중 하나는 무상 복지제도가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일할 의욕을 감퇴시켜 스스로의 힘으로 서려는 의지를 꺾는다는 점이다. 부의 소득세제는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정부(국세청)가 거둔 세금 중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적용된다. 근로와 복지를 연계시키는 제도다. 부의 소득세제가 도입된 건 1975년 미국이 최초다. 우리나라도 근로장려세제란 이름으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가장 낮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바로 위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페이고(pay-go) 원칙

공항이나 항만, 도로 건설 등 정부나 국회가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한 제도다. 나라살림(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pay as you go'의 줄임말이다.

지난 6월 5일 스위스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반대했다. 기본소득은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기본소득제란 무엇이고 스위스 국민들은 왜 '공짜'를 거부했을까?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할까?

'알파고 쇼크' 이후 관심 높아진 기본소득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며, 다른 소득 여부와 관계없고,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높아졌다. 특히 지난 3월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게 기폭제가 됐다. 인류가 개발한 AI나 로봇 같은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면 구글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이를 소유한 극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두려움에서다. 따라서 정부가 기본소득을 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 등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경제이성비판」이란 책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적은 노동으로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노동의 양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이 점점 적어져)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



사진은 스위스 버스 정류장 앞에 붙어 있는 기본소득 찬성 투표를 호소하는 포스터. 지난 6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장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거론했다. 여야 국회 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도 첫 의제로 기본소득제를 선택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세대에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정부가 주는 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누군가가 그 돈을 대야 한다. 기본소득제의 문제는 크게 지속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본소득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 어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데 연 2,080억프랑(약 24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지출 규모인 연 670억프랑의 세 배에 이른다.

둘째, 기본소득제의 또 다른 문제는 '일할 동기'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놀고 먹어도 생활할 수 있는데 누가 땀 흘려 일하려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재원의 한계로 기본소득과 현행 사회복지 중 하나만 가능해

기본소득제나 현재 사회복지제도의 관건은 재원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것은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 하는 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스위스나 핀란드 등은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복지비용도 줄이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임시직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커서 국민들이 일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저임금 일자리라도 일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다. 또 현재의 복지체계는 복지 계획과 관리감독에 많은 돈이 쓰이면서 '진짜 복지'에 쓰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복지정책을 기본소득 하나로 단순화할 경우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수를 줄이고 행정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예산은 공적연금 지급이나 보건 분야 예산을 포함해 올해 약 123조원이다. 이를 인구수(5,160만명)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240만원씩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 월 20만원 정도다. 1인당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급하려면 62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전체 예산(약 387조원)의 1.6배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본소득을 주는 것만으로도 돈이 모자란다는 뜻이다. 국민들로선 기본소득과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기본소득제에도 적용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국토교통부

핵심 · 덩어리 규제 걷어내고 미래 신산업 위한 새 규제시스템 구축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증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신고립주의 부상에 따른 영향 못지않게 주력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은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과제가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면서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 정책수단으로 꼽히는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더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도 입지개선 등 핵심 ·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현장애로를 조속히 해결해 투자 등 즉각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장기적 시각에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의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업 현장의 어려움 수시로 발굴해 해결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 산지까지 많아 가용 토지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선 더더욱 그러하다. 이 때문에 도시 · 건축규제나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은 입지규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핵심 · 덩어리 규제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 건축규제 혁신방안'에서 도시개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과 기반시설 복합화 등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녹지 · 관리지역에 이전부터 입지해 있던 공장에 대해선 건폐율 40%까지 허용하는 등 기업 투자의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했다. 기존 공장 증 · 개축 완화조치 이후 올해 3월까지 41개소의 공장에서 1천억원이 넘는 신규투자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말 포항시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결정 · 고시돼 앞으로 1,500억원의 신규투자와 1,7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류장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부대 · 편익시설을 대폭 늘려 경남 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예식장 · 도서관 등 7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해 올해 초 공사를 완료했다.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변화 수요를 반영해 2015년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2015년 말 경북 포항시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결정 · 고시돼 앞으로 1,500억원의 신규투자와 1,7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연결하는 운하와 함께 들어설 수변 유원지 조감도(사진 제공: 포항 시청)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당초 정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 · 판매 ·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는 한편,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 도입과 함께 보전가치가 낮아진 지역에 대해선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환경보전 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주변 녹지대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비교적 큰 폭의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발굴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애로해소지원팀을 신설해 현장애로를 상시적으로 접수하는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규제개혁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지자체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기업현장의 건의과제도 발굴하고 있다. 건의사항은 1차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최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파급효과가 크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쟁점과제에 대해선 규제개혁 지원단회의라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제반 효과를 점검해보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 장관이 주재하는 현장점검회의를 2~3달에 한 번씩 개최해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장관이 해결방안 마련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규제개혁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많다. 한 예로 지난해 속초시에서 추진된 85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의 경우 고속도로 미사용부지 일부가 사업구역을 사선으로 지나고 있어 용도폐지 등 기존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2년 이상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에서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수요가 있는 부지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관련 절차를 3개월로 단축했으며, 오는 7월 즈음엔 건설공사가 발주될 예정으로 약 1,700억원의 신규투자와 2,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국토교통 분야에서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고,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도 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고와 틀 아래에서는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 바로 행정이 시장의 혁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에 대해선 장관 이하 전 직원이 새로운 시각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드론과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는데, 올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그 외에도 소규모 드론에 대한 자본금 요건 폐지 등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활용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카셰어링, 심야 콜버스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ICT를 활용한 온라인 자동차매매 등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 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미래 신산업과 신시장이 계속적으로 등장할 것이기에 국토부는 신제품 · 신서비스의 생존 여부가 시장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국토부 기업애로해소지원팀(전용콜; 044-201-4817, 전용메일; nextism2@korea.kr)에서는 상시적으로 현장애로과제를 접수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당부한다.

김동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기업애로해소팀장
dhkim@korea.kr



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doublewood@korea.kr



구름을 나타내는 예쁜 우리말들

우리말에는 구름의 높이, 모양 또는 색깔에 따라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구름을 가리키는 말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어지간히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굽어볼 수 있을 만큼 낮게 떠 있는 구름을 '밑턱구름'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위턱구름'입니다. 밑턱구름 중에서도 비가 올 때의 산간 지대나 이른 아침의 평야 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안개구름'입니다.

밑턱구름보다는 높은 곳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뭉게구름'은 솜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여 '솜구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산봉우리구름', '더미구름'도 뭉게구름의 다른 이름입니다. 뭉게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서는 동글동글하게 덩어리진 '양떼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는 희고 작은 덩어리로 촘촘히 흩어진 구름이 나타나는데, 이를 가리켜 '조개구름' 또는 '비늘구름'이라고 합니다.

> 허공을 정확히 정육각형으로 조각조각 가르고 있는 창살 너머 잔잔히 깔린 비늘구름에 노을빛이 묻어 불그레하게 빛나고 있다.
>
> 오정희 「불의 강」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조각구름'의 낱낱은 '쪽구름'이라고 하는데, 쪽구름 중에서도 작은 꽃송이나 솜뭉치처럼 생긴 구름은 '송이구름'입니다. 조개구름보다 더 위쪽에는 '비단구름'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깃털 같아 '새털구름'이라고도 하고, 옷감을 둘둘 말아 놓은 것 같기도 해서 '두루마리구름'이라고도 하지요.

가장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아주 엷고 하얀 '면사포구름'입니다. 해 가까이에 있어서 햇무리를 잘 일으키므로 '햇무리구름'이라고도 합니다. 모양이나 색깔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불리는데, '나비구름'은 날아다니는 나비의 날개처럼 펼쳐진 구름을 가리킵니다. 선녀가 하늘을 나는 듯한 구름은 '선녀구름'이라 하고, 얇은 구름에 둥근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구름은 '벌집구름'이라고 합니다. 띠처럼 기다랗게 떠 있는 '띠구름' 중에서 실오리 같이 가늘게 퍼진 구름은 '실구름' 또는 '오리구름'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길쭉하면서 빛깔이 유독 검은 구름은 '장어구름'이라고 한답니다. '비구름'은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 '물구름'이라고도 하고, 그 색이 먹빛과 같다 하여 '먹구름' 또는 '먹장구름'으로도 불립니다. 특히 비를 머금은 검은 조각구름은 '매지구름'이라 하고, 산봉우리의 꼭대기 부근에 갓처럼 둘러져 있는 비구름은 '삿갓구름'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름이 하늘에 있다면 얼마 안 있어 비가 쏟아질 테니 대비를 해야겠지요. '흘레구름'은 비를 내리려고 엉기기 시작하는 구름을 뜻합니다.

> 하늘에는 검은 매지구름이 자꾸만 모여들고, 별안간 마파람까지 일어나서 날씨가 또 수상해졌다.
>
> 김정한 「항진기」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이나 얼음에 닿은 햇빛이 굴절되면서 여러 가지 빛깔로 물든 것처럼 보이는 구름도 있는데, 그 색이 곱고 아름다워 '꽃구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여러 가지 빛이 있다 하여 '오색구름'이라고도 하고, '무지개구름'이라고도 합니다. 붉은 노을에 물든 '놀구름'은 작품 사진이나 시어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 서천을 물들였던 놀구름도 사라지고
> 이제 황혼이 자욱 기어드는 자리에
> 다박머리 아기 하나 울고 울고 섰나니
>
> 유치환 「황혼에서」

참고로, 구름과 관련된 전문용어는 한자어가 주로 쓰이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개구름 → 층운(層雲) / 밑턱구름 → 하층운(下層雲) / 위턱구름 → 상층운(上層雲) / 뭉게구름 → 적운(積雲) / 양떼구름 → 고적운(高積雲) / 조개구름 → 권적운(卷積雲) / 조각구름 → 편운(片雲) / 오색구름 → 오운(五雲) / 비구름 → 난운(亂雲) / 두루마리구름 → 권운(卷雲) / 햇무리구름 → 권층운(卷層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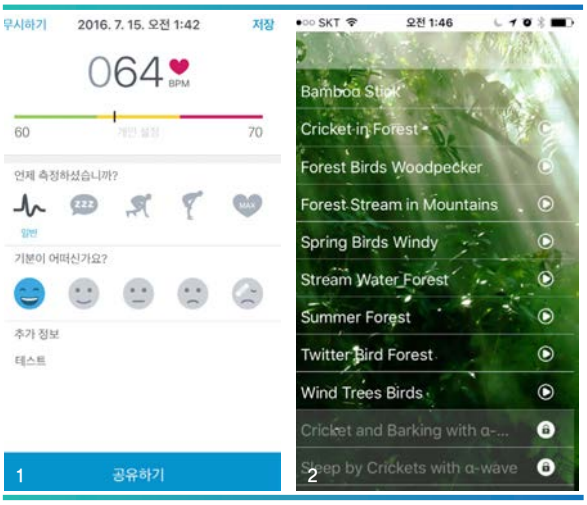
여러분은 어떤 말이 더 맘에 드시나요?

무더운 여름, 극심해지는 스트레스를 간단하게 해소하는 방법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는 여름은 활동성과 청량함을 상징하는 계절이자 강렬한 햇살에 불쾌지수가 한없이 높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여기에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꼼짝없이 병에 걸리기 십상이다. 결국 자신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기온이 상승곡선을 타는 8월,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세 가지를 소개한다.

런타스틱 심박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리 몸의 신호는 어떤 것일까. 바로 심장이 요동치는 것처럼 맥박이 빠르게 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앱을 이용해 자신의 심장 박동 수를 평소에 잘 체크해 둔다면 꼭 흥분상태일 때가 아니더라도 심신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상시와 운동 전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긴장되는 순간에 내 심장 혈관계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 사용법은 쉽고 간단하다. 스마트폰 기기 후면의 카메라 렌즈나 플래시에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가볍게 대기만 하면 된다. 그럼 카메라가 심장 박동 수를 측정하고 측정치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결괏값은 서버에 업로드해 일단위는 물론 연단위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SNS나 메일을 통해 측정치를 공유할 수도 있다.



1. '런타스틱 심박수' 메인 화면 2. '포레스트 사운드' 메인 화면

포레스트 사운드: 소리로 치유

'포레스트 사운드'는 자연의 소리를 테마로 하는 힐링 앱 시리즈의 세 번째 모델로 전작인 '레인 사운드', '오션 사운드'와 더불어 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에 톡톡히 효과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이 앱은 평상시 요가나 명상을 할 때 혹은 독서를 할 때도 좋지만 무엇보다 잠자기 전에 들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랜 기간 연구된 사운드 테라피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게 된 셈. 스트레스로부터 기인한 불안감이나 불면증 치유는 물론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나쁜 파동을 평온한 리듬으로 잠재움으로써 힐링효과를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복 재생이 가능하며 최장 4시간까지 타이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모씨: 마음껏 속이야기를 합시다

'모씨'는 평소 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사람들과 좀 더 솔직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 혹은 고민을 누군가와 대화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 앱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가능'하다. 철저히 보장되는 익명의 공간에서 좀 더 잘난 척을 할 수도, 아니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마음속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볍게 툭툭 내뱉듯 말해 보자. 때로는 위선이나 위악을 떨어도 좋고 진심을 담으면 더욱 좋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담아둠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모씨'에서 그 짐을 덜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내 생활을 즐겨 보자.

■ **이우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IT 분야 강자로 떠오른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유럽 내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뿐 아니라 인구 수 대비 최다 IT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 IT 분야 다국적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웃소싱 목적지로 꼽힌다. 또한 태블릿PC 시장에선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이 아닌 자체 개발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근 몇 년간의 건실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소득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한 해의 작황이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국가로서 부쿠레슈티 시내만 벗어나면 말이 끄는 달구지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루마니아는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루마니아는 유럽 내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뿐 아니라 인구 수 대비 최다 IT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덕분에 루마니아는 유럽 내 IT 분야 다국적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웃소싱 목적지로 꼽히기도 했으며, 태블릿PC 시장에선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이 아닌 자체 개발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물론 아직 IT산업의 모든 분야가 고루 발달하지 못했고 도농 간 정보격차도 크지만, 루마니아의 IT 분야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슈거리를 제시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분야에 경쟁력 지녀

외자계 기업들이 대부분인 루마니아 시장에서 토종 IT 기업들은 몇몇 손에 꼽을 수 있는 대표 성공사례들을 보여주며 루마니아의 경제기반을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루마니아의 IT산업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고 시장규모도 크다. 2014년에는 해당 분야에서 4조유로 이상의 기준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그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 컨설팅 등이 매출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유럽의 주요 IT 아웃소싱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Oracle), SAP, 인텔(Intel), 와이프로(Wipro) 등 IT 분야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아웃소싱 분야, 특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IT 벤더들의 콜센터 분야는 루마니아의 성공스토리 중 하나다. 인도나 필리핀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고객접점센터 아웃소싱 관련 외국인직접투자에서는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서비스 아웃소싱에서 더 나아가 비즈니스프로세스 아웃소싱, 지식프로세스 아웃소싱, 정보기술 운영, 기술연구(R&D) 등 더 복잡한 영역까지 확장해가고 있다.

다국적 IT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수도인 부쿠레슈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한 여성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김민정
KOTRA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무역관 부관장
yurika76@kotra.or.kr



티 그리고 클루지-나포카, 티미쇼아라 순이다. 클루지-나포카와 티미쇼아라는 서유럽에 가깝다는 지리적인 여건 덕분에 IT 기업들의 인기를 얻었고, 그중 클루지-나포카는 주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힘써 온 것이 결실을 맺었다.

주요 다국적 IT 기업 중 하나인 SAP는 부쿠레슈티와 티미쇼아라, 클루지-나포카 세 도시에 주변국 아웃소싱(nearshoring) 센터를 오픈하고 2017년까지 직원을 증원할 예정이다. 루마니아에 이미 약 2,5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오라클의 루마니아법인은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영국 다음으로 큰 최대 규모의 자회사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는 2015년 12월 티미쇼아라에 유럽 최대 글로벌 네트워킹 운영본부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루마니아가 유럽 내에서 IT 아웃소싱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많은 IT 기술자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수준 덕분이다. 여기에 루마니아인들의 뛰어난 어학실력 역시 한몫하고 있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 교과과정이 바뀌어 러시아어 대신 영어를 배우고 자란 세대는 영어가 매우 능숙할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어가 다양한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다수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다른 이유로는 IT 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 사실 IT 인프라는 보급률 면에서는 향후 확충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속도 면에서는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인터넷브로드밴드 서비스보급률은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97%인 데 비해 루마니아는 63%에 불과했지만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IT 분야에 24억유로 투자 예정

IT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시장에 비해 IT 하드웨어 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작다. 매출액은 4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종업원 수도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보급률 역시 부족하다. 2014년 EU 27개국의 가구 평균 PC보급률이 82%였던 데 비해 루마니아는 69% 수준이었고, 16~74세 인구 중 최소 한 번은 PC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중도 63%에 그쳤다. 또한 인구는 지방이 도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도시와 지방 간 디지털 격차도 매우 큰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하드웨어 시장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회복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 인터넷보급률 상승, 제품단가 하락에 힘입어 2015년에는 가정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량이 9% 성장하고 특히 태블릿PC는 13%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태블릿PC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가 아니라 토종 기업 브랜드 제품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종 기업들은 가격 민감도가 높은 루마니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낮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태블릿PC를 선보이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텔레보이스그룹(Televoice Grup)의 에볼리오(Evolio), 비주얼 팬(Visual Fan)의 올뷰(Allview), 에보다 디스트리뷰션(E-boda Distribution)의 에보다(E-Boda), 스킨미디어(Skin Media)의 우톡(Utok) 등 태블릿PC 현지 브랜드들은 2015년 태블릿 전체 매출액의 무려 66%를 차지했다.

데스크톱 시장에서도 토종 전자제품 전문 유통기업인 알텍스(Altex)와 도모(Domo)가 자체 브랜드(PB) 데스크톱 PC 브랜드인 미리야(Myria)와 엑스퍼트디지털(Expert Digital)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두 브랜드가 2015년 데스크톱 PC판매량의 20%를 차지했다.

IT 하드웨어 분야에서 토종 기업들의 성공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브랜드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의 제품 개발과 주요 전자제품 전문 소매점들과 직접 연결된 국내 제조 기업들의 존재를 꼽을 수 있다.

또 하나 IT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루마니아가 2007년에 정식 EU 회원국이 되면서 IT 분야에 EU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마니아 정부가 수립한 '루마니아 디지털어젠다 국가전략 2014~2020'에 따르면 IT 분야에 24억유로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고, 이 금액 중 8억5천만유로는 EU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IT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루마니아의 IT 분야에서 많은 한국 기업이 성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일본은 가까우면서 또 멀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와 그들은 늘 부딪히고 부대꼈다. 그 부대낌의 빈도만큼 심리적 거리는 멀어졌다.
우리와 그들의 역사는 가깝고 먼 거리를 무시로 왕복하며 공통과 차이의 문화를 엮어냈다. 가깝고도 먼 곳의 집들을 둘러보며, 여기 우리의 집들과 삶을 비춰본다.

일본 국민작가를 위한 기념관, 시바 료타로 기념관



시바 료타로 기념관 전경

시바 료타로 기념관(司馬遼太郎 記念館)으로 향한다. 이 기념관은 기념의 대상인 소설가 시바 료타로와 기념관을 설계한 건축가 안도 타다오, 오사카 출신의 걸출한 두 문화 텍스트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에 흥미롭다.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기념관 정문을 지나 기념관 내부로 접근한다. 간결하고 명쾌한 동선이 돋보인다. 정성껏 조성된 접근로를 따라 기념관의 진입로에 들어선다. 완만하게 곡선으로 돌아가는 반(半) 외부 공간인 진입로는 정원으로 시야가 열려 있다. 정원을 감상하며 조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기념의 대상으로 접근하게 하려는 건축가의 의도 때문일 것이다. 이 진입 동선에 건축가는 절반의 힘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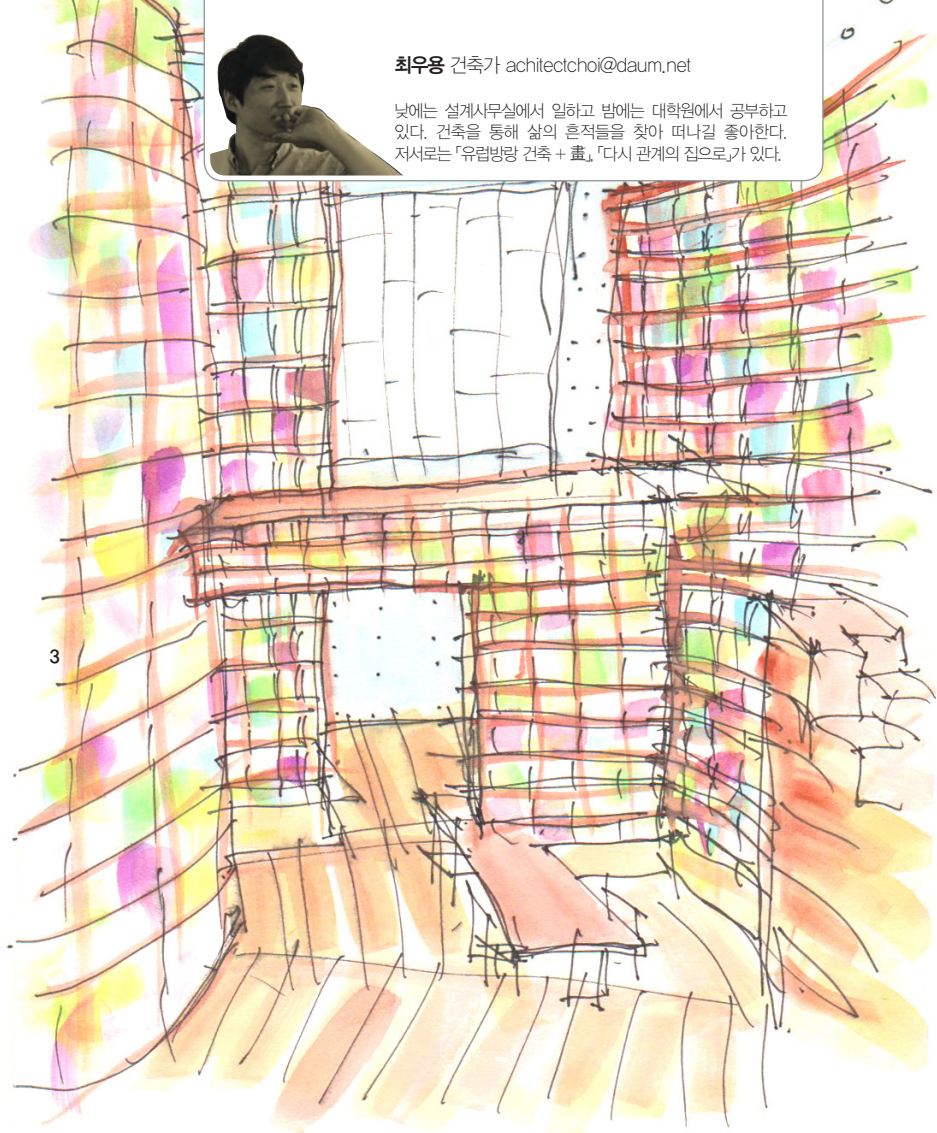
본격적인 기념관 내부로 들어선다. 물리적으로 확실히 작은 평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건축가 안도 타다오 특유의 단순한 형태와 과감한 공간 연출이 인상적이다. 세 개의 층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공간이 기념관의 중심 공간을 이루고 있다. 협소한 평면에서 세 개 층을 관통하는 공간을 만들었기에 2차원적 평면의 절대면적은 줄어들었다.



시바 료타로 기념관 외부공간







1. 시바 료타로 기념관 진입로
2. 시바 료타로의 서재
3. 기념관 내부 스케치
   기념관의 중심 공간은 서가로 채워져 있다.

최우용 건축가 achitectchoi@daum.net

낮에는 설계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건축을 통해 삶의 흔적들을 찾아 떠나길 좋아한다. 저서로는 「유럽방랑 건축 + 畫」, 「다시 관계의 집으로」가 있다.

그러나 3차원적 공간의 양감은 그 손실된 평면면적 몇 배 이상의 팽창 효과를 갖게 된다. 이 '펑' 하는 소리를 내지르는 듯한 공간에서 건축가가 쏟아부은 나머지 절반의 힘을 보게 된다. 이 '펑' 튀겨진 공간을 지배하는 분위기는 모든 벽면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는 서가와 그 책장들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장서들이다. 이 모든 책들이 작가 시바 료타로의 작품을 만들어준 훌륭한 거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름이 양분뿐 아니라 일정량의 독소 또한 가지고 있듯이, 저 많은 책들이 료타로의 편향된 역사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일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다.

시바 료타로에게 작가로서의 명성을 가져다준 「료마가 간다」는 1966년 탈고한 역사소설이다. 소설은 메이지 유신의 주변인물로 여겨졌던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를 메이지 유신의 역사적 주연과 영웅의 위치로 이동시켰으며, 이 인물을 통해 일본 메이지 시대의 영광을 그리고 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중 하나인 「언덕 위의 구름」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이지의 평균적 인간'인 3인의 이야기를 통해 러일전쟁의 당위성을 강변하고 열강의 반열에 오른 일본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 이 시기에 쓰였던 소설들에 녹아 있는 작가의 근본적인 역사관과 목표의식은 동아시아 역사를 편의적으로 해석해 찬란했던 일본의 '메이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1980~1990년대 사회발전의 극심한 정체로 의기소침해진 일본 국민들에게 진취적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그의 소설의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슬픔과 좌절에 빠진 자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그것을 위해 명백한 침략전쟁을 교묘한 방법으로 정당화하고 이웃 나라들에 정신적 상처를 주는 것은 기만적이고 저열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그의 역사관이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같은 일본 극우세력의 이론과 실천에 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의 역사관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종 한 해 전인 1995년, 시바 료타로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사과를 언급했다고 한다. 비록 다음 해에 유명을 달리한 이유로 사과에 대한 구체적 실천과 행동을 보여 주지는 못했으나, 그가 언급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는 그가 소설 속에서 보여준 편향된 역사관에 대한 반성은 아니었을까? 그의 죽음으로 후속작을 보지 못함이 안타깝다.

여기 정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바 료타로 기념관에서 일본 국민작가와 그의 작품을 이루고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

주택시장과 정부의 역할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각자 필요에 맞는 집을 사려고 얼마를 내는 것이 합당한가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평당 4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그만큼 내는 사람이 많으면 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가격형성 과정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간섭할 이유도 없다. 부자들이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는가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한 주거생활을 하는가의 문제에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수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들의 핵심은 개인과 공공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로 요약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정부 개입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자유시장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주택만은 예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과 신규 분양가가 크게 오르자 한 보수 일간지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는 것은 비정상'이니 '정부는 과열 징후가 있는 지역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 세력이 없는지 가려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통상적인 경제사회 영역에서 인정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수준이 주택시장에서는 달리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년 전 참여정부의 정책브리핑을 듣는 듯하다.

2007~2015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22% 올랐고 근로자가구소득은 평균 33% 증가했다. 잘나가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을 것이다. 이 기간 중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평균 7% 올랐지만,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3% 내렸다.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물가가 오른 데 비해 강남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지금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각자 필요에 맞는 집을 사려고 얼마를 내는 것이 합당한가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평당 4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그만큼 내는 사람이 많으면 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가격형성 과정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간섭할 이유도 없다. 비싼 자동차는 저렴한 자동차에 비해 10배 또는 그 이상 가격이 높다. 옷, 가방, 화장품, 일부 식품 등 대부분의 상품이 그렇다. 비싸고 좋은 상품을 소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고가 고급 상품을 소비할 어떤 본래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도 싼 동네가 있고 비싼 동네도 있으며, 비싼 집이 있지만 저렴한 집도 있다. 누구나 강남 새 아파트에 살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자동차나 옷, 가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왜 유독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타박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해당 지역 서민들의 전 · 월세 부담은 급증하는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집값과 임대료가 꼭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매매가격은 약보합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전세가는 쉼 없이 올랐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는 약 30만호로 전체 주택 호수의 2.1%다. 이 정도라면 강남 아파트가 비싸도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다. 참여정부는 강남 아파트 가격상승이 주변지역에 전이된다는 걱정을 했지만, 오로지 강남 아파트 가격만 오르고 다른 지역 가격은 잠잠했던 '배아픔'이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동력원이었다. 부자들이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는가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한 주거생활을 하는가의 문제에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1990년에 창간한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만나보세요.
주요 경제정책과 최신 경제동향 등 『나라경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App Store)와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KDI 나라경제라고 입력한 뒤
〈**KDI 나라경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문화융성
관광에서 시작됩니다

K Smile

CREATIVE KOREA

다시 찾아온 여름
다시 찾은 대한민국

떠나세요, 대한민국 여름은
1초도 아름답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거제 해금강]

대한민국 구석구석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Korea Travel Hotline

지금 바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을 검색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